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외교학석사학위논문

## 4·19 해석의 재해석:

『사상계』 지식인이 만들어낸 4·19 민주혁명

2014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부 외교학전공

시모카와 아야나

## 국문초록

본 연구는 1960년에 일어난 민주 혁명으로 알려지고 있는 이른바 4·19에 대한 해석을 재검토하려는 것이다. 4·19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4월 19일 서울에서 일어난 대학생이 주도한 이승만 독재정권에 대한 민주화 요구'라는 사건 해석에 획일적으로 동의하고 있고, 다양한 연구 설정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해석에 수렴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4·19에 참여하거나 목격한 자들에 의한 기록문이나 당시 신문 보도 등을 보면 4·19 참여자는 대학생뿐만이 아니라 구두담이나 거지 등 가난한 도시 빈민들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4·19가 일어나기 전인 1960년 2월부터 각 지방에서 일어난 데모는 고등학생들이 일으킨 것이었고 대학생은 거의 두 달 후인 4월 18일이 되어서야 데모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대학생 중심의 민주화 요구라는 4·19 해석은 1960년 당시 학문지 혹은 신문이 선호해서 사용하는 표현이기도 했다. 따라서 4·19에 대한 해석은 사실과 완전히 부합한다고 볼 수 없으며, 사건 초기 단계에 형성되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해석이 어떠한 의도와 과정을 거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유지되어 왔는지 밝힐 필요가 있다.

위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4·19를 주도한 자로 간주되는 대학생과, 4·19를 밖에서 보면서 잡지나 신문을 통해 사건에 적극적인 의미 부여를 시도했던 1960년 당시의 한국 지식인들에 주목하며 4·19의 해석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재검토한다. 4·19 전개 과정을 살펴보면 데모 현장에 직접 나서게 된 대학생과 그것을 밖에서 보고 있었던 지식인은 서로 교류가 있었지만 활동영역이 달랐고 그들 사이에는 연대 관계와 갈등 관계가 각각의 시기에 따라 형성되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통일 문제'를 둘러싸고 그들의 관계가 결정적으로 변화했다는 점을 보여줄 것이다. 따라서 선행연구에서는 흔히 동일시되어온 이 두 집단을 나누어서 그들의 관계 변화와 4·19 담론 형성을 설명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4·19 당시 한국 지성계는 한국전쟁 전후 북한에서 월남해온 비교적 젊은 지식인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그들은 강력한 반공이데올로기와 자유민주주의를 토대로 교육을 통한 한국의 근대화, 자세히 말하자면 민주화와 경제 발전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었다. 그들은 4·19가 발생하기

전부터 4·19에 관한 움직임을 '민주주의'라는 틀에 놓고 설명하려고 했다. 특히 당시 유력 지식 잡지였던 『사상계』는 한국 지식인들의 공론영역으로 기능하고 있었고 4·19에 관한 논고를 다수 기재하였다. 이런 점에서 『사상계』는 4·19에 대한 한국 지식인들의 시각을 이해함에 있어 중요한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상계』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던 『동아일보』, 『조선일보』 같은 일간지에서 활동한 지성계 인사들을 '『사상계』 지식인'이라고 부르고, 그들에 의한 4·19 해석 변화에 주목했다.

본 연구는 고등학생 데모가 처음 일어난 1960년 2월부터, 1960년 4월을 거쳐서 1961년 5월 16일 군사 쿠데타가 일어날 시기에 4·19에 관한 초기 담론이 어떻게 생산되었는지를 4·19의 전개 과정과 함께 보고, 그 후 박정희 정권 초기에 일어난 대표적 반정권 운동이었던 1964년 한일협정 반대운동과 1969년 3선개헌 반대운동에서 4·19 초기 담론이 어떤 변화와 연속성을 보여줄 것인지에 중점 두었다.

4·19란 사실 혼란스러운 한국 사회에 공산주의적 색채가 나타날 우려 때문에 '민주주의'라는 요소로 사건을 포장하려 한 『사상계』 지식인들의 국내 위기 극복을 위한 전술이었다. 1960년 중반까지는 『사상계』 지식인들이 마련한 4·19 해석에 대학생들은 동의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되는 데모를 통해 오히려 사회 혼란을 일으킨 주범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심지어 대학생들은 '통일 문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사상계』 지식인들과의 관계는 악화 되었고 대학생들의 행동과 4·19 초기 규정 사이에는 괴리가 생기게 되었다. 오히려 5·16 이후 박정희 정권과 대립함에 있어서 『사상계』 지식인들이 마련한 4·19 초기 담론이 반정권 운동의 유력한 기반이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봤을 때 4·19는 냉전체제 하의 자유민주주의진영과 공산주의진영의 대립이라는 국제 상황 속에서 국내 혼란을 막고 한국의 근대화를 달성하려고 한 『사상계』 지식인들이 만들어낸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민주주의를 추구한 선구적인 움직임이라는 식으로 해석되고 대학생을 민주주의의 영웅으로 무조건 평가하는 현재 시각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점을 제의한다.

주요어: 4·19, 5·16, 민주주의, 반공, 사상계, 학생운동, 통일 문제, 냉전  
학번: 2011-22813

## 목차

I. 서론	1
1. 문제 제기	1
2. 선행연구 검토	4
3. 본 연구의 의의	9
4. 연구 방법과 자료활용	12
1) 연구시기 설정	12
2) 연구 방법	13
3) 『사상계』	13
4) 『동아일보』 및 『조선일보』	16
5) 대학생 관련 자료	17
5. 논문 구성	18
II. 4·19 초기 담론 형성기	
-『사상계』 지식인과 대학生の 연대	19
1. 고등학생 데모와 구호 "학원에 자유를 달라"	19
2. 제1, 2차 마산사건에서의 분노의 폭발과 폭력화	28
3. 대학生の 출현과 '4·19'의 탄생	33
III. 4·19 초기 담론의 혼란기	
-『사상계』 지식인과 대학生の 연대 쇠퇴	48
1. 데모의 만연과 '4월혁명'으로의 전환	48
2. 통일 문제에 대한 대학生の 관심	58
3. '실패한 혁명'과 다시 부각된 '4·19'	62
4. 통일 운동의 현실화와 5·16 발생	65

IV. 5·16의 발생과 4·19 초기 담론의 계승 -지식인과 대학생의 연대 부활 .....	69
1. '5·16'에 흡수된 '4·19' .....	69
2. 한일회담 반대운동에서 재현된 '4·19' .....	74
3. 3선개헌 반대운동에서 계승된 '4·19' .....	84
V. 결론 .....	89

## 참고문헌

### 표 목차

<표 II-1> 1960년 2월 28일부터 3월 14일까지 각지 고등학생 데모에서 사용된 구호 .....	23
<표 II-2> 1960년 4월 19일 데모에서 사용된 구호 .....	39
<표 IV-1> 1964년 3월 24일부터 3월 30일까지 한일회담 반대운동에서 사 용된 구호 .....	75
<표 IV-2> 1964년 4월 20일, 21일 한일회담 반대운동에서 사용된 구호 .....	83

# I. 서론

## 1. 문제 제기

“폭력은 안 된다. 부서서는 안 된다.”고 목이 터지도록 외쳤지만 어둠 속에서 나를 향해 날아오는 돌을 피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미 우체국 앞에는 한 대의 차가 불타고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불을 본 시위대는 흥분하여 경찰서 마당에 주차해 있는 차들을 마구 부셔대기 시작했고 일부 시위대는 현관문을 열고 경찰서 안으로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서 쏘는 총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땅, 땅, 땅’하고 총성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sup>1)</sup>

- 1960년 4월 11일, 마산, 당시 21세, 1994년 인터뷰<sup>2)</sup>

사람들은 거리를 메우고 있었으나 학생들같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산발적으로 모여들었던 사람들은 별로 말도 없이 그저 침울한 표정으로 흘러가는 대로 걸어갈 뿐이었다. 그러다가 학생들이 구호를 외치면 옆에서 따라서 박수도 쳐 주고 하는 정도였다.<sup>3)</sup>

-4월 19일 서울 광화문 방면, 경찰 발포 전,  
당시 명성여고 2학년 학생 일기

(19일)그때 흥분한 시민들이 경찰을 공격하려 하자 우리 고대학생들이 태평로 파출소를 보호하여 주어 경찰관이 파출소에 그냥 남아 있었다...(중략)...태평로 파출소를 보호하고 있던 고대생들도 다른 학생과 함께 학교로 돌아가고 나자, 성난 시민들이 파출소를 습격하여, 그곳에 있던 경찰관이 발포를 하면서, 시청 건너편에 있는 군부대로 피신하는 것을 목격하였다.<sup>4)</sup>

-4월 19일 태평로, 당시 고대 법학과 학생, 동기회지

---

1) 3·15의거기념사업회 편, 『(1960) 우리는 이렇게 싸웠다 : 3.15의거 증언록』 (창원 : 3·15의거기념사업회, 2010), p287.

2) 날짜, 장소 등 상세 정보는 논자에 의함.

3) 이재영, 『4·19혁명과 소녀의 일기』, (해피스토리, 2011), p159.

4) 홍영유 편, 『4월혁명통사』, (천지창조, 2010), p206.

‘양아치’란...(중략)...정처 없이 부랑(浮浪)하는 소년, 구두닦이, 신문 파는 아이들의 불량성에 치중한 호칭이다. 3.15마산 데모, 4.19이래의 서울 부산 등지의 데모에 이 소년들이 단단하게 한 역할을 한 것은 우리들이 본 그대로다. 남루한 옷을 입은 소년들이 스크럼을 짜고 거리를 행진하고 트럭이며 지프차며를 징발해선 타이아가 터지도록 가득 타고 질주하며 기세를 올렸다.<sup>5)</sup>

1960년에 일어난 이른바 '4·19'는 한국 민주 정치사에서 크나큰 평가를 받고 있다. 학계에서도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계속 연구되어왔던 사건인데도 그 내용에 있어서 ‘1960년 4월 19일에 서울에서 일어난 대학생들이 주도한 이승만 독재에 대한 민주화 요구’였다는 천편일률적인 너무나 강고한 통설이 존재하고 있다.

대학교에서 사용되어온 한국정치사 개론서에서도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현대사』에서는 "일련의 학생중심의 운동이 국민의 성원을 받아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하에 10여년 계속되어 온 통치체제를 전복시키고, 자유의 질서를 되찾을 기회를 제공하였다"<sup>6)</sup>고 4·19를 표현하였다. 학문서 뿐만 아니라 4·19관련 시설들에서도 유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4·19혁명기념도서관’ 홈페이지에서는 4·19가 “민족정기의 전통을 이어받은 청년학도의 희생을 각오한 용기에 전 국민이 거족적으로 호응하여 우리민족에게 새 힘과 희망을 가져다 준 민권수호운동이었다”고 하고 “민주헌정사의 성전적(聖典的) 지표”<sup>7)</sup>였다고 한다. 또 북한산 수유리에 위치한 ‘국립4·19민주묘지’ 홈페이지에서는 4·19를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초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불의의 독재권력에 항거한 혁명”<sup>8)</sup>이라고 표현한다.

하지만 앞부분에서 제시한 1960년 당시 상황을 상기해줄 회고록들을 보면 반드시 대학생만이 4·19의 주역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실 대학생이 주도했다고 간주된 4월 19일에 앞서서 1960년 2월

5) ‘(공론) ‘양아치’도 이 나라의 아들딸들이다’, 『국제신보』, 1960년 5월 14일.

6)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현대사』, (탐구당, 1882), p244.

7) 4·19혁명기념도서관, <http://library.419revolution.org/>, (2013년 11월 18일 최종 접속).

8) 국립4·19민주묘지 홈페이지, <http://419.mpva.go.kr/>, (2013년 11월 18일 최종 접속).



28일에는 고등학생 데모<sup>9)</sup>가 시작했고 3월 15일과 4월 11일에는 마산에서 대규모 민중 데모가 일어났다. 그것부터 1주일, 고등학생 데모부터 약 3주일 후인 4월 18일에 드디어 고려대 학생들을 선두로 대학생 데모가 일어났다. 4월 19일에도 대학생만이 데모에 나선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데모에 많이 참여했고 거기서는 구두담이나 영세상인, 도시 룸펜 같은 빈민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본 연구는 당시 상황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대학생 중심의 4·19 담론이 어떻게 형성되어왔는지를 재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4·19에 대한 해석의 합의가 어떠한 의도로 이뤄졌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예를 들어, 1950년대부터 언론이나 학문의 장에서 활동한 『사상계』 지식인<sup>10)</sup>들은 4·19에 관련된 움직임을 1960년 4월 19일 이전부터 이미 '민주화' 그리고 '자유주의'와 연결시키면서 설명하였다. 그들의 해석이 오늘날 4·19 통설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은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민주화를 시도하였다고 전제하고 있는데 1960년 2월의 운동 초기에 사용된 구호들을 보면 그들이 처음부터 부정선거에 분노하고 민주주의 회복을 요구했다고 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학생들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상계』 지식인 쪽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독재 정권, 부정선거에 분노한 데서 온 민주화 요구'라는 틀에서 설명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한국 사회는 전체적으로 반공 분위기가 지배하고 있었고, 자유민주주의가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졌던 것이 사실이다. 4·19를 전후하여 각 지역에서 학생 데모가 일어났고 그것이 민주화와 관련이 있었던 것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4·19를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단편적인 이해에 머무를 위험이 있다. 사실 1960년 후반부터 1961년 5월의 군사 쿠데타 발생까지 『사상계』 지식인과 대학생은 '통일 문제'를 두고 대립하게 되었고 '민주화 요구'라는 4·19 담론에 친북적 남북통일이

9) '데모'라는 단어는 '시위(示威)'를 뜻하는 영어 '데몬스트레이션(demonstration)'의 일본식 줄임말이고 한국에서 192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널리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당시 잡지나 신문 기사에서 '데모'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본문 중에서도 '데모'라는 단어로 통일하도록 한다. 천정환, 김건우, 이정숙 공저, 『혁명과 웃음』, (서울: 엘피, 2005), p76.

10) 일반적으로는 1960년 당시 지식인과 대학생을 확연하게 구별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4·19의 주체라고 인식된 대학생과 그 배후에서 적극적 사건 규정을 행한 자들을 구분하고자 한다. 특히 잡지 『사상계』 지식인이라는 호칭은 『사상계』 연구자인 이용성과 김건우도 사용한 바 있다. 이용성, "『사상계』의 지식인과 잡지이념에 대한 연구", 『출판잡지연구』, 제5권 제1호, (출판문화학회, 1997), p65; 김건우, 2003, p22.

라는 요소가 포함되는 모순적 현상이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4·19 담론은 초기에 나타난 '독재 정권, 부정선거에 분노한 데서 온 민주화 요구'라는 명제를 유지하면서 대학생은 '4월의 영웅'으로 살아남고 있다.

즉 대학생 주도, 그리고 민주화라는 현재 4·19를 규정하고 있는 요소들은 운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여곡절하면서 현재 모습으로 정착된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해석이 오늘날 4·19를 보는 틀을 너무나 일찍 규정해버린 것이 아닐까라는 질문이 본 연구의 시작점이다. 그러한 규정은 4·19의 해석을 단편적으로 협소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4·19 해석을 분석하는 또 다른 해석이 요구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학생 데모의 시발점인 1960년 2월부터 4·19에 대한 규정 및 해석이 어떻게 생산되어 왔는지 그 과정을 알아내는 것이다. 적극적으로 4·19에 의미를 부여한 『사상계』 지식인, 그리고 운동의 주도자로서 여겨지는 대학생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며 4·19에 관여했는지, 즉 『사상계』 지식인이 어떻게 4·19를 규정하였고 그것이 대학생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나아가 그러한 규정이 현재 4·19 통설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밝히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 2. 선행연구 검토

지금까지 4·19에 관한 수많은 연구가 있었다. 4·19는 역사나 정치, 경제 분야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4·19에 관한 연구를 해 온 만큼 연구 내용의 설정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의외로 어느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4·19의 배경에 대한 연구는 주로 한국전쟁 이후의 이승만 정권시기부터 1960년 4월 19일 이전까지의 시기를 다루고 있다.<sup>11)</sup> 그리고 4·19의 전개 과정에 초점을 맞춰서 1950년대부터 1960년 4월 19일을 거쳐, 1961년 5·16 이전 까지를 다루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sup>12)</sup> 주목해야 할 것은 '4·19'라는 날짜가 마치 사건의 정점처럼 다루어

11) 예를 들어 『4월혁명론』(김종오 외 지음, 서울: 한길사, 1983)에서는 4명의 학자가 4·19의 배경으로 이승만 정권하에서의 사회경제, 계층구성, 지성계 등을 연구하고 있다.

12) 일반적으로 4·19라고 하면 1960년 2월의 고등학생 데모나 3월의 마산사건을 시작하여 4월 26일의 이승만 하야까지를 언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4·19의 자료

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특정한 날짜인 4월 19일이 왜 이 사건을 상징하는 대명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다음으로 4·19의 무대에 관한 논의를 보면 4·19는 1960년 2월 처음으로 지방의 고등학생들에 의해서 전국으로 확장되다가, 4월 18일에 이르러서는 서울의 대학생들에 의해 데모가 확대된다. 이러한 전개과정의 어느 시점에 주목하는지에 따라서 그 연구대상이 달라진다. 지방 데모에 주목한 연구나 증언록도 있지만,<sup>13)</sup> 주로 4월 19일을 사건의 정점으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서울 중심의 연구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4·19의 주체를 밝히고자 하는 연구는 오랫동안 '대학생'이라는 시각이 독점적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은 학생과 지식인 사이에 특별한 구분을 하지 않아 마치 두 집단이 동일한 지식인 집단인 것처럼 보이는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sup>14)</sup> 그런가 하면 '학생'이라고 할 때에도 거의 '대학생'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요컨대 왜 지금까지 대학생만이 독점적인 4·19의 주인공이자 연구의 대상이 되어왔는지에 주목하는 연구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대학생에 국한된 연구 경향을 개선하려는 시도는 있지만<sup>15)</sup> 초기의 대상 설정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문도 제기

---

집인 『4월혁명 사료총집』(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4월혁명사료총집발간위원회 편, 서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0, 총 8책)도 1960년 2월 28일 대구 고등학생 데모부터 4월 26일 이승만 하야까지를 자료 수집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시 광화문에 위치한 서울역사박물관에서 2013년 4월 9일부터 28일까지 열린 전시회 '동아일보와 함께 다시 보는 4.19'는 1960년 4월 12일 김주열 학생의 시체 발견부터 시작하여 4월 26일 이승만 하야까지를 대상 시기로 설정하였다. 서울역사박물관 홈페이지, [http://www.museum.seoul.kr/www/board/NR\\_boardView.do](http://www.museum.seoul.kr/www/board/NR_boardView.do), 2013년 11월 22일 최종 접속.

13) 1960년 4월 18일 이전의 1960년 2월 28일 대구 학생 데모를 다룬 『2·28 민주주의의 역사성과 세계성』(2·28 민주주의 40주년특별기념사업회 편, 대구: 2·28 민주주의 40주년특별기념사업회, 2000.), 3월 15일 제1차 마산사건 당시의 데모 참여자, 유족들의 증언록으로서 『(1960) 우리는 이렇게 싸웠다 : 3.15의거 증언록』(3·15의거기념사업회 편, 창원: 3·15의거기념사업회, 2010) 등이 있다.

14) 김동춘과 박태순의 연구도 "60년대는 무엇보다도 학생과 지식인의 시대였기 때문이다."고 하고 있는데 이 두 집단을 구분하지 않고 학생(여기서는 실질적으로 대학생)을 지식인의 일부로 간주하여 민중과 대치시키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박태순, 김동춘 공저, 『1960년대의 사회운동』, (까치, 1991).

15) 예를 들어 김미란의 연구에서는 4.19가 이제까지 대학생에게만 지나치게 평가를 두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그 이유를 당시 언론 보도나, 운동에 참여한 대학생들이 나중에 쓴 수기 등이 보헌투쟁이라는 4.19의 성격을 지키기 위해 폭력행위의 주된 주체였던 학생외의 민중들의 참여 흔적을 적극적으로 삭제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김미란, 「'청년 세대'의 4월혁명과 저항 의례의 문화정치학」, 사상계연구팀 편, 『냉전과 혁명의 시대 그리고 『사상계』』, (서울: 소명, 2012).

되지 않고 있다.

이상을 보면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4·19에 대해 '4월 19일에 서울에서 대학생들이 일으킨 것'에 거의 동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머지는 4·19란 도대체 무엇이었는데의 부분이 남게 된다. 거의 대부분의 4·19 연구가 목표로 하고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관해서도 거의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는 형편이라고 할 수 있다. 김일영, 그리고 박태순과 김동춘은 시간 흐름에 따라서 4·19의 의의를 밝히려는 연구에 변화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sup>16)</sup> 특히 후자는 근대화이론 연구, 민족주의적 연구, 변혁운동 연구로 된 세 가지 구분을 제시하고 있다.<sup>17)</sup> 그런데 이 세 가지 구분이 얼마나 타당할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로 '근대화이론'은 4·19를 서양발전모델의 한 과정으로 파악하려는 시각이다. 이승만 독재하의 한국은 전근대적이고 비서양적인 정치·경제·사회 상황이었으며, 이승만 정권과 그 주변에 속한 자들은 프랑스혁명의 절대군주제 하에서 특권적 보호를 받은 자들에 비견된다. 그러한 전근대적 상황에서 한걸음 벗어나려는 발전의 시도가 4·19에서 '민주화 운동'이라는 형태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근대화이론은 박정희를 비롯한 5·16 세력에 의해 이용당한 점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근대화'라는 말을 박정희 장기 독재정권이 이용했다 하더라도 이 근대화이론에 속한다는 연구들이 주장하고 있는 4·19가 '이승만정부의 독재를 부정하고 민주화를 추진했다'는 평가는 계속 변하지 않고 살아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이 근대화이론이 비교적 초기에 나오고 그 한계를 지적 받았다고 해도 반복해서 비슷한 연구 주장이 제시되고 있는 것을 볼 때 박태순과 김동춘의 시간 축에 따른 구분 방법이 타당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민족주의적 시각'은 4·19를 민족주의 또는 민족사 맥락에서 이해하려는 시각이다. 앞에서 본 '근대화이론'이 서구 세계의 모델을 무조건 한국에 적용한 데에 한계가 있었다 한다면, 이 시각은 오히려 한국

---

16) 김일영은 4·19 연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보고 있다. 하나는 4·19를 서구의 고전적 시민혁명인 부르조아민주주의혁명으로 해석한 연구, 또 하나는 근대민중운동사의 흐름 속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라고 한다. 박태순과 김동춘의 구분 방법은 이러한 김일영의 구분 방법을 기반으로 시기별로 구분하려 한 것이라고 이해한다. 김일영, 「4·19혁명의 정치사적 의미」, 이종오 외 지음, 1983, pp149-173.

17) 박태순, 김동춘, 1991, pp97-109.

이 겪어온 식민지배 역사나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사회 현상을 분석하려는 시도에서 나온 것이다. 이 연구가 활발해진 배경에는 1960년대부터 일어난 제3세계 국가들의 독립운동과 같은 세계사적 흐름이 있었다.

민족주의적 시각에 입각한 대표적 연구로 간주된 강만길의 연구<sup>18)</sup>는 4·19가 민주운동으로 시작해 1960년 8월의 제2공화국 성립 이후 급속히 민족운동으로 변해갔다고 한다. 이것은 분단시대의 민중운동으로서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민족주의적 시각에서 보면 4·19는 이승만 하야와 제2공화국 수립으로 완결된 것이 아니라 그 때부터 민주주의나 통일운동 같은 혁신적 움직임으로 보는 긍정적 평가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동시에 5·16의 반민족성과 반민중성 비판도 가능해졌다고 할 수 있다.<sup>19)</sup>

하지만 4·19가 일어난 1960년 당시에도 1919년 3·1 만세운동이나 1929년 광주학생운동과 같은 일제 하에 일어난 이른바 민족적 저항 운동과 4·19를 연결시키면서 이야기하는 논조는 이미 강했고 불특정다수의 불확실한 '민족'을 말하면서도 민족의 대표는 '대학생'들이었고 민족이 나가야 될 길은 '민주화'나 '자유'였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민족주의적 연구와 앞에서 언급한 근대화이론의 차이는 박태순과 김동춘이 말하는 것보다 불명확해진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등장한 '변혁운동 연구'는 4·19는 사실 다양하고 복합적인 민중들이 일으킨 운동이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 시각은 한국의 민주화와 국민들의 정치참여의 확장으로 인해 등장한 것이고 여태까지 검토되지 않았던 역사자료들을 사용하거나 같은 역사 자료를 새로 해석해 4·19의 새로운 측면과 의미를 보여주려 하였다.<sup>20)</sup>

하지만 이 시각도 역시 4·19가 일어난 1960년에 이미 존재했던 시

18) 강만길, 「4월혁명의 민족사적(民族史的)의미」, 강만길 외 지음, 『4월혁명론』, (한길사, 1983).

19) 그 외에는 서중석의 4·19 이후에 일어난 반미자주화운동과 통일운동의 전개과정을 극우반공체제와 혁신세력 및 청년·학생이 내세운 민족주의운동의 대립으로 이해하려는 연구를 내고 있다. 서중석, 「4월혁명운동기의 반미·통일운동과 민족해방론」, 1991년 가을, 『역사비평』, 제14호.

20) 박태순과 김동춘의 저서에서는 구체적인 연구는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박태순과 김동춘이 제시한 정의에 따르면 사상계연구팀 편 『냉전과 혁명의 시대 그리고 『사상계』』(서울: 소명, 2012)등이 이 범주에 해당될 것이다.

각이라고 할 수 있다. 『사상계』에서는 당시 일반적인 용어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중'이라는 용어를 통해 4·19를 일으킨 것은 민중들이고 그 대변인이 '대학생'이었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민중들이 원했던 것은 한국의 '민주화'나 '근대화', '자유'였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세 가지 구분들의 자세한 내용을 보면 '근대화'이든 '민족주의'이든 어떤 말을 쓰는지 상관없이 4·19를 '이승만 독재에 대한 대학생들 주도의 민주화 요구'였다고 보는 데에 있어서는 명확한 차이가 없다. 가장 최근에 나온 '변혁운동 시각' 조차도 이 명제를 대치하기보다는 새로운 주제들을 부각시킬 뿐이다. 4·19 이후의 공론에서는 '민주주의'가 '근대화'이면서도 '민족'이 가야 될 길이었고, '근대화'를 위한 4·19는 같은 '민족'인 '민중'들이 일으킨 것이었다는 식으로 명확한 개념으로 구분할 수 없다. 4·19를 다양한 말로 설명하면서 '이승만 독재에 대한 대학생 주체의 민주화 요구였다'는 명제를 반복하게 생산한 것이다.

심지어 이러한 4·19 초기 담론은 비교적 이른 시기에 생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1960년 4월 19일에 서울에서 일어난 대학생들의 이승만 독재에 대한 민주화 요구'라는 표현은 1960년 4월 19일 이후의 신문 보도나 『사상계』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표현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동춘과 박태순의 연구처럼 4·19 담론을 시기별 그리고 주제별로 나누려고 하는 시도는 억지로 구분을 지은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

이러한 내용을 검토하였을 때, 하나의 의문이 생긴다. 4·19에는 다양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1960년 4월 19일에 서울에서 일어난 이승만 독재에 대한 대학생 주도의 민주화 요구였다'는 명제만이 오랜 시간동안 계속 반복되고 유지되어왔는가'라는 것이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왜 1년 이상 지속된 현상이었음에도 4월 19일이 이 사건의 대명사적인 호칭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왜 대학생이 운동의 핵심적 주체로 간주되어왔는지, 왜 4·19가 독재에 대한 민주화운동으로 인정을 받아왔는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4·19의 초기 담론 형성과 그 후의 경과를 알아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 3. 본 연구의 의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4·19 연구들은 구체적인 설명 없이 대학생을 주체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며, 대학생과 그 배후에서 사건 규정을 위해 움직이고 있던 집단이 존재했다고 전제한다.

4·19 초기 담론 형성에 중대한 역할을 한 자는 데모에 직접 참여하고 나중에 '4·19 세대'라고 부르게 된 대학생들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그런데 기존연구들은 4·19의 주체로 간주된 대학생을 단순히 지식인으로 규정해 두 집단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강준만은 4·19를 “주인 없는 혁명”<sup>21)</sup>이라고 하였고 대학생들의 자율적 운동 주체로의 역할을 의문시하였다. 그 이유는 임대식의 연구<sup>22)</sup>가 밝힌 바처럼 1960년 4월 25일 대학교수 시위에서 처음으로 ‘이승만 정권 물러나라’는 공식적 주장이 나온 것이고 대학생들은 “소박한 분노를 표출하는 차원에 머물렀을 뿐”<sup>23)</sup> 우발적으로 데모에 참가하게 된 것이지 처음부터 적극적인 주체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옳다면 대학생들을 운동에 머무르게 한 뭔가가 있었다는 것이다.

김건우의 연구<sup>24)</sup>는 잡지 『사상계』를 중심으로 연결망을 구축하고 있었던 1960년대 지식인들이 당시 대학생들에 큰 영향력을 미쳤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하듯이 지금 널리 알려져 있는 4·19 통설의 원형으로 보이는 글들은 당시 신문보도나 『사상계』 같은 지식계 잡지에서 찾아낼 수 있다. 그것은 사실 1960년 4월 이후 ‘4·19’라는 단어를 처음 만들어내고 추후 적극적인 의미 부여를 시작한 자들은 대학생이 아니라 지식인들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러한 지식인 집단과 대학생 사이의 관계는 1960년 4월부터 계속 변해간 유동적인 것이었다. 유창민의 연구<sup>25)</sup>는 4·19 이후 부각된 대학생을 『사상계』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에 주목하여 두 집단 간의 대립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4·19 현장에서 움직이고 있었던 대학생들과 그것을 밖에서 보고 있었던 자들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21) 강준만, 『한국 현대사 산책 1960년대편』, 제1권, (서울: 인물과 사상사, 2004), p23.

22) 임대식, 「1960년대 초반 지식인들의 현실인식」, 『역사비평』, 제65호, (2003년 겨울).

23) 강준만, 2004, pp23-24.

24) 김건우, 『사상계와 1950년 문학』, (소명출판, 2003).

25) 유창민, “1960년대 잡지에 나타난 대학생 표상-사상계의 대학생 담론을 중심으로-”, 『겨레어문학』, 제47권, (겨레어문학회, 2011).

판단된다.

이러한 집단을 이 글에서는 『사상계』 지식인이라고 칭하고자 한다. 그들은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사상계』를 중심으로 여러 신문, 잡지들을 통해 지식 생산을 주도하고 있었던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4·19 데모에 직접 참여한 자들이 그들을 '기성세대'라 비판한 영상도 보이기 때문에 이른바 '4·19 세대'와도 구별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연구에서 동일시되어 온 대학생과 『사상계』 지식인으로 구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 필요성은 두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 번째로 4·19에 관하여 대학생들은 선언문이나 결의문을 통해 주장을 드러냈고 추후 자신들의 자율성을 강조해 '4·19세대'라 부르게 되는데, 그들의 주장은 이미 지식인들이 『사상계』나 신문에서 발표한 글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걸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부분이 기존연구에서 대학생과 지식인이 같은 집단으로 간주된 이유이기도 하다. 시간 축을 살펴보면 먼저 지식인이 발표한 논문에서 제시된 논의가 나중에 대학생들에서도 나온다는 점에서 지식인 집단이 대학생 집단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대학생들이 지식인들과 거리를 두고 독자적인 주장을 했던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대학생들이 지식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는 일종의 시도였다고 본다.

그리고 『사상계』 지식인들은 잡지 『사상계』를 중심으로 활약하고 있었다. 김건우는 당시 한국 지성계에서 "무엇보다 큰 영향력을 행사하던 잡지가 『사상계』였다는 사실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sup>26)</sup>고 하였고 이성용은 1950년대와 1960년대의 지식계 흐름은 "대표적 지식인 잡지 《사상계》에 압축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sup>27)</sup>다고 한다. 실제로 『사상계』에는 사상계 소속의 기자만이 아니라 대학교수, 신문기자 등 지성계의 여러 인사들이 기고하고 좌담회 같은 기획에 참여하는 등 그 자체로 공론 영역이었다.<sup>28)</sup> 또한 1950년대 후반에는 "《사상계》를 들고 다녀야 대학생 행세를 하던 풍속"<sup>29)</sup>이 있었고 "중고생까지도 조속한 학구파는 그것을 사서 새겨

26) 김건우, 2003, p46.

27) 이용성, 1997, p56.

28) 예를 들어 1960년 4월 당시에 조선일보 논설위원이었던 고정훈 같은 사람도 『사상계』에 기고를 했다. 고정훈, "4·19 비화(秘話)", 『사상계』, 제158호, (1966년 4월).

29) 박경수, 『재야의 빛 장준하』, (해돋이, 1995), p293.



읽느라 애를 쓰는 형편<sup>30)</sup>이었다. 4·19 데모 현장에서도 대학생은 『사상계』를 출판한 사상계사 앞에서 "그 깃발을 보고는 움직임을 멈추거나 또는 그쪽을 향해 올라다보며 뜨거운 환호를 올렸다"<sup>31)</sup>는 일화도 있다.

또 『사상계』에는 주로 대학교수가 투고한 논문이나 사상계사 기사들이 쓴 글들만이 실렸고 대학생 투고문은 독자 투고란을 빼고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대학생들과 일정 거리가 있는 독점적 공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사회상승을 위한 교육열이 넘치는 상황이었고 또 도시화에 따른 도시인구 집중 속에서 대학교 수 및 대학생 수는 증폭되었다.<sup>32)</sup> 이처럼 늘어난 대학생들이 선호해서 구했던 『사상계』에서 활약하고 있었던 지식인들은 대학생 그룹에 속하지 않고 오히려 강연회 등을 통해서 수많은 대학생들을 계몽시키는 입장에 있었다. 즉 본 논문에서 살펴보려는 『사상계』 지식인은 운동에 참여한 무수의 대학생보다 훨씬 소수 집단이었고 더 선별적 지식 그룹이었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제2장에서도 언급하듯이 비교적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대학생과 『사상계』 지식인이었지만 1960년 4월 이후 그들 사이에 갈등 양상이 보이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만약 두 집단을 동일시하게 되면 이러한 갈등의 배경에 무엇이 존재했는지 설명하지 못할 뿐더러 4·19 담론이 어떤 흐름 속에서 형성되었는지도 파악하기 어려워진다. 유창민의 연구<sup>33)</sup>는 4·19 이후 부각된 신세대인 대학생과 구세대인 지식인들이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식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논의가 세대적 대립에 머물고 있고 본 논문에서 논의할 '통일 문제'를 둘러싼 대립이나 혹은 5·16 이후의 담론 변화까지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 두 집단을 4·19의 주체<sup>34)</sup>로 간주된 대학

---

30) 박경수, 1995, p290.

31) 박경수, 1995, p290.

32) 1950년대 대학의 급진한 팽창인 '대학 불'에 관한 연구로서 서은주, "제도로서의 "독자"; 1950년대 대학과 "교양" 독자"(『현대문학의 연구』, 한국문학연구학회, 제40권, 2010)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사상계』가 대학생 사이에서 인기를 받게 된 "학생에게 보내는 특집"에 대해서도 길게 언급되고 있다.

33) 유창민, 2011.

34) 여기서 '주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현재까지 대학생이 4·19의 대명사적 존재로 간주되어왔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사실 어떠한 운동에 주체가 있다는 사고방식은

생과, 대학생과 4·19의 관계를 만들어내려고 한 『사상계』 지식인으로 구분하려 한다. 4·19 현장에서는 사실 수많은 빈민들도 있었는데 대학생이 대표적 주체로 간주된 과정에 주목하고 그러한 '주체'를 만든 것은 『사상계』 또는 신문 같은 언론계에서 활약한 『사상계』 지식인들이었다고 본다. 『사상계』 지식인들이 바라보는 4·19의 대학생 상에 어떠한 변화와 모순이 있었고, 어떠한 방법으로 그러한 문제들을 해소해나가려고 했는지를 밝힘으로써 4·19 담론의 형성 과정을 재검토하려고 한다.

#### 4. 연구방법 및 자료활용

##### 1) 연구시기 설정

연구시기는 대략 1960년 2월부터 1969년 3선개헌 시기까지로 설정한다. 먼저 1960년 2월을 연구시기의 시작으로 설정한 이유는, 4·19의 큰 요인으로 간주되는 제4대 대통령 및 제5대 부통령 선거에 있다. 야당인 민주당 연설장에 고등학생들을 나가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자유당이 실시한 일요일 강제 등교를 계기로 1960년 2월 28일 대구의 고등학생들은 처음으로 데모를 일으켰다. 이후 대구의 데모를 시작으로 고등학생 데모가 전국적으로 파급되었다. 이어 1960년 3월 15일 선거 당일 제1차 마산사건이 일어났고, 4월 11일 고등학생 김주열의 시체가 바다에서 발견되자 제2차 마산사건이 일어났으며, 4월 18일 고려대 학생 데모, 4월 19일 서울 데모로 단계적으로 확장되어갔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1960년 2월은 데모가 시작된 시기로 4·19에 이어지는 한국 사회의 분위기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한편, 1969년까지를 보는 이유는, 1961년 5월 16일의 군부 쿠데타를 계기로 4·19 자체는 명목상 한 번으로 끝났지만 그 후에 일어난 수시의 대학생 운동 속에서 '4·19'가 다시 나타나 운동의 명분으로 재생산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이다. 5·16이 발생한 당시는 그것도 4·19와 같은 '혁명'이라고 불렸고, 지금과는 달리 4·19와 5·16은 상이한 것이 아니었다. 하

---

사회주의적인 시각이라 사용 방법에 주의해야 하지만 논의의 편의상 본 연구에서는 '주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로 했다.

지만 점차 그러한 해석에 변화가 나타나고 4·19를 지지하는 세력은 5·16을 부정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5·16 이후에도 4·19 해석과 담론 형성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에서 이 시기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박정희 정권하에서 일어난 대표적인 운동으로서 1964년의 한일협정 반대운동과 1969년 3선개헌 반대운동이라는 약 4, 5년 간에 일어난 사건들이 있었고, 그 속에서 4·19에 관한 담론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보려고 한다.

## 2) 연구방법

연구방법의 측면에서는, 1차 자료를 면밀하게 조사·해석함으로써 사건의 객관적 사실 및 해석을 추적할 뿐만이 아니라 참여자들의 경험, 감정까지 추적하는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특히 후자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당시 4·19 안에서 사용된 구호나 선언문, 결의문, 『사상계』 지식인들에 의한 논문이나 신문·잡지 기고들을 조사하며, 특히 1960년 4월부터 1961년 5월까지 그것들이 하루하루 어떻게 변화해갔는지를 추적함으로써 4·19 안에서 벌어진 변화를 밝히려고 한다. 1961년 이후에 관해서는 1960년대에 일어난 4·19에 비견될 대표적 반 정권 운동인 1964년 한일협정 반대운동과 1969년 3선개헌 반대운동에 초점을 맞춰서 운동에 사용된 구호나 결의문, 『사상계』 지식인들에 의한 사건 규정이 앞에 그것과 어떤 연속성과 차이를 보여줄 것인가를 밝힌다.

## 3) 『사상계』

4·19 당시 한국 지식계의 특징은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남북에서 일어난 인구 이동에 따라 한국 지식계에도 변화가 있었다는 점이다. 월남해 온 30대의 비교적 젊은 월남 지식인들이 주도적인 입장을 잡게 된 것이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민족의 근대화'를 목표로 내세워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공유한 '자유' 혹은 '민주' 같은 이념을 목표로 설정하였다.<sup>35)</sup> 여기서 말하는 근대화라는 무엇이나면 "민주주의 실현", "민족 통일", "경제 발전",

---

35) 김건우, 2003, p22.

"새로운 문화의 창조" 등이었고, 특히 "민주주의 실현"이 다른 항목의 대전제였다.<sup>36)</sup> 뒷장에서 다시 논의하겠지만 4·19 이후 대학생들이 '통일 문제'에 관심으로 보여준 것에 대해 『사상계』 지식인들이 거부감을 느낀 이유도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전제를 대학생들이 철저히 지켜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 하나의 당시 지식계의 중요한 특징으로서는 지배적인 '반공'이 데올로기를 들 수 있다. 당시 지식계에서는 '반공'은 '민주주의 실현'과 함께 너무나 당연한 전제였고 그것 자체가 논쟁이 될 일도 없었다.<sup>37)</sup> 본 연구에서 인용된 『사상계』 논문이나 각 신문사 기사를 보아도 북한과 공산주의 진영에 대한 철저한 비판이 날짜나 필자만 바뀌고 똑같이 반복되는 양상을 알 수 있다.

즉 4·19 당시 한국 지식계는 개인 간의 약간의 논조 차이는 있어도 공통적으로 공산주의 침투를 막기 위한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전제 하에서 한국의 근대화를 위해 지식인 엘리트들의 역할을 중요시한 비교적 젊은 집단이었다고 할 수 있다.<sup>38)39)</sup> 그러한 1950년대 지식인들의 주된 공론공간은 정권이 아직 장악하지 못했던 인쇄매체였고, 그 대표적 잡지가 『사상계』였다.

『사상계』의 중심적 인물은 사상계사 창립자이자 사장인 장준하였다. 그는 대학교수나 언론인들과의 긴밀한 교류망을 가지고 있었다. 『사상계』도 역시 장준하를 비롯한 편집위원의 대부분이 월남한 보수적 반공주의자들이었다고 알려지고 있다.<sup>40)</sup>

『사상계』의 전신은 미국 원조를 받아 발간된 『사상』이라는 잡지였다. 『사상』에서는 미국식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논조가 강했고<sup>41)</sup> 1953년 4월에 월간지 『사상계』로 이름을 바꾸어 다양한 논자들을 포섭하기 시작했

---

36) 이용성, 1997, p59.

37) 김건우, 2003, p20.

38) 공재욱, "1950년대 한국사회의 계급구성", 이종외 외, 1991, pp144~145.

39) 물론 당시 『사상계』에 논문을 기고한 대학교수나 언론인은 30대부터 60대까지 망라되어 있었지만 편집은 철저히 30대가 맡고 있었다. 김건우, 2003, p87 각주.

40) 천장환 외, 2005, p267.

41) "좌담: 4월혁명과 60년대를 다시 생각한다", 최원식, 임규찬 공편, 『4월혁명과 한국문학』, (서울: 창작과비평사, 2002), pp34-37.

다. 이후 1970년 5월 폐간까지 무려 205호가 발간되었다.

『사상계』의 발행부수가 늘어난 계기는 1955년 6월에 발간된 제23호 특집 "학생에게 보내는 특집"이었다. 사상계사 직원들은 이 특집을 가지고 적극적인 발행 부수 확장 운동을 실시했다. 직원들이 아침부터 대학교문 앞에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이 특집 내용을 소개하고 다니고 고등학교 등에는 게시판에 포스터를 붙이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했다. 그때까지 『사상계』는 3,000부 발행 전략을 유지해왔었는데 이 특집은 8,000부 이상 판매되었다.<sup>42)</sup>

『사상계』 지식인들은 한국의 근대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교육과 계몽을 통해 한국 사회를 이끌어갈 지식인 엘리트들의 역할을 매우 중요시했다. 『사상계』 창간호인 1953년 4월호에서도 권두언에서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대개(大概) 인간(人間)은 인격성교육(人格性教育)에 의(依)하여서만 인격적(人格的)인 향상(向上)이 이어나며, 조화(調和)와 통일(統一)을 자각(自覺)케되며 이같은 자각(自覺)위에 세워진 인간관(人間觀) 세계관(世界觀)을 토대(土臺)로한 인격적(人格的) 표현(表現)만이 곧 세계인류(世界人類)가 갈망(渴望)하는바 진정한(眞正)한 자유(自由)와 평화(平和)를 가져올 것이다.<sup>43)44)</sup>

장준하를 비롯한 『사상계』 지식인들은 각 대학에서 직접 강연회를 열고, 4·19 이후에 대학생들이 농촌에 가서 계몽대를 형성한 것을 칭찬했다. 1950년대부터 계속 문제가 된 것은 도시화에 따른 농촌의 빈곤문제였고 『사상계』 상에서도 한국의 자립을 위한 농촌의 계몽 운동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sup>45)</sup> 이러한 점에서 1950년대 지식계는 계몽운동을 통한 민족자강을 시도한 1920년대의 문화적 민족주의와의 유사성을 보여준다.<sup>46)</sup>

---

42) 박경수, 1995, p290.

43) 권두언 "인간(人間)과 인격(人格)", 『사상계』, 제1호, (1955년 4월), p6.

44) 이하, 직접인용인 경우 한자 표기 부분은 먼저 한글을 쓴 다음에 한자를 표기하고, 띄어쓰기는 원문 그대로 표기했다.

45) 권두언 "향촌(鄉村)의 재건(再建)을 위(爲)하여-1960년(年)을 맞으며", 『사상계』, 제78호, (1960년 1월).

더구나 『사상계』는 '부패·독재'라는 반민주적 요소가 공산주의의 침투를 쉽게 용인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었다.<sup>47)</sup> 예를 들어 『사상계』 지식인 이동욱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무릇, 관권자본(官權資本)의 생성(生成)-부패(腐敗)는 후진성(後進性)의 상징이거니와 이를 부수는 길은 둘 밖에 없으니 부르췌아지적(的) 의 회정치(議會政治)를 확립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산적(共産的) 감옥정치를 하는 도리밖에 없는데도 관권후진이 나오기에...(후략)<sup>48)</sup>

그 성격과 대학생들과의 관계성을 감안해서 본 논문에서는 먼저 이 잡지를 통해서 '지식인'들이 4·19를 어떻게 규정하려고 했는지를 보고자 한다. 또 『사상계』를 중심으로 한 『사상계』 지식인들이 4·19 및 대학생에 대해 어떠한 평가를 내리고 있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잡지의 배경을 이해하는 작업도 필요하기 때문에 각종 『사상계』나 그 편집자들에 관한 연구들을 2차 자료로서 활용하도록 한다.

#### 4) 『동아일보』 및 『조선일보』

『사상계』의 보충적 자료로서 『동아일보』과 『조선일보』를 조사했다. 신문까지 역사자료로 포함시킨 이유는 두 가지 있다. 하나는 1961년에 5·16이 일어나서 그들이 확고한 세력으로 정착하기 전까지는 대대적 언론 검열이 실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1960년부터 1960년대 전반에 이르기까지는 사실 확인을 위해서 신문자료도 보완적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동아일보』는 1960년 4월 18일에 대학교로서는 처음으로 데모를 일으킨 고려대학교와 연고 관계가 있었다는 주장도 있어<sup>49)</sup> 거기서 개재된

46) 이성용은 『사상계』의 발행인인 장준하의 잡지 이념은 1920년대에 민권을 상승으로의 독립자강을 주장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용성, 1997, p56.

47) 김건우, 2003, p20.

48) 이동욱, “후진국(後進國)에 있어서 관료부패(官僚腐敗)의 원인(原因)-관권자본형성(官權資本形成)을 주제(主題)로”, 『사상계』, 제76호, (1959년 11월), p151.

49) 임대식, 2003년 겨울, p307. 『동아일보』 기자인 고정훈도 『사상계』에 기고한 글에서 당시 대학생과의 연관성을 시사하고 있다. 고정훈, 『사상계』, 제158호, 1966년 4월.

언론인들의 글은 『사상계』 수준까지는 아니라도 지식인과 대학생의 관계를 보기에 있어서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조선일보』와 『사상계』도 1960년대 전반까지 교류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4·19 당시에 『조선일보』 논설위원으로 활동했던 고정훈은 『사상계』가 발간된 초기부터 『사상계』 주최의 좌담회에 참석했고 1955년부터 1960년까지 『사상계』상에도 여덟 번이나 등장한다.<sup>50)</sup>

#### 5) 대학생 관련 자료

본 논문에서는 1960년 초반부터의 대학생들의 의사 표현을 그들이 사용한 구호나 선언문 등으로부터 추출하려고 한다. 학생이나 운동 참여자들이 사용한 구호는 주로 당시 발간된 일간지에서 수취했다. 대학생 및 고등학생 데모의 경우 도시명, 학교명, 구호가 사용된 장소, 구호의 사용 방법까지 가능한 한 추적했다. 그리고 선언문, 격의문 등에 관해서는 일간지에 실린 것은 발췌된 일부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학신문, 4·19혁명기념도서관<sup>51)</sup>이 수집·공개하고 있는 4·19 관련 자료들, 대학교가 발간한 자료집, 선행연구 문헌 등과 함께 비견하여 되도록 원문에 가까운 형태의 자료 수집을 시도했다.

당시 중·고·대학생이었던 자들의 회고록이나 증언록 역시 자료로 활용했다.<sup>52)</sup> 이러한 자료들도 당시 사회 상황이나, 데모 참여 동기 등을 알기 위해 중요한 자료이다. 물론 증언록 같은 자료에서는 증언자나 편집자의 주관성을 완전히 배제시키지 못한다는 점에서 편견이나 왜곡이 들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당시 사람들이 『사상계』 지식인에 의한 규정과 함께 어떤 상황이나 심정으로 움직이고 있었는지도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주관성을 감안한 분석 자료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

50) 1955년 2월, 1956년 11월, 1959년 3월, 5월(두 개 기사), 7월, 1960년 3월, 5월에 등장한다.

51)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공영 특수도서관이며 1964년에 개관된 4·19 기념시설도서관이 전신. 4·19관련 자료를 다수 수집·공개하고 있다. <http://library.419revolution.org/main.asp> (공식 홈페이지, 2013년 10월 5일 검색).

52) 혁민사편집실 편, 『(4월혁명 자료집) 4. 19의 民衆史』 (학민사, 1984). 고려대학교 4.18의거 실록 편찬위원회 편, 『고려대학교 4.18의거 실록』 (고려대학교출판부, 2012). 3·15의거기념사업회 편, 『(1960) 우리는 이렇게 싸웠다 : 3.15의거 증언록』 (3.15의거기념사업회, 2010) 등을 들 수 있다.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른바 4.19세대가 쓴 소설책도 당시 운동 참여자들이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된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1960년에 『광장』, 1963년에 『회색인』을 발표한 최인훈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술지나 학술문헌에 제한하지 않고 그러한 문학서도 참고하여, 당시 시대 분위기의 생생함을 포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4. 논문 구성

본 논문은 서론을 제외하고 모두 여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II장에서는 대구에서 처음 고등학생들이 데모를 일으킨 1960년 2월부터 전국적으로 데모가 확산되고, 4월 18일에 고려대 학생에 의한 데모가 일어나, 4월 19일을 거쳐 4월 26일에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까지의 시기를 다룬다. 먼저 이 시기에 학생들이 사용한 구호가 어떻게 변해갔는지, 대학생들이 어떤 방식으로 데모에 나섰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그것을 토대로 『사상계』 지식인들은 4·19라는 사건을 어떠한 시각으로 이해하고 초기 담론을 만들어갔는지를 알아내려고 한다.

III장에서는 1960년 5월부터 1961년 5월 16일에 군부 쿠데타가 일어날 때까지 약 1년간을 다룬다. 이미 형성된 지식인과 대학생의 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었고, 그 변화에 따라 4·19 초기 담론에 어떠한 혼란이 있었는지를 알아내려고 한다.

IV장에서는 5·16에 흡수된 4·19가 다시 분리, 재생산된 과정을 알아내고자 한다. 1961년 5월, 1964년, 1969년이라는 약 4~5년 간격의 시기에 일어난 학생 운동 속에서 4·19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변했고 현재 4·19 통설로 완성되어갔는지를 밝힐 것이다.

결론에 해당하는 V장에서는 앞서 논의된 내용들을 정리하는 동시에, 4·19 담론이 현대 한국 정치사에서 가지는 의미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 Ⅱ. 4.19 초기 담론 형성기-『사상계』 지식인과 대학생의 연대

### 1. 고등학생 데모와 구호 "학원에 자유를 달라"

이 시기에는 1960년 3월 15일 제4대 대한민국 대통령 및 제5대 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유당과 민주당이 선거 연설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이 자유당의 불법 선거 행위를 규탄하는 강연회를 열고자 하면 같은 날에 자유당은 그 근처에서 강연회를 열었다. 자유당은 휴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을 출근하게 하는 등 야당 강연회에 사람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지시하였다. 심지어 옷놀이 대회나 극장개방을 실시하여 강연회 장소 부근에 있는 주민들의 관심을 분산하는 방해로 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승만 정부는 선거 야당 후보자에게 등록에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압력을 가하거나 추천서를 받지 못하게 해서 등록 절차를 방해하는 일도 감행하였다. 이처럼 대한민국 정·부통령 선거를 둘러싼 사회적 분위기는 매우 어두웠다.

그러던 중 1960년 2월 16일에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인 조병옥이 미국에서 수술을 받은 후 급서하였고, 『동아일보』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도되었다.

현정부(現政府)와 여당(與黨)에대(對)하여 가장 날카로운 비판(批判)을 하고 직접(直接) 행동(行動)을 취(取)하여 유권자(有權者)들에게 선도적(先導的)인 영향(影響)을 줄수있는 계층(階層)이 대학생(大學生)이고보니 자유당(自由黨)의 관심(關心)이 쓸릴수밖에...<sup>53)</sup>

이 내용에 따르면 민주당은 대통령 후보를 잃은 이후 대학생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대학생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당시 한국 사회에서 일반적인 것이 아니었다. 잡지 『사상계』의 1955년 6월호에서는 다음과 같이 한국사회의 대학생에 대한 "멀시에 가까운 냉정"<sup>54)</sup>한 태도에 대한 내용이 게재되었다.

53) "초밥맛도정치(政治)로좌우(左右)?", 『동아일보』, 1960년 2월 25일 조간.

요즘 대학생(大學生)은 도무지 실력(實力)이 없다는등, 옛날 중학생(中學生)만도 못하다는등, 속에 든 것이 하나도 없으면서 건방지고 불신(不信)하고 책임관념이 없다는등, 영화나 다방 출입(出入)으로 세월을 보내고 공부는 꿈도 안꾼다는등, 미국 도피행(逃避行)만 꾀한다는등, 군대기피 하기위해서 대학(大學)에 온것인지 공부하러 온 것이 아니라 는등, 정열(情熱)과 양심(良心)과 기백이 다 죽어버렸다는등, 일언이폐 지하면 대학생(大學生)의 지성(知性)의 빈곤과 덕성(德性)의 부족(不足)과 생활(生活)의 타락을 찌르는 말들이다.

사회(社會)의 이러한 비난이 모두 당치않은 억울한 소리라고 항의하는 대학생(大學生)이 대반이라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기쁜 일이라? 이러한 비난(非難)속에는 물론 다소의 과장과 잘못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대체로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sup>55)</sup>

인용문에서 보듯 195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대학생은 한국 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학생에 주목하였던 것이다. 4·19의 선두자라고 평가 받고 있는 대구 고등학생 데모는 1960년 2월 28일에 일어났다. 이 날 대구에서는 민주당의 부통령 후보 장면의 선거연설이 열렸는데 고등학생들은 일요일임에도 전교 등교 지시를 받았다. 지시에 따라 경북고등학교는 학기말 시험, 대구고등학교는 토끼사냥, 경북사대부고등학교는 임시수업, 대구상업고등학교는 졸업생 송별회, 대구여자고등학교는 무용발표 등 다양한 구실로 학생들을 등교하도록 한 것이다.<sup>56)</sup> 이에 대항하여 경북고등학교, 대구고등학교 및 경북여자고등학교 학생 약 1,200명은 오후 1시 20분경 열을 지어 학교 교문을 나와 도청으로 몰려들었고, "신성한 학원을 정치도구화 하지 말라"<sup>57)</sup>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데모를 시작했다. 학생들은 출동한 경찰관 약 200명과 충돌하였고, 경찰관들의 구타로 인하여 약 20명의 중경상자가 발생했다.

54) 안병욱, "대학생활(大學生活)의 반성(反省)", 『사상계』, 제23호, (1955년 6월), p.159.

55) 안병욱, 1955년 6월, p159.

56) 이재오, 『한국학생운동사 1945~1979년』, (파라북스, 2011), p147.

57) "1200명(名)학생(學生)들이시위(示威)", 『동아일보』, 1960년 2월 29일.

학생들이 외친 구호를 통하여 그들이 자유당과 민주당의 대립에 이용될 것을 거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날 그시각이 바로 민주당의 강연회라서 우리들을 학교에 등교 시키는 것이다』라는 인식이 누구의 선동에 의함이없이 문득 떠올랐다"<sup>58)</sup>라는 심정을 경북고등학교 학생위원회 학생은 3월 7일 『동아일보』 인터뷰 기사에서 밝히고 있다. 하지만 2월 28일 데모의 동기가 그러한 정치적 이유만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동일한 인터뷰에서 그들은 다음과 같이 학교 측과의 대립 과정을 설명하였다.

먼저 학교 측은 일요일에 전체 학생을 등교시켜 본래 3월 3일부터 예정되어 있던 시험을 앞당겨서 일요일에 실시하겠다고 통고했다. 그런데 학생들은 일요일날 시험을 보지 말 것과 그날 등교하는 대신 월요일은 쉬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학생들은 일요일에 등교하는 대신 월요일에는 쉬고 화요일은 3월 1일 즉 법정 공휴일이기 때문에 일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설 계획이었다. 그로 인해 원래 3월 3일부터 시작할 예정이었던 시험을 위해 공부할 틈을 만들 수 있다는 계산을 했던 것이다. 이 조건은 학교와 학생 위원 간에서 합의가 되었다는 하지만 27일에 갑자기 학교 측이 이 합의를 파기하고 28일에 시험을 실시하겠다고 통보하였다. 학생들은 "이와같은 학교의 처사가 드디어는 「데모」를 감행하게끔한 절대적 동기로 등장하였다"고 하였다.<sup>59)</sup> 이처럼 데모의 동기가 지적 비판이라기보다는 시험을 앞둔 학생들이 공부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시작한 것으로, 학생의 입장을 피력하기 위해 데모를 한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데모에서 사용된 구호 역시 "신성한 학원을 정치도구화 하지 말라"라는 어디까지나 학생 자신들의 학업을 위한 말이었으며, 이 시기까지는 '학업'에 한정된 제한적인 메시지였다고 할 수 있다.

대구 학생 데모를 본 이승만 정부는 데모 발생 다음 날인 2월 29일에 다음과 같은 4개 사항을 전국 각 도지사들에게 긴급 지시했다.

- ① 대구학생(大邱學生)데모사건(事件)으로 연행(連行)되었던 학생(學生)들은 전원석방(全員釋放)할 것
- ② 데모에참가(參加)한 학생중(學生中) 잘못이있더라도 학교당국(學校

58) "2.28(二·二八) 대구(大邱)데모진상(真相)", 『동아일보』, 1960년 3월 7일.

59) "2.28(二·二八) 대구(大邱)데모진상(真相)", 『동아일보』, 1960년 3월 7일.

- 當局)과학부형(學父兄)에게 인계(引繼)해서훈육(訓育)시키도록할것
- ③ 향후(向後)일요일(日曜日)이나 공휴일(公休日)에는 부자연(不自然)스럽게 학생(學生)들을등교(登校)시키는 일이없도록하고 공무원(公務員)도등청(登廳)시키지말것
- ④ 공산당(共產黨)은 물론(勿論)이고 여(興)·야(野)각정당(各政黨)은 학생(學生)들을선동 혹(或)은이용(利用)할수 없도록 하고 여당집회(與黨集會)에 학생(學生)을 동원(動員)시켜서는 안되며 학생(學生)들이 어느집회(集會)라도 참가(參加)할수있도록자유(自由)를보장(保障)할 것<sup>60)</sup>

이러한 지시가 이루어진 배경에는 학생들을 이용하거나 학원에 간섭하는 일이 오히려 선거에서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존재한다고 생각된다. 대구 학생 데모의 결과 자유당은 민주당도 학생들을 정치적으로 동원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그런데 2월 28일 이후에도 학생 데모는 수그러들지 않았고 오히려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데모에서 쓰인 "학원을 정치도구화 하지 말라"라는 구호도 유행어처럼 번졌다가 시간의 경과와 함께 점점 그 형태를 바꾸어갔다. 1960년 3월 1일에는 경북고등학교 학생 약 1,000명이 "학원 내에 미치는 정치세력을 배격하자", "자유를 달라"고 외치며 데모 행진을 했다. 이 때 처음으로 '자유'라는 말이 구호에 포함되었다. 이후 3월 5일에 서울에서 약 1,000명의 고등학생과 시민에 의한 데모가 일어났다. 3월 8일 대전에서는 장면 연설 진행 중에 연설장 가까이에서 대전고등학교 학생 약 1,000여에 의해 데모가 시작됐고 "학원을 정치도구화 하지 말라"라는 구호가 사용되었다.<sup>61)</sup> 그들은 연행되는 중에도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고 한다.<sup>62)</sup> 부산에서 7일에 예정되었다가 사전에 발각되어 좌절된 데모에서 사용될 예정이었던 호소문의 첫 문장은 "학원에 자유를 달라"는 것이었다.<sup>63)</sup> 이때 처음으로 '학원'과 '자유'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결합되었다.<sup>64)</sup>

60) ""학생집회자유보장" 최내무, 각도지사에 지시", 『동아일보』, 1960년 3월 1일

61) 『동아일보』, 1960년 3월 9일.

6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4월혁명사료총집발간위원회 편, 『4월혁명 사료총집』, 제8책 사진기록, (서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0). p49.

63) 『동아일보』, 1960년 3월 9일.

64) 2월 28일에 이미 "학원에 자유를 달라"는 구호가 사용되었다고 하는 선행연구도 있지

**<표 II -1> 1960년 2월 28일부터 3월 14일까지 각지 고등학생 데모에서  
사용된 구호**

날짜	지역/학교명	구호
2월 28일	대구/경북고등학교, 대구고등학교, 경북여자고등학교	-신성한 학원을 정치도구화 하지 말라 -민주주의 살리자 <sup>65)</sup> -학생들의 인권을 옹호하라 <sup>66)</sup> -햇불을 밝혀라, 동방의 별들아 <sup>67)</sup>
3월 1일	대구/경북고등학교	-학원 내에 미치는 정치세력을 배격하자 -자유를 달라
3월 5일	서울/학생과 시민	-학생은 쫓기하라 <sup>68)</sup> -민주주의 만세 <sup>69)</sup> -공명선거 실시하라 <sup>70)</sup>
3월 7일	부산/(데모는 미발)	학원에 자유를 달라
3월 8일	대전/대전고등학교	-학원을 정치도구화 하지 말라 -학원에서 선거운동이 웬 말이냐 <sup>71)</sup>
3월 10일	대전	학원의 자유를 달라
	충주/충주고등학교	학원의 자유를 달라
	수원/수원농업고등학교	-학원내의 정치적 간섭을 배격한다 -부통령 대환영(플래카드) <sup>72)</sup> -학원내서의 간접적인 선거운동을 배격한다(삐라) <sup>73)</sup>
3월 13일	서울	-백가지 공약보다 아쉬운 공명선거(삐라) <sup>74)</sup>
3월 14일	서울	학원의 자유를 달라

만, 3월이 돼야 신문 보도에서 이 구호가 나오는 것을 감안해서 3월에 등장한 구호로 했다.

65) 이재오, 2011, p148.

66) 이재오, 2011, p148.

67) 이재오, 2011, p148.

출처: 『동아일보』 및 『조선일보』 2월 28일~3월 15일 기사, 그 외는 각주 참조.

이 구호는 전국 각지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3월 10일에 대전에서 발생한 300명 규모의 고등학생 데모에서는 똑같이 "학원의 자유를 달라"는 구호가 사용되었다.<sup>75)</sup> 같은 날 충주고등학교 학생 300명이 실시한 데모에서도 "학원의 자유를 달라", 수원농업고등학교 학생 약 300명이 실시한 데모에서는 "학원내의 정치적 간섭을 배격한다"는 구호가 사용되었다.<sup>76)</sup> 3월 15일의 선거를 이틀 앞둔 13일에 서울 곳곳에서 일어난 고등학생들의 데모에서도 "학원의 자유를 달라"는 말이 사용되었다.<sup>77)</sup> "대구(大邱)를 비롯하여 서울·대전(大田)·충주(忠州)·수원(水原)등지에서 『학원의 자유를 달라』는 등 의학생 「데모」가 대대적으로 발생"<sup>78)</sup>하고 있다는 보도가 되는 등 학원의 자유를 호소한 구호는 학생 데모에 필수적 대사가 되었다. 2월 28일에 대구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학원을 정치도구화 하지 말라"는 학원에만 의미가 한정된 구호는 '자유'라는 말과 결합하면서 조금 더 폭넓은 자유세계까지 그 이미지를 확대시킨 "학원에 자유를 달라"는 말로 재생산되고 널리 사용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자유'라는 단어가 포함된 후 구호가 확산되었는데, 사실 학원에 계속 간섭한 장본인인 자유당 및 이승만도 자유세계체제를 강조하고 있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이 "학원에 자유를 달라"라는 구호가 어디서

---

68) 이재오, 2011, p150.

69) 이재오, 2011, p150.

70) 이재오, 2011, p150.

71) 이재오, 2011, p151.

7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4월혁명사료총집발간위원회 편, 2010, 제8책, p51.

73) “대전(大田)과 수원(水原)서 또 학생(學生)들「데모」”, 『조선일보』, 1960년 3월 10일 석간.

74) “학생(學生)들 산발(散發)데모”, 『조선일보』, 1960년 3월 13일 석간.

75) 『동아일보』, 1960년 3월 11일.

76) 『동아일보』, 1960년 3월 11일.

77) 『동아일보』, 1960년 3월 14일.

78) 『동아일보』, 1960년 3월 13일.

발생하여 확산된 것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 활용한 『사상계』의 내용을 참고했을 때 이 잡지가 데모의 구호에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의 『사상계』 인기의 계기가 된 1955년 6월호 「학생에게 보내는 특집」에 실린 논문들의 내용을 보면 고등학생들이 쓴 구호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로 『사상계』 상에서 활발한 논술 활동을 했던 한교석<sup>79)</sup>이 쓴 「학원(學園)·학문(學問)의 자유(自由)」를 들 수 있다. 여기서는 3·1운동 또는 광주 학생 반일 투쟁 등을 "자유(自由)에의 행군(行軍)"<sup>80)</sup> 또는 "자유(自由)에의 진격(進擊)"<sup>81)</sup>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3·1운동과 광주 학생 투쟁은 나중에 4·19의 전사였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 논문 마지막 부분은 다음과 같다.

나는 청년(靑年) 학도(學徒)들이 우리 국민생활(國民生活)의 흐름을 정당(正當)히 판단(判斷)하고 현재(現在) 직면(直面)한 입장(立場)을 적확(的確)히 파악(把握)할 것을 기대(期待)한다. 그리고 심신(心身)의 발육(發育)이 왕성(旺盛)한 시기(時期)에 Pathos 와 Logos의 수양(修養)을 부지런히 하면 자유(自由)에의 길에서 낙오(落伍)되지 않을 것을 믿는다. 요(要)는 자기(自己)를 인식(認識)하고 진실(眞實)히 사는 것이 자유(自由)에의 길일 것이다.<sup>82)</sup>

한국은 3·1운동부터 전통적으로 "자유(自由)의 길"을 걸어왔으며 학생들도 이 '자유'를 위해 행동하라는 주장이다. 한교석은 다른 1950년대의 지식인과 같이 북한에서 월남한 인물로 일제 강점기의 3·1운동과 광주학생투쟁 같은 사건을 부각시키면서 한국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동시에 북한의 정통성을 부정하였다. 즉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공산주의 진영에 대항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의미한다.

다음으로 앞에서도 언급된 안병욱<sup>83)</sup>의 "대학생활(大學生活)의 반성

79) 당시 한국외국어대학 교수. 원래 북한에서 활동하다가 한국전쟁 발발 후 1·4 후퇴 때 월남한 월남문인으로 알려져 있다.

80) 한교석, "학원(學園)·학문(學問)의 자유(自由)", 『사상계』, 제23호, (1955년 6월), p148.

81) 한교석, 1955년 6월, p148.

82) 한교석, 1955년 6월, p148.

(反省)"을 살펴볼 수 있다. 그는 한국 사회에서 대학생에 대해 비판적 평가가 나타난 원인으로 제대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대학교수나 학교 행정부, 그리고 더 나아가 한국사회 전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대학생(大學生)의 젊은 생명(生命)들이 이 학문(學問)의 정신(精神), 진리(眞理)의 정신(精神), 순수(純粹)의 정신(精神)과 부딪치려면 그러한 정신(精神)으로 살고 그러한 정신(精神)으로 죽으려는 훌륭한 대학교수(大學教授)들을 눈앞에 보고 직접 접해야 한다. 그러나 불행(不幸)하게도 현대(現代)의 한국의 대학(大學)에서는 그러한 교수(教授)들을 많이 발견(發見)할 수가 없다. 여기에 대학생(大學生)들의 불행(不幸)이 있고, 우리사회(社會)의 불행(不幸)이 있다. 요즘 대학생(大學生)들은 깊이가 없다, 천박하다, 무계가 없다하는 말을 흔히 듣거니와, 그것은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대학(大學)에서 그러한 정신(精神)과 그러한 인격(人格)에 부딪칠 기회가 적기 때문이다.<sup>84)</sup>

이 내용은 대학생 및 대학에 관한 것이지만, 사실 정치개입이나 부패문제는 고등학교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었다. 학생들에게 인기를 얻기 시작한 『사상계』에서 쓰인 '학원의 자유'가 5년 후 고등학생 데모에서 구호로 나타난 것은 확실하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아예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치안국장은 1960년 3월 2일에 대구학생 데모를 비롯한 데모들이 "모당의 배후 조종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평양 괴뢰 측에서는 동「데모」를 마치 공산주의자의 의거와 같이 보도하고 있어 괴뢰집단에 이용되고 있다"<sup>85)</sup>고 발표하였다. 이 모당이라는 것은 1958년에 사형을 당한 조봉암을 중심으로 한 진보당의 흐름을 받은 이른바 좌파세력을 가리키는 것이고 더 나아가 북한의 공산주의 세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승

83) 당시 서울대학교 강사. 1920년 평안남도 출신의 월남 지식인.

84) 안병욱, 『사상계』, 1955년 6월, p162. 나중에 다시 언급하지만 1960년 5월 이후 대학교를 중심으로 크게 문제가 된 '학원 정화 운동'은 이러한 논문이 사상적 기반이 된 가능성이 크다. 당시 동아일보 논설위원이었던 신상초가 쓴 「학생과 사회」에는 학원 정화 운동과 그 후의 대학생들의 행동을 마치 예언한 거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85) 『동아일보』, 1960년 3월 3일.



만 정부 측의 입장에 대해 신문 보도는 고등학생들의 반박 중장을 적극적으로 보도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1960년 3월 7일 『동아일보』 대구 데모 간부학생 인터뷰의 전체 제목은 다음과 같다.

2.28(二·二八) 대구(大邱)데모진상(真相)/「학생위(學生委)」간부(幹部)들이 말하는 경위(經緯)/「정당사주(政黨使嗾)란천만부당(千萬不當)/백합(百合)같이결백(潔白)·순결(純潔)한학생운동(學生運動)했을뿐」/누구의선동(煽動)없이.../「시험(試驗)본다·극장(劇場)·등산(登山)간다」등 모호한일요 등교이유(日曜日登校理由)에불만(不滿)<sup>86)</sup>

이 인터뷰 기사는 1960년 2월 28일에 데모를 일으킨 대구 고등학생들의 입장을 밝히기 위한 기획 기사였다. 데모에 참가하다가 경찰에 잡혀간 학생들이 "우리는 학원의진정한자유를 갈망하는 뜻에서 시위를한것이요 결코어떠한 정치적인의도는 추후도없다"<sup>87)</sup>고 호소하는 보도가 실렸고 이 보도에서 그들은 데모의 '우발성과 자발성'을 강조하였다.<sup>88)</sup>

이러한 『사상계』 지식인들의 태도에는 이승만 정부의 극단적인 용공파(容共派) 처단 방식에 대한 비판과 함께 공산주의에 대한 공포심 및 사회질서의 결여가 그 배경에 있었던 걸로 보인다. 고등학생들의 입장이 여러 통로를 통해 피력될 수 있었으나 1960년 3월 중반에 이르러 그들의 데모는 차차 폭력성을 띄게 되었다. 3월 8일에 대전에서 약 1,000명 규모의 고등학생 데모가 일어났을 때 무장한 경관들이 장총개머리판으로 학생들의 머리와 허리를 강타하여 유혈사태로 발전되었다.<sup>89)</sup> 더구나 3월 10일에 대전에서 대전상업고등학교 학생 약 300명이 일으킨 데모에서는 자유당 선전차가 데모대를 제지하려고 하다가 학생 측이 그들에게 돌을 던지거나 폭행을 가했다고 보도되었다.<sup>90)</sup>

한편, 이때까지로 대학생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아무런 입장을

86) 『동아일보』, 1960년 3월 7일.

87) ““정치적의도(政治的意圖)는없다” 수용(收容)된학생(學生)눈물로호소(呼訴)“, 『동아일보』, 1960년 3월 9일 조간.

88) “학생(學生)들진술(陳述) 『우발적(偶發的)행동』”, 『동아일보』, 1960년 3월 7일.

89) 『동아일보』, 1960년 3월 9일.

90) 『동아일보』, 1960년 3월 11일.

포명하지 않았다. 3월 14일에 서울 시내 곳곳에서 고등학생 데모가 일어났고 "대학생들은 썩었다"<sup>91)</sup>고 하는 고등학생들의 질타가 있었다. 이때 연세대학교 입구에다가 "학도들이여 일어나자"<sup>92)</sup>는 제목의 호소문이 붙었고, 이는 대학생들의 운동 참여를 요구하는 것이었음에도 대학생들은 조용한 태도를 유지하였다. 이 시기의 데모 양상을 보면, 경찰의 폭력 때문에 다친 사람은 있었지만 죽은 사람은 없었다. 고등학생들에 의한 폭력도 돌을 던지거나 구타를 가하는 정도였다. 이 시기는 폭력에 대한 분노가 싸여가 되 폭발까지는 안 되는 프러스트레이션(frustration)의 기간이었다고 볼 수 있다.

## 2. 제1, 2차 마산사건에서의 분노의 폭발과 폭력화

이러한 상황은 정·부통령 선거날인 1960년 3월 15일을 기점으로 크게 달라졌다. 자유당은 시민들을 3인조, 5인조 등으로 짝을 만들어 투표함에 투입시켜, 이승만과 이기붕을 찍으라고 강요했다. 그리고 사전에 투표함에 이승만과 이기붕을 찍은 투표를 놓고서 총유권자 수보다 투표자 수가 많이 나오는 상황이 벌어지자 투표함을 불태워 부정행위를 은폐하려 했다.

마산에서는 민주당 마산시당 간부들이 선거가 시작된 후 약 3시간 후인 오전 10시 30분에 선거포기를 결정하고 오후 3시 30분부터 데모를 시작했다. 이 데모는 경남도의회 민주당 원내총무 등 민주당 간부들이 앞장서고 학생과 시민 약 1,000명이 뒤를 따라했다. 오후 4시 20분에 민주당 간부 6명이 경찰에 연행되었는데 데모 참여자는 5,000명을 넘었다. 그리고 오후 7시 30분쯤에는 시청 부근에 약 1만 명이 집결되었다. 군중들은 "부정선거를 즉시 정지하라"고 외치면서 경찰서를 파괴하고 불로 태우는 등 전날까지의 데모보다 폭력적 색채가 강해졌다. 데모 참가자들은 경찰과 충돌하였고 그들에 의한 무차별 사격에 의해 사망자까지 발생하였다. 밤이 깊어질수록 폭력 상황은 고조되고 자유당 당사, 서울신문 마산총국 등이 시민들의 손으로 파괴되었다. 이른바 제1차 마산사건이 벌어진 것이

91) 박태순, 김동춘, 1991, p63.

92) "「서울」서 또 학생(學生)데모", 『동아일보』, 1960년 3월 14일.

다. 파괴행위가 벌어지고 사망자까지 난 이 사건은 『사상계』 지식인들이 원하는 형태의 데모가 아니었다. 3월 17일 『동아일보』의 칼럼 "횡설수설"에서는 제1차 마산사건에 대해 고언을 보냈다.

민주주의(民主主義)란 질서(秩序)를 유지한다는데 생명(生命)을 두고있을진대, 방화(放火)·파괴(破壞)등은 도(度)를 지나쳤다고 안할수없을 것...(중략)...하여간 마산(馬山)서의 데모가 데모이상(以上)의열도(熱度)를 올렸던 것은 유감천만(千萬)의 일이며 물·불을 헤아리지 않는 20전(二十前)의 소년(少年)들의 실수라고 하니까 이해(理解)가 안 가는것도 아니지만, 여하튼 슬픈 일이다.<sup>93)</sup>

제1차 마산사건에서는 학생이 아닌 수많은 사람들도 데모에 참가했었고 거기에는 가난한 상인들이나 고아들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다.<sup>94)</sup> 하지만 당시 신문 보도에서 부각된 자들은 '학생'이었다. 그리고 2월 28일부터 연달아 발생한 고등학생 데모에서 '민주주의'라는 말이 자발적으로 나온 것은 4월 12일에 일어난 마산공업고등학교 데모에서 사용된 구호 "민주정치 바로 잡자"<sup>95)</sup> 외에는 거의 없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상계』 지식인들이 '민주주의'라는 말로 이 사건을 규정하려고 한 배경에는 북한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에서는 제1차 마산사건을 '인민 봉기'로 보고 있었다.<sup>96)</sup> 그러한 시각을 부정하기 위해 수가 많은 '시민'이 아닌 '학생'에 초점을 맞추고 '학생에 의한 민주주의 요구'라는 말로 사건 규정을 한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고등학생들도 역시 구호만 외치고 다닌 것이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파괴행위에 가담하고 있었고 『사상계』 지식인들의 피난의 대상이 될 자들이었다.

제1차 마산사건 이후 전국적으로 사건 규탄 및 부정선거 규탄 데모가 활발해졌다. 1960년 3월 16일엔 서울에서 고등학생 500명에 의한 데모가 일어나 "독재정치 배격한다", "마산 동포 구출하자"<sup>97)</sup> 등의 구호를 외

93) "횡설수설" 『동아일보』, 1960년 3월 17일.

94) 권보드래, 천정환 편, 『1960년을 묻다: 박정희 시대의 문화정치와 지성』, (서울: 천년의상상, 2012).

95) "견잡을 수 없는 마산의 공기", 『동아일보』, 1960년 4월 13일.

96) 강준만, 2004, p91.

쳤다. 같은 날 부산에서는 약 1,000명 규모의 고등학생 데모가 일어나고 "정부는 마산사건에 대한 책임을 져라", "구속된 학생을 즉시 석방하라", "공명선거를 다시 하라", "학원에 자유를 달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마산사건은 강한 폭력성을 보여줬지만, 『사상계』 지식인들은 이것이 절대 공산주의적인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3월 26일 『동아일보』 칼럼에서는 어떤 영국 신문 보도가 한국의 상황을 공산주의적 움직임이라고 보도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반박을 했다.

무슨 근거(根據)를가지고 「공산당방식(共産黨方式)」이란 끔찍스러운 소리를, 순진(純眞)한 어린학생(學生)들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것인지, 그 인간(人間)의 심리(心理)를 알 수가 없다.<sup>98)</sup>

이후 1960년 4월 초에 이르러 마산의 사태는 진정되었다. 물론 여전히 마산사건의 책임자에 대한 처단과 재선거를 호소하는 데모가 서울을 비롯한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었고 데모 참가자들과 경찰이 충돌하고 있었지만 사망자는 없었다. 그러던 중 4월 11일 밤에 마산에서 또 일이 터졌다. 마산시 신포동 중앙부두에서 한 낚시꾼에 의해 고등학생 김주열의 시체가 발견된 것이다. 이것은 새로운 사태의 시작이었다. 김주열은 3월 15일 제1차 마산사건에 참여한 뒤 행방불행이 되었는데 그는 머리에 데모 진압에 사용된 최루탄이 박혀있는 채로 발견된 것이다. 약 3,000명의 마산 시민들은 4월 11일 저녁에 시체가 있는 마산도립병원에 집결하여 일대 데모를 시작하였다. 그들은 "살인선거 물리치라", "시체를 인도하라"라는 구호를 외쳤고 사태는 확산되었다. 마산 곳곳에서 경찰서나 자유당 관계 건물들이 파괴되었고 시민들의 행동은 다시금 폭력화되었다. 시민들은 돌을 던져 싸웠는데 경찰은 제1차 마산사건 때와 같이 다시 발포를 시작했다. 결국 시민 측에서 사망자가 나왔고 제2차 마산사건이라고 부르게 되는 만큼 사건은 심각해졌다.

1960년 4월 11일 이승만 정부는 제2차 마산사건에서 "이승만 정부는 물러가라"는 구호가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고 사태의 배후를 조사하기 시

---

97) 이재오, 2011, p155.

98) 『동아일보』, 1960년 3월 26일.

작하였다. 검찰 대표자는 "우발적이라고 볼 수 있는 점도 많이 있으나 질이 나쁜 관계로 오열이 개재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에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sup>99)</sup>라고 말하였다. 이승만 대통령도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이 난동에는 뒤에공산당이있다는 혐의도있어서 지금 조사중인데 난동은 결국 공산당에대해서좋은 기회를 주게할뿐이니 모든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극히 조심해야될것이며 또 지방경찰은 각각 그지방의 정돈을지켜서 혼란이없게만들어야 될것이다<sup>100)</sup>

하지만 『사상계』 지식인들은 이러한 정부의 견해에 대해 제1차 마산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반대 의견을 내세웠다. 이승만 대통령의 담화가 보도된 날 같은 신문 상에 “마산시민(馬山市民)을공산당(共產黨)으로몰지말라”라는 사설이 실렸다. 마산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3·15선거의 불법성에 있고, 그 근인은 경찰의 발포 및 고문 등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을 처벌하지 않은 정부의 태도에 있다고 한 것이다.

반공(反共)의 구실하(口實下) 국민(國民)의기본적(基本的)인 자유(自由)와 권리(權利)를 부당(不當)하게 침해(侵害)·박탈하여 일당독재(一黨獨裁)의 체제적(體制的)인 완성(完成)에 박차(拍車)를 가(加)하고있는 자유당(自由黨) 정부는 제권리(權利)를 찾으려는 민중(民衆)을 「빨갱이」로 보는악작풍(惡作風)을 가지고있는데 빼앗긴 자유(自由)와 권리(權利)를 찾으려는 선량(善良)한 시민(市民)에게 공산당(共產黨)의 누명(陋名)을 뒤집어씌우려는 정부(政府)의 정책(政策)이야 말로 오늘날 자유당정권(自由黨政權)이 민중(民衆)의 신뢰(信賴)를 거의완전(完全)히 상실하게된 가장 큰 원인(原因)을 이루고있는것이다.<sup>101)</sup>

즉 마산 사람들의 행동은 자유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기본적인 자

99) 『동아일보』, 1960년 4월 14일.

100) “배후규명(背後糾明)에중점(重點)”, 『동아일보』, 1960년 4월 14일 석간.

101) “마산시민(馬山市民)을공산당(共產黨)으로몰지말라”, 『동아일보』, 1960년 4월 14일 석간.

유권을 회복하려는 타당한 행동이고 오히려 정부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그들에 공산주의자라는 오명을 쓰게 하고 있다고 반박한 것이다. 그리고 4월 13일 『동아일보』는 “한국인(韓國人)데모는 민주주의향상(民主主義向上)의열원(熱願)”이라는 제목으로 AP통신의 보도를 가져와 외국에서 마산 사건을 민주주의적 움직임이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sup>102)</sup>

이때 마산 사람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자유민주주의'와 연결시키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제2차 마산사건이 부정선거를 규탄한 제1차 마산사건의 연장선에서 일어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자유'나 '민주주의'라는 개념들보다 마산 시민들한테 중요했던 것은 그것보다 훨씬 당장의 문제인 경찰에 의한 폭력에 대한 분노였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자신을 둘러싸는 어둠과 공포의 벽을 뚫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회복하려고 한 것이다.<sup>103)</sup> 제2차 마산사건에서 사용된 "살인범을 잡아내라", "선거 다시 하라", "협잡선거 다시 하라", "마산 사건의 희생자를 살려내라", "악독한 고문경찰관을 잡아 죽이지", "경찰은 잘못을 알고 사과하라"라는 구호들은 마냥 국권이라는 명분으로 시민들에게 일방적으로 행해진 폭력에 대한 분노였다. 나아가 그러한 폭력을 용납하고 있는 이승만 정권에 대한 싸여온 분노였던 것이다.

그런데 『사상계』 지식인들은 이 분노를 '자유민주주의'의 틀에 놓으려고 했다. 제2차 마산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자유민주주의로서의 의미를 부여해서 대대적으로 신문에서 보도했다.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의한 폭력화된 사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상계』 지식인들이 가장 두려웠던 것은 공산주의 세력이 개입하여 공산주의혁명과 같은 움직임이 한국에서 현실화될 가능성이었다. 이 부분은 이승만 정부의 입장과 일치한다. 하지만 이승만 정권은 공산주의에 대한 공포심을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이용하려 한 의도를 분명 갖고 있었다. 반면 지식인들은 공산주의가 한국 땅에서 현실화 되는 것을 크게 우려했었고 제2차 마산사건에서 나타난 폭력성과 무질서는 그러한 공포심을 고조시켰다.

『사상계』 지식인들은 분노를 품고 싸우는 사람들이 이 사태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스스로 생각하기 전에, 일찍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의

102) “한국인(韓國人)데모는 민주주의향상(民主主義向上)의열원(熱願)”, 『동아일보』, 1960년 4월 13일 석간.

103) 최정운, 『오월의 사회과학』, (파주: 오월의봄, 2012년), p49.

미를 외부에서 부여하고 공산주의적 색채가 거기에 들어갈 여지를 배제하려고 한 것이다. 왜냐하면 마산에서 데모에 참여한 사람들은 사실 자유민주주의를 잘 아는 계몽된 '시민'들라기보다도 가난하고 나날의 생활에 지치고 있는 가여운 '노동자'들이었기 때문이다.

『사상계』 지식인들에 의한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데모로서의 방향 수정은 오히려 데모 참가자들에게도 싸우기 위한 적극적인 명분을 주었다. 1960년 4월 12일의 마산공업고등학교 데모에서는 처음으로 "민주정치 바로 잡자"라는 '민주주의'가 들어간 구호가 사용되었고<sup>104)</sup>, 4월 17일에는 마산에서 고등학생 대표단 14명과 마산경찰서장서리 및 경찰국장과의 면담이 열렸는데 그 때 학생대표는 "그동안의 우리의 「데모」는 기본권리를 주장하는 정당한 것이었다"<sup>105)</sup>고 말했다고 한다. 폭력에 가담한 어린 고등학생들이었지만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고 있다'는 『사상계』 지식인 측이 마련한 규정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표현한 것이다.

### 3. 4대학생의 출현과 '4·19'의 탄생

제2차 마산사건 이후 몇 일 동안 대대적인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다. 마산이 다시 진정된 1960년 4월 14일 쯤부터 17일까지는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그런데 4월 18일에 드디어 서울에서 대학생들이 일어났다. 고려대 학생들이 데모를 일으킨 것이다. 이때에 처음으로 대학생들이 데모에 나선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이와 관련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전까지의 대학생에 대한 한국 사회 전반의 이미지와 평가가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대학생이라 하면 '무기력', '무실력', '무가치'의 집단이고 항상 비판의 대상이었다. 그러한 대학생들이 3·15 부정선거에 대한 사람들의 분노가 고조되고 민주주의의 개념이 데모에 들어간 시기에 등장한 것은 연관이 있다고 보인다.

대학생들은 '뭔가를 하고 싶다'는 욕망을 품고 있으면서 아무 행동도 일으키지 않고 있었다. 1958년을 무대로 한국 대학생들의 모습을 그린 최인훈의 소설 《회색인》<sup>106)</sup>은 그러한 당시의 대학생들의 모습을 잘 드러

104) "견잡을 수 없는 마산의 공기", 『동아일보』, 1960년 4월 13일.

105) 『동아일보』, 1960년 4월 18일.

내고 있다. 소설에서는 주인공 친구인 김학이 참여하는 동인 그룹 '갇힌 세대'<sup>107)</sup>에서 다른 학생들과 한국 사회에 대해 토론 하는 장면이 나온다. 먼저 동인들의 한 면인 오승운이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학의 말은 역사는 필연이 아니라 자유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설이지만 반드시 그렇지도 않아. 구체적으로 꿈쩍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란 게 있어. 어떻게 해볼래야 해볼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말이지. 우리의 지금 상태가 그것 아냐? 자, 여기서 혁명을 일으키자니 그토록 무시무시한 사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안 그러자니 따분하고 희망이 없고, 사는 것 같지 않고 창피하고 그래서 '갇힌 세대'가 아닌가? 갇혔다는 것. 옥 속에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환경이야. 우리는 갇혀 있어. 갇혀 있으니까 최소한 입에 들어가는 먹이는 누군가가 준단 말이야. 마치 죄수처럼. 죄수들은 생존은 허락되지만 생활은 금지당한 사람들 이거든. 그들은 자유로부터 소외당하고 있어. 그러나 당장 죽는 것이 아니니까 그럭저럭 포로의 생활에 길들여지는 거야. 이것이 무서워. 사람마다 말세라 하고 이거 망나니 세상이라고 하면서도 그렇다고 사생결판을 내는 그런 상태는 바라지 않고 있거든.···(중략)···우리는 갇혀 있으나 탈출은 금지돼 있어.<sup>108)</sup>

친구의 발언에 대하여 김학은 다음과 같이 반발한다.

응····자네가 지금 좋은 말을 했어. 우리들에게는 드라마가 없다고. 그건 사실이야. 이것이 아니면 죽는다 하는 신념이 없기 때문에 자유가 박탈당했을 때도 그것이 절실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반항도 하지 않아. 그래서 드라마도 없다는 결론이 나오지. 이 구원 받을 수 없을 것만 같은 감옥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여기가 정말 우리들이 살

106) 1963년 6월부터 1964년까지 잡지 『세대』에 연재된 최인훈의 장편소설. 최인훈은 1957년에 서울대 법대 4학년을 중퇴한 후 1958년에 입대해 1960년 4·19와 1961년 5·16 당시에는 군생활을 보내고 있었다. 군복무중부터 집필 활동을 시작해서 1960년에는 『광장』을 발표, 4·19세대 문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107) 4·19 이후 '갇힌 세대'라는 말은 일본에 의한 식민지 교육에 인하여 한국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한 4·19세대보다 이전의 구세대를 가리킬 단어이었다.

108) 최인훈, 『최인훈 전집2: 회색인』, (서울: 문학과지성사, 1991), pp74-75.



수 있는 단 하나의 장소일까 하고 의심을 품고, 그런 의심을 품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 감옥을 때려부르는 것, 이것이 이 시대를 사는 지식인의 길이 아니겠어? …(중략)…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극의 정신을 불러일으키는 것, 그리고 이 같은 정신을 전달하면서 단 한 사람에게 계라도 더 영향을 미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야.<sup>109)</sup>

이와 같이 《회색인》에서는 1950년대 후반의 한국 사회 상황에 불만을 품으면서도 구체적으로 행동하기에는 부정적인 입장과 뭔가를 해내고 싶다는 입장 두 형태의 대학생 심정을 그리고 있다. 그런데 이 대화 뒤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이어진다.

혁명. 피. 역사. 정치. 자유. 그런 낱말들이 그들의 자리를 풍성하게 만들고 있었으나, 그것들이 장미꽃·저녁 노을·사랑·모험·등산 같은 말과 얼마나 다른지는 의문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 무거운 낱말들-혁명·피·역사·정치·자유와 같은 사실의 책임을 잘 만한 실제의 힘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지배할 수 있는 것은 언어뿐이었다. '사실'에 영향을 주고, '밖'을 움직이는 정치의 언어가 아니라 제 그림자를 쫓고 제 목소리가 되돌아온 메아리를 되씹는 수인(囚人)의 언어 속에 살고 있었다. 그 속에서 그들이 몸부림치면 칠수록 현실은 더욱 멀어 보였다. 언어와 현실 사이에 가로놓인 골짜기를 뛰어넘는 길은 막혀 있었다. 그 골짜기를 이을 수 있는 다리를 놓기에는 그들은 너무나 초라한 '아이들'이었다.<sup>110)</sup>

그들은 '혁명'을 일으키고 싶었다. 그 '혁명'은 정치적 혁명일 수도 있고 대학생에 대한 사회 인식을 바꾸자는 '혁명'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들은 대학생이라는 '배운 자'로서의 자부심도 분명히 갖고 있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스스로가 '혁명'의 장을 만들기에는 너무나 취약했던 것이다. 대학생들이 행동을 일으킬 수 있는 장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던 3·15 부정선거 규탄 데모 밖에 없었으며, 김주열 학생의 희생이 기폭제가 되어 상승

---

109) 최인훈, 1991, pp76-77.

110) 최인훈, 1991, p83.

된 국민적 분노는 그들에게 투쟁의 이유를 제공하였다. 데모 직전에 고려대학교 교장에서 채택된 선언문은 다음과 같다.

친애하는 고대생 제군!

한마디로 대학은 반항과 자유의 표상이다. 이제 질식할 듯한 기성독재의 최후적 발악은 바야흐로 전체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 그러기에 역사의 생생한 증언자적 사명을 띤 우리들 청년 학도는 이 이상 억류하는 피의 분노를 억제할 수 없다.

만약 이같은 극단의 악덕과 패륜을 포용하고 있는 이 탁류의 역사를 정화시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후세의 영원한 저주를 면치 못하리라. 말할 나위도 없이 학생이 상아탑에 안주치 못하고 대사회 투쟁에 참여해야만 하는 오늘의 10대는 확실히 불쌍한 세대이다. 그러나 동족의 손으로 동족의 피를 뽑고 있는 이 악랄한 현실을 방관하라.

존경하는 고대 학생 동지 제군!

우리 고대는 과거 일제하에서는 항일 투쟁의 총 본산이었으며 해방 후에는 인간의 자유와 존엄을 사수하기 위하여 멸공 전선의 전위적 대열에 섰으나 오늘은 진정한 민주 이념의 쟁취를 위한 반항의 봉화를 높이 들어야 하겠다.

고대생 동지 제군!

우리는 청년 학생만이 진정한 민주 역사의 창조와 역군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여 총결기하자.<sup>111)</sup>

선언문에는 "피의 분노"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학생은 "대사회 투쟁에 참여해야만 하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고등학생과 시민들이 피를 흘려 싸우고 있는데 대학생만이 밖에 가만히 있다는 상황에 의문을 던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기성독재"가 "전체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이승만 하야' 같은 구체적 요구까지는 아직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4월 18일과 4월 19일 처음에 대학생 운동 참여를 조직하고 지도한 자들은 학생회가 아니라 『회색인』에 나온 '달한 세대'와 같은 소규모 그룹들이었다.<sup>112)</sup> 구호와 함께 생각해봐도 대학생들은

111) "선언:고려대", 4·19혁명기념도서관 홈페이지, <http://library.419revolution.org/> (2013년 11월 2일 최종 접속).

아무런 조직적 준비나 요구 없이 부랴부랴 데모의 장에 나선 가능성이 높다.

고려대 학생들은 데모를 마치고 학교로 돌아가는 길에서 다시 사건이 일어났다. 오후 7시 20분 쯤 데모대가 종로 4가에 위치한 천일백화점 앞을 지나갔을 때 골목에서 약 100명의 반공청년단의 기습을 당한 것이다. 반공청년단 정치 깡패들은 쇠파이프, 쇠갈고리, 몽둥이, 벽돌 등으로 데모에 참가한 고려대 학생들을 공격해 수십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 습격 사건은 대학생도 드디어 "피의 분노"를 현실화시킨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대학생과 거리가 있었던 데모는 이제 대학생들에게도 남의 일이 아니게 되었다. 다음 날 4월 19일에는 약 10만 명 규모의 대학생 데모가 서울에서 일어났고 데모대 학생들은 시가행진을 감행했다. 그들은 "학원에 간섭하지 말라"는 2월부터 고등학생들이 사용했던 구호와 함께 '민주주의'라는 말을 적극적으로 구호로 사용하였다.

고려대 학생들은 "행정부는 명실상부한 민주정치를 실천하라"<sup>113)</sup>는 말을 결의안에 포함시켰고 "민주역적 몰아내라"<sup>114)</sup>고 플래카드에 써서 외쳤다. 고려대 결의문은 다음과 같다.

一, 꺾기(蹶起)하라 애국동포(愛國同胞)여36년(三六年)을두고 피흘려전취(戰取)한 우리민주주의(民主主義)가지금 몽둥이와 총검(銃劍)앞에서 피흘리며 애소(哀訴)하는 저구슬픈소리를 우리는 듣고 있지 않는가<sup>115)</sup>

서울대에서는 4월 19일 아침에 각 단과대학 게시판에 다음과 같은 격문이 붙였다.

여기 대학의 양심은 증언한다. 우리는 보다 안타까이 조국을 사랑하기에 보다 조국의 운명을 염려한다. 우리는 공산당과의 투쟁에서 피를 흘려온 것처럼 사이비 민주주의 독재를 배격한다. 조국애의 사랑과 염

---

112) 이종오, 1991, p208 각주.

113) "다시 격발된 학생 데모", 『동아일보』, 1960년 4월 19일.

114) "서울·부산·청주시 대규모 데모", 『동아일보』, 1960년 4월 19일.

115) "집권당(執權黨)은사죄(謝罪)하라", 『동아일보』, 1960년 4월 19일 석간.

원이 맹목적 분격에 흐를까. 우리는 얼마나 참아 왔던가.  
 보라! 갖가지의 부정과 사회악이 민족적 정기의 심판을 받을 때는 왔다.  
 이제 우리는 대학의 엄연한 양심으로 일어나노니 총칼로 저지치 말라.  
 우리는 살아있다.  
 동포의 무참한 살상 앞에 안일만을 탐할소냐!  
 한숨만 실소냐!  
 학도여! 우리 모두 정의를 위하여 총궐기하자!<sup>116)</sup>

격문에서는 "우리는 공산당과의 투쟁에서 피를 흘려온 것처럼 사이비 민주주의 독재를 배격한다"는 말이 있다. 1950년대 이승만 정권은 대학생들을 반공 데모에 자주 동원하였다. 4·19에 나서기 전까지 대학생들이 경험한 데모는 반공 데모 밖에 없었다. 대학생들은 4월 19일 데모 참가의 의의를 이승만 정권 유지에 이용된 대학생들의 모습과 별로 모순이 없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이 모순이 4월 19일의 데모가 정말로 대학생들의 자주적인 이승만 타도를 위한 데모였는지를 의문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서울대 학생들은 4월 19일 선언문에서 "민주주의이면의 최저의 공리인 선거권마저 권력의 미수 앞에 농단되었다"<sup>117)</sup>고 이승만 정권을 비난했다. 그런데 '비난'을 한 것이지 역시 '타도'까지는 주장하지 않았다. 동국대 학생들은 경무대 앞에서 "우리들은 폭도가 아니다. 이 나라 최고 학부에서 민주주의를 배우고 있는 대학생들이다"<sup>118)</sup>고 외쳤다. 연세대 학생과 홍대학생들은 "경찰은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sup>119)</sup>고 했다. 어느 대학 소속의 학생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민주주의 사수하자"라고 쓴 깃발을 들은 자도 있었고<sup>120)</sup>, "민주 위한 학생 데모를 총칼로써 저

116) 「격문: 서울대」, 4·19혁명기념도서관 홈페이지, <http://library.419revolution.org/> (2013년 11월 2일 최종 접속).

117) "폭력이 이적이다 각대학 선언문 사이비 민주주의를 배격", 『동아일보』, 1960년 4월 20일.

118) "피로 물들인 경무대 앞", 『동아일보』, 1960년 4월 20일.

119) "폭력이 이적이다 각대학 선언문 사이비 민주주의를 배격", 『동아일보』, 1960년 4월 20일.

120) "부정선거 규탄학생 『데모』 전국에 확대", 『동아일보』, 1960년 4월 20일.

지 말라"는 구호를 외친 사람들도 있었다.<sup>121)</sup>

<표 II-2> 1960년 4월 19일 데모에서 사용된 구호

학교명	구호(사용 방법)	장소
고려대학교 (4월 18일)	-기성세대는 각성(자성)하라 <sup>122)</sup> -마산사건의 책임자를 즉시 처단하라 <sup>123)</sup> -우리는 행동성 없는 지식인을 배격한다 <sup>124)</sup> -경찰의 학원출입을 엄금한다(엄금하라) <sup>125)</sup> -오늘의 평화적 시위를 방해 말라(방해치 말라) <sup>126)</sup>	고려대
	-민주 역적 몰아내자(플래카드) <sup>127)</sup> -자유 정의 진리 드높이자(플래카드)	고려대~대평로 국회의사당 앞
서울대학교	-누구도 신용할 수 없다(플래카드) <sup>128)</sup> -민중의 비탄은 신화되었다(플래카드) <sup>129)</sup> -3·15부정선거 다시 하라(외침) -기성층은 각성하라(외침) -대학의 양심을 증언한다(격문) -민주주의 바로 잡아 공산주의 타도하자(외침) -대한민국 생명선이 대법원에 달려있다(외침) -대모가 이적이냐? 폭정이 이적이냐?(외침)	
동국대학교	우리들은 폭도가 아니다. 이 나라 최고 학부에서 민주주의를 배우고 있는 대학생들이다. 우리들은 이대통령을 직접 만나 모든 부정사실을 알리려고 한다. 우리들을	경무대 앞

121) "민주주의 바로잡아 공산주의 타도하자 데모대 구호", 『동아일보』, 1960년 4월 20일.

	막지 말라(외침)	
건국대학교	-경찰은 정의의 불을 끄지 말라 -대법원은 현정부에 아부하지 말라(외침) -3·15선거 무효판결 하라(외침)	내무부 앞
	-내무장관은 마산학생들을 모두 석방하라(외침) -정의의 싹을 죽이지 말라(외침) -전우가, 6·25의 노래(합창)	
연세대학교 홍익대학교	-권력에 아부하는 간신배들의 축출을 요구 -경찰은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 -정부는 마산사건에 책임을 지도록	
중앙대학교	학생은 폭력에 굴하지 않는다(플래카드)	
숙명여자대학교	-부정선거를 지시한 사람을 없애버려라 -대통령부근에 있는 간신배들을 타도하라	
	-이의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라 -이의장은 사과하라	이기봉 택 근처
	-이승만 박사 물러가라(외침) -불법으로 치른 3·15선거를 다시하자(외침) -3·15선거를 불법으로 감행한 책임자들이 자리에 불러내자(외침) -민주주의 바로 잡고 공산주의 타도하자 -마산학생 석방하라	국회의사당 앞
	-민주주의 사수하자(깃발) -민주 위한 학생데모 총칼로써 저지 말라 -학원자유 보장하여 구국애족 선봉되자 -이놈 저놈 다 글렀다 국민은 통곡한다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허용하라 -경찰은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 -부정공개투표의 창안집단을 법으로 처단	

	하라 -3·15선거는 협잡이다(외침) -정·부통령선거 다시하자(외침) -이승만 개새끼(외침) <sup>130)</sup>	
--	--	--

출처: 『동아일보』 1960년 4월 20일, 26일 기사. 그 외는 각주 참조.

각 대학교 학생들이 사용했다는 구호를 보면 이승만을 직접 규탄하는 말은 4월 19일 시점에는 거의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문에서는 "이승만 박사 물러가라"는 구호가 사용되었다는 보도가 있었고 4월 19일을 회고한 사람도 "이승만 개새끼"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지만 어느 학교 어느 학생이 외친 구호인지 분명하지 않다. 적어도 4월 19일 시점에서 이승만의 하야는 대학생들의 직접적 요구가 아니었다. 또한 2월부터 계속된 고등학생 데모에 비하면, 데모에서 사용된 구호의 종류는 다양해졌지만 정리되지 않았고 구체적 요구가 드러나지 않았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대학생들은 이승만 정권을 지지하는 데모에는 동원되어왔지만, 4·19에 참여하기 전까지 반정권 데모에 참여한 경험은 거의 없었고 이승만을 위대한 애국자이자 국부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지적되고 있다.<sup>131)</sup> 이러한 배경 하에 데모에서 사용된 구호들을 함께 살펴보면 대학생들이 급하게 데모에 나서게 된 것을 알 수가 있다.

122) 강준만, 2004, p25. 빈칸은 4.19도서관 수집 자료 판. <http://library.419revolution.org/> (2013년 10월 8일 접속.).

123) 강준만, 2004, p25.

124) 강준만, 2004, p25.

125) 강준만, 2004, p25. 빈칸은 4.19도서관 수집 자료 판. <http://library.419revolution.org/> (2013년 10월 8일 접속.).

126) 강준만, 2004, p25. 빈칸은 4.19도서관 수집 자료 판. <http://library.419revolution.org/> (2013년 10월 8일 접속.).

127) 강준만, 2004, p25.

128) 박세길, 『다시쓰는 한국현대사 2: 휴전에서 10·26까지』, (돌베개, 1989), p83.

129) 박세길, 1989, p83.

130) 고정훈, 1966년 4월, p183.

131) 서중석, 「4월혁명운동기의 반미·통일운동과 민족해방론」, 『역사비평』, (1991년 가을), p160.

아침에 각 대학을 출발한 데모대는 거의 모두가 국회의사당으로 집결했다. 그러다가 오후 1시 30분경에 한 명의 학생이 세워둔 소방차를 운전해 경무대 방향으로 진행했는데 그 뒤를 약 1,000명의 데모대가 따라갔다. 그 데모대가 경찰 저지선 10 미터까지 접근했을 때 경찰이 발포를 시작해 더구나 구타 공격을 시작했다. 이 싸움으로 21명이 사망했고, 172명이 부상을 입었다.<sup>132)</sup> 경무대만이 아니라 오후 3시쯤에 서울시 경찰서 무기고 앞에서, 오후 4시에는 부대통령 후보자 이기봉 집 앞 등에서도 총격이 있었다.

4월 19일 데모에 참여한 자는 대학생만이 아니었다. 서울시내 중고등학생들도 데모에 나섰고, 신문팔이, 구두닦이, 냉마주이, 껌팔이 등 비교적 가난한 사람들도 상당수 포함되어있었다. 그들은 중앙청 담을 넘어 문교부, 부흥부를 습격해 문교부 장관 전용차 등에 불을 치르고 중앙청 등사실, 문교부 영화 검열실 등을 파괴했고 대학생들에 못지않게 독하게 싸웠다.<sup>133)</sup> 데모부터 시작한 싸움은 밤까지 계속되고 새벽 1시쯤이 돼야 계엄군이 포위된 데모대는 고려대까지 내려와 무장 해제되었다. 계엄사령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날 하루 동안에 발생한 사망자 수는 민간인이 111명, 경찰이 4명, 부상자 수는 민간인 558명, 경찰 169명이었다.<sup>134)</sup> 이것이 바로 4월 19일이었다.

『사상계』 지식인은 4월 20일에 바로 '4·19'라는 호칭을 마련했다. 이 날이 부정선거 직후 제1차 마산사건이 일어난 '3.15'에 못지않게 중요한 날로 인정을 받은 것이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4·19가 부각되면서 부정선거 규탄 운동의 주인공이자 주체가 고등학생부터 대학생으로 전환되었다. 이미 데모에서 활약했던 고등학생과 대학생은 같은 '학생'이었고 이 '학생'이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갑자기 등장한 대학생들도 마치 오래 활약해온 자처럼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가 있었다. 대학생들이 무엇보다 갈망하고 있었던 것은 바로 사회적 인정이었다. 사회적 인정을 원하는 대학생과 인정을 줄 수 있는 지식인 사이에서 처음으로 연대가 형성되었다. 즉 '4.19'라는 말의 탄생은 『사상계』 지식인과 대학생 사이의 일종의 공범관

132) 이재오, 2011, p164.

133) 이재오, 2011, p164.

134) 이형, 『조병옥과 이기봉: 제1공화국 정치사의 재조명』, (삼일서적, 2002), pp303-304.



계 속에서 성립된 것이다. '4·19' 당시의 지식인과 대학생들 사이의 연대감을 보여주는 에피소드가 있다. 『사상계』에서 일하던 박경수<sup>135)</sup>는 이때 상황을 다음과 같이 후설하고 있다.

《사상계》가 들어 있는 종로 네거리 옛 화산백화점 건너편의 한청빌딩은 4월 혁명의 와중에서 늘 한복판에 있는 셈이었다. 학생들의 물결은 광화문 네거리에서 동대문까지의 종로 거리를 메웠다. 한청빌딩 머리에 내걸린 《사상계》의 깃발은 그것을 지켜보며 나부꼈다. 파란 바탕에 흰 글씨로 제호 '思想界' 석 자만을 그 독특한 글자체 그대로 새겨 넣고 아무 문양이 없는 이 사기(社旗)를 장준하는 무던히도 사랑하여 어디서 강연이나 행사를 할 때도 연단에 그것을 걸었고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도 그것을 만들어 꽂고 다녔다. 그래서 대부분이 학생인 시위인 파에게도 그 깃발은 낮이 익었다.

종로 네거리를 매우며 지나던 시위대는 한청빌딩에 걸려 나부끼는 그 깃발을 보고는 움직임을 멈추거나 또는 그쪽을 향해 올려다보며 뜨거운 환호를 올렸다. 그것은 그 깃발과 시위대간에 교환되는 공감의 우렁찬 확인이자 승화였다.<sup>136)</sup>

날짜와 어느 대학교 학생들에 관한 이야기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18일에는 고려대 학생들이 시가행진에서 종로4가를 지나갔고 19일에도 서울대 학생들이 지나갔다는 것을 신문보도에서도 알 수 있다. 이 에피소드는 종로거리가 4·19의 무대였다는 것과 함께 『사상계』가 대학생들에게 어떤 존재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1960년 4월 20일부터는 대구, 전주, 인천, 수원 등 전국적으로 대학생 데모가 확장되어갔다. 이승만 정부는 사태 수습을 위해 4월 19일 오후에 서울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그것과 함께 계엄법 13조에 따른 언론 검열 시작을 결정했다. 검열은 "치안 확보상 유해로운 기사·논설·만화 등으로 이번 소요에 관련하여 선동 왜곡 과장된 내용"<sup>137)</sup>이 삭제의 대상이 되었고

135) 1957년 사상계에서 실린 단편소설 「그들이」로 데뷔했다. 1971년에는 한국문학상을 수상. 창작 활동만이 아니라 사상계 편집기자로서도 활약했다.

136) 강준만, 2004, p25.

137) "기사·만화 사전 검열", 『동아일보』, 1960년 4월 20일.

가장 심할 때는 한 페이지의 3분의 1 가까이가 삭제되었다. 그리고 정부는 서울에서 반공회관이 불탄 것을 이유로 또 사태에 공산주의자가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여 데모의 반미적 색채를 지적하였다. 그런데 『사상계』 지식인은 다시금 이걸 부정하였다.

이번 4·19사태(四·一九事態)는 단호(斷乎) 「빨갱이」의사주(使嗾)가아니다. 더구나 반미감정(反美感情)같은것은추호(秋毫)나 있을턱이없다. 그리고 반공회관(反共會館)(반공청년단(反共靑年團))은 불탔을 망정, 그 정문(正門) 옆에 세운 「맥아더」동상(銅像)은 까딱도없다.<sup>138)</sup>

고등학생들을 공산주의 협위부터 옹호해줬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사상계』 지식인은 대학생 편이 들어서 데모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리고 4월 24일 『동아일보』 사설에서는 4월 18일 이후에 일어난 대학생 데모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천인(天人)이 공노(共怒)할 악랄(惡辣)한 수법(手法)으로 3·15(三·一五)의 무법(無法) 불법선거(不法選舉)를 자행(恣行)한 무리들, 그로하여모든 법질서(法秩序)와 사회질서(社會秩序)를파괴(破壞)하고 민주주의건설(民主主義建設)의 희망(希望)을 송두리째 짓밟아버리고 국가(國家)의 존립(存立)마저 멸망(滅亡)의일보전(一步前)까지 몰아넣은 추악무쌍(醜惡無雙)한 도당들에 대한 성스러운 투쟁이었다.<sup>139)</sup>

그런데 '4.19'라는 낱자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이라고 규정되었지만 '4·19' 뒤에 오는 단어는 여전히 확정되지 않았다. 신문 보도에서는 '4.19사태', '4.19사건', '4.19데모', '4.19학생의거'라는 명칭들이 섞여서 사용되었고 기사마다 날마다 변해갔다.

1960년 4월 18일부터 일주일이 지난 4월 25일에 서울에서 약 300명의 교수들에 의한 교수단 데모가 일어났다. 고려대 이종우, 서울대 이희승, 연세대 정석해, 성균관대 조운재 등이 주동적 역할을 했다.<sup>140)</sup> 데모는

138) “횡설수설”, 『동아일보』, 1960년 4월 24일 조간.

139) “희생 학도들의 영전에 드린다”, 『동아일보』, 1960년 4월 24일.

은밀하게 각 대학교수들에게 통고되었고, 전날 24일에는 고려대 교수 민병기는 조선일보 논설위원이던 고정훈을 찾아 교수단 데모에 외국인 기자들을 동원하는 것과 군대의 중립을 지키는 일들을 부탁했다고 한다.<sup>141)</sup> 이러한 준비 뒤에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전체 교수회의가 열렸다. 거기서는 14항목으로 구성된 ‘시극선언’이 채택되었는데 첫 네 항목이 이후의 ‘4·19’ 규정의 방향을 정하고 있다.

一, 마산(馬山), 서울 기타각지(其他各地)의학생(學生)「데모」는 주권(主權)을 빼앗긴 국민(國民)의 울분(鬱憤)을 대신하여 궤기(蹶起)한 학생(學生)들의 순진(純眞)한 정의감(正義感)의 발로(發露)이며 부정(不正)과 불의(不義)에는 항거(抗拒)하는 민족정기(民族正氣)의 표현(表現)이다.

二, 이 「데모」를 공산당(共產黨)의 조종(操縱)이나 야당(野黨)의 사주(使喚)로 보는 것은 고의(故意)의 곡해(曲解)이며 학생(學生)들의 정의감(正義感)의 모독(冒瀆)이다.

三, 평화적(平和的)이요 합법(合法)인 학생(學生) 「데모」에 총탄(銃彈)과 폭력(暴力)을 기탄(忌憚)없이 남용(濫用)하여 대량(大量)의 유혈(流血)·참극(慘劇)을 빚어낸 경찰(警察)은 「민주(民主)와 자유(自由)」를 기본(基本)으로 한 국립경찰(國立警察)이 아니라 불법(不法)과 폭력(暴力)의 정권(政權)을 유지(維持)하려는 일부정치집단(一部政治集團)의 사병(私兵)이었다.

四, 누적(累積)된 부패(腐敗)와 부정(不正)과 횡포(橫暴)로서의 민족적(民族的) 대참극(大慘劇)·대치욕(大恥辱)을 초래(招來)케 한 대통령(大統領)을 위시하여 국회의원(國會議員) 및 대법관(大法官) 등은 그 책임(責任)을 지고 물러나지 않으면 국민(國民)과 학생(學生)들의 분노(憤怒)는 가라앉기 힘들 것이다.<sup>142)</sup>

140) 이재오, 2011, P168. 이들은 잡지 『사상계』의 동인이기도 했다. 특히 서울대 교수 이희승은 1955년부터 1968년까지 33개 논문과 시를 기고하여 1개의 좌담회에 참석, 서울대 교수 이종우도 10개 논문을 기고하여 3개의 좌담회에 참석했다. 사상계 데이터베이스, <http://www.koreaa2z.com/ssg/>. (2013년 11월 2일 접속 조사).

141) 고정훈, 1966년 4월, p184.

142) “계엄하(戒嚴下) 서울에 또 『데모』 돌발(突發)”, 『동아일보』, 1960년 4월 26일 석간: 「이번 4·19의거는 이 나라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중대한 계기다», 4·19혁명기념 도서관 홈페이지, <http://library.419revolution.org/>. (2013년 11월 2일 접속).

'불정과 불의에 대한 국민의 울분을 학생들이 대신해 일으킨 민주와 자유를 위한 민족의 항거였다'는 것이 4월 25일에 정해진 '4·19'였다. 그리고 이 항거는 공산당이나 야당과는 무관한 것이고 사태가 가라앉기 위해서는 대통령을 비롯한 책임자들이 권력장에서 내리는 것이 최선의 길이었다. "민주와 자유" 그리고 "공산당의 사주가 아니다"는 부분이 강조된 이유는 북한에서 4·19가 '인민 봉기', '공산주의혁명'으로서 환영받고 있다는 소문이 당시 한국 사회에서 전해졌던 것과 관련이 있다. 실제 북한 조선로동당과 사회단체들이 4월 21일과 27일에 잇달아 '남북 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를 제기하고 있었다.<sup>143)</sup> 교수들은 시극사태에서 4·19와 북한 공산주의와의 관계를 완전히 부정하고 학생들이 데모에 나선 이유도 한국 국내 문제이지 남북관계가 재구성된다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다.

교수단은 서울대 교수회관을 나가서 "학생 피에 보답하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이승만 대통령 물러가라"고 외치면서 시가행진을 했다.<sup>144)</sup> 여기에 대학생을 비롯한 서울 시민들도 합류해 한 때 데모대 수는 1만 명을 넘기도 했다. 데모는 밤늦게까지 계속되었고 일부 10대 청소년들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철야농성까지 했다.

그 다음 날인 4월 26일에 드디어 이승만은 하야선언을 발표했다. 그리고 4월 27일 『동아일보』 사설에서는 처음으로 '4.19민주혁명(四·一九民主革命)'이라는 호칭이 사용되었다.<sup>145)</sup> 이후 '혁명'이라는 말이 당분간 사용됐다. 데모가 성공하고 사건이 '혁명'으로 규정되자 대학생들은 바로 치안유지를 위한 조직을 구성하였다. 4월 27일 『동아일보』 사설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생의 치안유지에 대한 책임을 논했다.

그러나 학생제군(學生諸君)! 제군(諸君)의 정치투쟁(政治鬪爭)의 과업은 이미 일단락(一段落)을 지었다고하여 그것만으로서 임무완료(任務完了)로생각해서는 안된다. 제군(諸君)들은 솔직히 말해 이제겨우 민주(民主)의 씨를 뿌린데 지나지 않는다. 이제 그뿌린 씨를 가꾸어 열매

143) 천정환, 2005, pp207-208.

144) "햇불올린교수단(教授團)", 『동아일보』, 1960년 4월 26일 석간.

145) "정국수습의 기본적 순서", 『동아일보』, 1960년 4월 27일.

를 맺게하고이를 고이 걷어들이는것도주(主)로 제군(諸君)의 책임(責任)인것이다....(중략)...학생(學生)은 제군(諸君)이존경할 수 있는 교수(教授)의 도움을얻어 전국각지(全國各地)에 걸쳐지역별(地域別)로치안대(治安隊)를 조직하여 계엄사령부(戒嚴司令部)나 정부당국(政府當局)과 협조(協調)하여 치안유지(治安維持)와 질서(秩序)유지에 주력(注力)해주기를 바라는바이다.

학생제군(學生諸君)은 제군(諸君)이 피로서 쟁취(爭取)한 자유(自由)와 민주주의(民主主義)를 부식할 수 있는 사회(社會)가 도둑놈이 횡행(橫行)하고 오열(五列)이 날뛰는 사회(社會)가 되지않기를 원치않을것인가.<sup>146)</sup>

『사상계』 지식인들이 볼 때 불안정한 사회는 공산주의자들이 틈을 타 활동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공간이었다. 『사상계』 지식인들이 대학생을 4·19의 중심으로 놓자고 한 것은 대학생이 4·19 이후의 혼란 상태를 사로잡을 수 있는 조직력을 갖고 있는 자들이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실제 대학생 측에서는 질서 유지 요청을 받아 '학생수습대'가 긴급 결성되었고 치안확보에 협조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게 되었다. 4월 26일 오후에 대학생들은 "질서를 잡자"나 "남은 것은 건설이다"<sup>147)</sup>, "모두 집으로 돌아갑시다"<sup>148)</sup>라는 구호를 외치고 데모대 해산을 요청했다. 계엄사령부는 150명의 대학생들을 각 경찰서에 학교별로 배치하고 치안유지 협력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4월 26일 이후 점점 대학생 쪽에서도 신문의 투고란 같은 공적 장소에서 자신들이 데모에 참가한 이유를 밝히자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예를 들어 4월 28일 『동아일보』 "4.19의거(義舉)에대한학생작단(學生作壇)"이라는 특집에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생이 대학생들의 데모 참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사실(事實) 우리는 평화적(平和的)인 데모에 좀 늦은감(感)도 없지 않

146) "각서(各署)에학생배치(學生配置)", 동아일보, 1960년 4월 27일.

147) "대학생(大學生)들 질서유지(秩序維持)에진땀", 『동아일보』, 1960년 4월 27일.

148) 천정환 외, 2005, p199 사진.

았다. 우리 백만학도(百萬學徒)는현위정자(現爲政者)들이시도(試圖)하였던, 항간(巷間)에서말하는소위(所謂) 조기선거(早期選舉) 정·부통령입후보등록(正·副統領立候補登錄) 방해등(妨害等) 국민기본인권(國民基本人權) 유린과 부정개표(不正開票)를 억지로 참았다...(중략)...목적(目的)은 어디까지나 『민주주의(民主主義)를 바로잡고 공산주의(共產主義)를 타도(打倒)하는 것』인데 이선(線)을 넘어 이성(理性)을잃고 기분나는대로 말을 뇌까려서는안되겠다.<sup>149)</sup>

인용문에서 데모의 목적은 '민주주의'였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으며 그 반대 사항으로 '공산주의'를 배치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1960년 4월 19일 당시에 이미 학생 사이에 널리 공유되었던 데모의 명분이었다. 또한 앞에서 서술한 고등학생들의 데모 전개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사상계』 지식인 측도 이러한 대학생의 태도를 원했다. 즉 대학생 데모가 일어난 당시의 『사상계』 지식인과 대학생 간에서 이루어진 연대를 형성시킨 핵심적 부분은 '자유민주주의'인 동시에 '반공'이었던 것이다. 이 시기까지는 지식인이 원하는 대로 대학생들은 자유민주주의적이며 반공적 4·19 주체로 간주되었고 그들은 4·19 후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치안유지에 매우 협조적이었다. 이 시기는 『사상계』 지식인과 대학생의 연대가 가장 강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 Ⅲ. 4·19 초기 담론의 혼란기-『사상계』 지식인과 대학생의 연대 쇠퇴

#### 1. 데모의 만연과 '4월혁명'으로의 전환

1960년 4월 27일 이후 신문 보도에서는 대학생들을 상기시키는 '4.19'라는 날짜와 함께 '4·26'이라는 날짜가 함께 사용되었다. 대학생의 전유물이 된 '4·19'에 비해 4월 26일에 일어난 데모는 교수단이 앞선 뒤

149) “4.19의거(義舉)에대한학생작단(學生作壇)”, 『동아일보』, 1960년 4월 28일.

학생 그리고 일반 시민이 따라했다는 과정 때문에 '4·19'에 비해 다양성을 내포하고 있는 낱짜였다. 5월부터 6월까지 지식인들은 '4.19혁명', '4.26혁명', '4.19의거' 등 다양한 호칭을 나란히 사용했다. 그리고 '4.19'와 '4.26'을 함께 묶은 '4월혁명'이라는 말도 5월에 빈번하게 쓰이기 시작하였다. 특히 '혁명'이라고 할 때는 학생보다 '민중'<sup>150)</sup>이라는 주체가 의식되어 있었다.

예컨대 1960년 6월에 잡지 『사상계』 82호는 「민중의 승리」 기념호라는 제목 하에 발간되었는데 거기에 개재된 논고들은 공통적으로 4월까지 일어난 일을 '민주혁명'으로 규정하고 그 주체를 '민중'으로 보고 있다. 민석홍<sup>151)</sup>은 「현대사(現代史)와 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 4월혁명(四月革命)의 이해(理解)를 위하여」에서 "4월혁명(四月革命)은 바로 「국민혁명(國民革命)」이라고 했고 '4·19'와 '4·26'을 합친 '4월혁명'의 대중성을 논했다.<sup>152)</sup> 그리고 『사상계』의 편집위원이자 정치학자였던 신상초<sup>153)</sup>는 '4·19'와 '4·26' 그리고 '혁명'이라는 호칭을 다 같이 쓰면서 혁명의 배후에 존재하는 주체의 범위를 강조하고 있다.

4·19(四·一九)혁명은 주로 학생들에 의해 추진되었기 때문에 「학생혁명(學生革命)」이라는 칭호를 받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보아 그것이 정치학상의 「시민민주혁명(市民民主革命)」이라는데 대해서는 의문(疑問)의 여지가 없다. 왜냐 하면 학생이 타도이승만폭정(打倒李承晩暴政)의 행동부대로서 눈부신 활동을 했지만 이는 폭정을 뒤집어 엎고 민주정치의 확립을 요구하는 시민(市民)의 전위대로서 활동한 것이기 때문이요, 또 이 혁명(革命)이 제대로 완성되면 국민일반(國民一般)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공동생활(共同生活)의 제분야(諸分野)에 걸쳐 혜택을

150) 이 '민중'이라는 말은 『사상계』 상에는 자주 사용된 말이었지만 당시 한국 사회에서는 일반적인 단어가 아니었다는 점에 유의해야 된다.

151) 1925~2001년, 서울 출신. 4·19 당시 연세대학교 문과대 부교수. 서양사 전공이고 혁명사에 관한 논문들을 지속적으로 발표하였다. 1961년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전임교수가 돼, 서울대학교 대학신문 편집국장, 교양학부 부장, 재외국민교육연구소 소장, 인문대 학장 등 역임했다.

152) 민석홍, 「현대사(現代史)와 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 4월혁명(四月革命)의 이해(理解)를 위하여」, 『사상계』, 제83호, (1960년 6월), p98.

153) 1922~1989년. 평안북도 정주 출신이고 1949년에 월남. 성균관대학교나 경희대학교에서 강의하면서 언론인으로서 동아일보나 중앙일보에서 논설위원으로 활동했다.

입계꿈 되어 있기 때문이다.<sup>154)</sup>

1960년 5월 이후부터 계속된 사건 규정과 호칭의 혼란 뒤, 7월말에 문교부는 다양한 호칭들이 아동교육에 적지 않은 혼동을 가져오고 있다는 이유로 호칭의 통일을 제안했다.<sup>155)</sup> 언론계와 대학 교수 약 110명에 통일 방안을 설문한 결과 '4월혁명'이 채택되었다. 4월부터 3개월이 지난 7월에 '4월혁명'이 공식적 호칭이 된 것이다.

그런데 문교부의 결정뿐만이 아니라 호칭 혼란의 사회적 배경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호칭의 변화는 그 사건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다양한 호칭들이 나란히 사용되었다는 것은 호칭을 규정하는자들 간에서도 혼란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1960년 5월부터는 2월부터 4월 사이에 걸쳐 한국사회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평가가 시작된다. 5월 이후에도 여전히 『사상계』 지식인들은 대학생들을 혁명의 주체로 높이 평가했다. 그런데 높은 평가 뒤에는 항상 한 마디 붙은 말이 있었다. '학생은 학원에 돌아가라'이다. 5월 2일 『동아일보』 칼럼에서는 "학생들은 어디까지나 학생들, 뭇을 바라는 것이 있을 턱이 없다"고 했다.<sup>156)</sup> "학생은 어디까지나 학생"이라는 말은 '순국학생위영제'가 열린 5월 19일 『동아일보』 사설에서도 다시 나온다.

학생(學生)들에게 정치(政治)에 대한 관심(關心)을 전혀 가져서는 안된다기보다는, 학생(學生)은 어디까지나 학생(學生), 그 「본분(本分)」과 「본업(本業)」에서 상도(常道)에 이탈(離脫)된 행동(行動)은, 이것을 자계(自戒)·자제(自制)해야만 되겠다는 것이다.<sup>157)</sup>

그리고 5월 24일 『동아일보』 칼럼에도 학생들이 일으킨 혁명이었다

---

154) 신상초, 「이승만폭정의 종언: 4.26은 혁명의 종말이 아니라 시발점이다」, 『사상계』 제83호, (1960년 6월), 이외에도 부완혁의 「혁명의 현단계와 금후」나 고병익의 「혁명에서 「운동」으로」등이 같은 노조로 민중들이 주체의 민주혁명을 논하고 있다.

155) 「사월혁명(四月革命)」으로 앞으로 호칭(呼稱)을 통합(統合)», 『동아일보』, 1960년 7월 29일 조간.

156) "횡설수설", 『동아일보』, 1960년 5월 2일.

157) 「순국학생위영제(殉國學生慰靈祭)」를 맞으며, 『동아일보』, 1960년 5월 19일 조간.



는 것을 강조한 다음에 충고 내용이 나왔다.

학생은 4·19이전(四·一九以前)으로 되돌아가라는 것이다. 그렇게하여야만 학생(學生)들은 4월혁명(四月革命)을 일으킬수있었던 명경지수적(明鏡止水的) 판단력(判斷力)을 잃지않을 것이다"<sup>158)</sup>

『사상계』 지식인들은 학생들에게 학원에 다시 돌아가기를 권했다. 4·19의 주체로서 평가한 대학생들에게 4.19 이전에 돌아가라고 말한 것이다. 이러한 말은 4·19 이후의 혼란을 수습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말이지만 동시에 대학생들이 5월부터 일으킨 수많은 데모들과도 관련이 있다.

1960년 5월 이후 대학생과 관련해서 문제가 부각된 것은 이승만 독재정치 세력의 제거였고 각 대학교에서는 '학원의 정화' 운동이 연달아 일어났다. 이것은 5월 3일에 이승만 정권의 어용 학생단체였던 학도호국단이 해체되고 학교 안에서 학생회 같은 조직이 탄생함으로써 자유당을 중심으로 한 반혁명 세력과 통하고 있는 학교 운영자로 간주된 일부 교수들 들 규탄한 운동이었다. 『사상계』 1955년 6월호 '학생에 보내는 특집'에서 논의된 '학원의 자유' 논의부터 시작하여 1960년 2월에 고등학생들이 데모에서 사용한 '학원에 자유를 달라'라는 구호와 맥을 같이하는 운동이었다. 그럼 의미에서 『사상계』 지식인들이 규정한 4·19의 가치와도 어긋나지 않은 운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 왜 『사상계』 지식인들은 4·19 이후의 대학생 데모에는 소극적 평가를 내렸을까. 그것은 학생들의 관심이 질서수습이나 학원의 자유로부터 점점 벗어나기 시작한 데에 이유가 있다. 대학생들의 데모나 소동은 국회나 과도정부 반대 데모로 확장되어가고 있었다. 6월 1일 『동아일보』 사설은 다음과 같이 대학생들의 행동을 비난했다.

국회해산(國會解散)이나 과도정권(過渡政權)의 퇴진(退陣), 그밖의문제 등(問題等)은 어디까지나 정치적(政治的)인문제(問題)요, 학생(學生)들로서는 운위(云謂)할성질(性質)의것이아니다. 그러한영외(領外)의 중대문제(重大問題)를가지고 학생(學生)들의신분(身分)으로서 광과(曠課)를

158) "횡설수설", 『동아일보』, 1960년 5월 24일 조간.

하면서까지거리로 물려나온다든가, 의사당(議事堂)앞에 장시간농성(長時間籠城)·포진(布陣)할 필요성(必要性)이있는가하는문제(問題)부터 다시생각해볼일이다. 그러지 않아도 일부불순세력(一部不純勢力)가운데엔 선량(善良)·착실(着實)한 학생(學生)들의 틈을부비고 음(陰)으로 양(陽)으로 선동(煽動)을하기에몰두(沒頭)하고있어, 학생(學生)들자신(自身)으로서는 일상그 외부(外部) 정치세력(政治勢力)의 침투(浸透)를극히경계(警戒)해야될때다.<sup>159)</sup>

지금까지 학생들의 행동을 받아줬던 지식인들은 대학생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가장 문제였던 것은 불특정다수의 젊은이들의 모임인 대학생 데모가 오래 가면 갈수록 거기에 공산주의 세력이 개입할 위험성도 높아진다는 데에 있었다. 어떻게 보면 『사상계』 지식인들이 내세운 '공산주의 세력의 개재 논리'는 이승만 정부가 4·19 데모 진압을 위해 사용한 주장과 똑같은 것이었다. 이 부분에서 지식인들과 이승만 정부가 '반공'이라는 동일한 가치를 공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제는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대학생에 대한 신뢰 문제'이다. 당시 고려대학교 문리대학 교수였던 김성식은 1961년 1월에 잡지 『사상계』에서 이 시기의 학생운동의 성격을 해석하고 있다.<sup>160)</sup> 그의 견해에 따르면 학생들의 행동은 먼저 두 갈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멀리 3·1 운동에서 시작하여 광주학생사건 또는 반탁·반공운동에 이르기까지 외국침략에 대한 항거운동으로서 한국학생운동의 전통적 노선"이었고 그는 이걸 "민족주의 노선" 또는 "주류파"라고 불렀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부수립 이후 학원을 중심으로 있어 온 도의국회나 학술토론회 또는 웅변대회 같은 학회운동에서 시작하여 4월학생운동에 이르기까지 독재적 정치를 배격하며 민주주의식을 높이려는 새로운 경향의 학생운동"이었고 이걸 "민주주의 노선" 또는 "비주류파"라고 불렀다. 특히 4월 이후에 눈에 띄게 문제가 된 것은 "민주주의 노선" 이른바 "비주류파" 중에서도 "행동파" 학생들이었다.

비주류파의 운동은 민주주의운동이므로 자연히 그 목적과 방법(方法)

159) "학생(學生)들은학원(學園)으로돌아가라", 『동아일보』, 1960년 6월 1일 석간.

160) 김성식, "최근학생운동(最近學生運動)의 성격(性格)과 방향(方向)", 『사상계』, 제90호, (1961년 1월).

이 동일성이 결여되고 또 국민으로서도 처음 경험하는 바라 저절로 의아의 눈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이다. 물론 비주류파 중에서도 학회활동을 위주로 하는 학구파(學究派)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가 될 것 없으나, 어떤 조직체를 가지고 능동적 태도를 취하는 행동파(行動派)의 문제로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행동파운동에는 정치성(政治性)과 사회성이 다분히 내포되어 있어서 그것이 사회도덕과 단절에 많이 저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오늘과 같이 정국이 안정성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시대에 있어서는 행동파의 화동이 확대되어 갈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반성이 없는 무모한 학생운동이 일어날 수도 있게 된 것이다.<sup>161)</sup>

1960년 4월에는 데모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잘 모르는 상황이었고 『사상계』 지식인들은 그것을 '민주주의'라는 틀에 놓으려고 애쓰고 있는 시기였다. 그런데 5월이나 6월에는 이미 4월에 일어난 일들이 '독재정권에 대한 민주화 요구'였다는 점에서 거의 합의가 있었다. 『사상계』 지식인한테 5월 이후에 중요해진 점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과 동시에 한국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일이었고 대학생들 4·19의 주체로 만들려고 한 것도 그들의 조직력을 4·19 이후의 질서유지에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오늘의 사회가 요구하는 것은 질서다. 하나에서 열까지가 질서다. 질서안에서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다. 8·15(八·一五)해방 이후 4월혁명(四月革命)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오랫동안 무질서 속에서 살아왔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된다. 무질서속에 지칠대로 지쳐왔다. 질서를 파괴하는 일은 누구나 사회의 지지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사회의 지지를 못받는 운동은 실패되기 마련이다.<sup>162)</sup>

『사상계』 지식인들은 그들의 기대와 달리 대학생들의 행동이 한국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것을 걱정했다. 학생 내부의 폭력사태는 학생들

---

161) 김성식, 『사상계』, 1961년 1월, p233.

162) 김성식, 『사상계』, 1961년 1월, p239.

간에 또는 사회와의 대립을 초래한다. 그러한 대립은 대학생들에 대한 국민의 지지나 신뢰를 상실하게 되어 지식인들이 마련한 4·19가 무너지는 반갑지 않은 일이었다. 사실 학생 내부의 폭력성은 과거에도 있었다. 『사상계』 1955년 6월호 ‘학생에게 보내는 특집’에 실린 신상초의 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볼 수 있다.

요샌 대체(大體)로 자취를 감추었다고 보지만 해방직후(解放直後) 혼란기(混亂期)에는 공산주의(共產主義)를 광신(狂信)하고 이를 실천(實踐)에 옮길려고 하던 학생(學生)들이 있어 학업(學業)보다도 정치적(政治的) 실천(實踐)이라고 하여 진리(眞理)의 연구(研究)를 거부(拒否)하고 학내질서(學內秩序)를 파괴(破壞)한 일이 많았다. 이런 학생(學生)들은 스스로 광신(狂信)의 길을 밟은것이기 때문에 인류(人類)가 남긴 모든 사상(思想)의 발자취를 더들어보지도 않고, 자유인(自由人)이 될 길을 스스로 거부(拒否)하고 만 것이, 그 개인(個人)으로 보나 가정(家庭)·학교(學校)·국가사회(國家社會)로 보나 불행(不幸)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sup>163)</sup>

4·19 이후의 일부 학생들의 움직임은 해방 직후의 공산주의 신봉 학생들의 그것과 비슷했다. 정말 그들이 공산주의자였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대학생의 행동으로 ‘혁명’ 또는 ‘4·19’, 그리고 ‘4·19의 영웅으로서의 대학생’ 상이 상실되고 질서가 파괴될 것이었다. 그러한 상황은 결과적으로는 ‘반공’의 약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학원에 돌아가라’고 한 지식인들은 대학생들이 정치 문제에까지 그들의 활동영역을 확대해나가는 것을 경계했다. 그러나 대학생들은 ‘학원에 돌아가라’는 말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폭력과 유혈사태를 일으키는 자까지 나타났다.

1960년 6월 1일에는 국회 해산과 과도정부 배격을 목적으로 대학생 데모가 일어났고 또 그들에 반대하는 데모대와 충돌한 결과 부상자가 나왔다. 그러자 신문 보도는 재빠르게 이를 "파괴적 데모"<sup>164)</sup>라고 질책했다.

163) 신상초, “학생(學生)과 사회(社會)”, 『사상계』, (1955년 6월) p134.

164) "파괴적(破壞的)데모에강력조처(強力措處)", 『동아일보』, 1960년 6월 3일 조간; "파괴적(破壞的)『데모』는불가(不可)", 『동아일보』, 1960년 6월 3일 석간.

이 시기에는 이미 대학생 내부의 대립이 보이기 시작했었고 폭력이라는 수단은 민주주의혁명의 명분과 대학생의 정통성을 상실시키는 중대한 실수였다. 북한의 간첩들이 체포된 사건도 연달아 발각되고<sup>165)</sup> 공산주의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도 상승되고 있었다. 더구나 옆 나라 일본에서는 미일 안보 개신에 대한 반대 학생 데모가 계속되어 있어 한국의 학생운동도 그러한 반미적이며 반사회적인 성격을 띠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었다.

한국학생운동은 앞으로 일본의 학생운동과 같은 노선이 되지 않을까고 생각키우는 때가 많다. 그들은 대중을 대변한다면서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였고 사회주의운동을 명치(明治)시대부터 시작하였었지만 이론적으로 앞서고 실정에 뒤떨어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성공하지 못하고 중간치기로 있게 되었다. 그렇다고 하여서 정부편에 가담하고 이를 지지하는 운동도 못하고 건설적인 비판도 못하여 왔다. 결국 이런 중간치기는 사회의 빈축을 사고 정부의 미움을 얻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게 된다.<sup>166)</sup>

데모의 확장에 따라 『사상계』 지식인들은 ‘혁명’이라는 말을 점점 ‘4.19’부터 분리시켜 더 포괄적인 ‘4월혁명’을 선호하게 되었다. “「4.19」와 「4.26」 바로 뒤만 해도, 「학생」 하면 일반의 친애와 존경의 대상이 됐던 것이, 근자에 와선 외포와 경원을 하게 시리 일변하고 말았다”<sup>167)</sup>는 말은 당시 대학생에 대한 평가의 악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상계』 지식인들은 한편으로 대학생의 특정행위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예를 들면 ‘국민계몽운동’이 그것이다. 서울대 학생회는 국민신생활운동, 국민계몽운동을, 여학생회는 여성 신생활운동을, 문리대는 농촌 운동을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 그리고 1960년 6

165) 신문 기사에서 확인 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1960년 5, 6월에 10건 이상의 간첩 사건이 발각했다. “괴뢰간첩선(傀儡間諜船)한척(隻)나포(拿捕)”, 『조선일보』, 1960년 5월 14일 조간: “간첩(間諜)한명 또 체포(逮捕) 18일(日)영등포서(永登浦署)에서”, 『조선일보』, 1960년 5월 19일 조간: “간첩(間諜)세명(名)체포(逮捕)”, 『조선일보』, 1960년 6월 2일 조간: “간첩구속기소(間諜拘束起訴) 사월혁명(四月革命)틈타침투(浸透)”, 『조선일보』, 1960년 7월 1일 석간 등.

166) 김성식, 『사상계』, 1961년 1월, p238.

167) “횡설수설”, 『동아일보』, 1960년 6월 13일.

월 16일 서울대에서는 국민계몽운동을 단과대학별로 조직시켜 일원화할 작업에 착수 했다.<sup>168)</sup> 7월 6일에는 서울대학교 문리대를 비롯한 약 800명의 학생이 '국민계몽대'를 결성했다. 그들은 농촌 계몽을 통한 혁명정신 양양을 선언했다.<sup>169)</sup>

그리고 대학생들은 "새나라 새터에 새살림 이룩하자"<sup>170)</sup> 혹은 "커피 한잔에 피 한잔"<sup>171)</sup>이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외국제 사치품 적발을 통한 자립경제 확립을 목표로 한 '신생활운동'도 함께 전개해갔다. 『사상계』 지식인들은 이러한 학생들의 행동을 고평하였다. 다만 계몽대가 갑작스레 적발의 대상인 술집에 습격·돌입한 사건이 발생하자 가차 없이 비판하기도 했다.

어쨌든 학생들의 새생활운동의 그근본정신과 의취에있어서만은 전폭적으로성원을 아끼지않는 우리라하더라도, 위에서 지적한 지나친정도의 행동은 이것을 어디까지나 자율·자제하는 방향으로 이끌어나가도록그 선전·계몽의 방식을 빨리 바꾸기를 부탁해둔다. 그것은 새생활운동에 큰성과를 거두기위해서도 그렇고, 학생들의 명예를위해도 또한 그렇게 않을수없다.<sup>172)</sup>

평가가 높았던 계몽·신생활운동에서도 대학생들은 『사상계』 지식인이 원하는 만큼의 한국사회에서의 질서유지와 신뢰 회복을 성공시킬 수 없었다. 1960년 7월 29일에는 4·19 이후 처음 민의원, 참의원 총선거가 있었고 학생들의 데모는 확장해가는 추세였다. 8월 15일 광복절에는 다음과 같은 신문 보도가 있었다.

4월혁명전(四月革命前)만 하도라도, 학생(學生)들은 『늙은 시대(時代)는 지나갔다』고 소리치며 일어났다. 『모든 것은 청년(靑年)들이 맡아

---

168) 이재오, 2011, p180.

169) "혁명정신(革命精神)을양양(昂揚)", 『동아일보』, 1960년 7월 7일 조간.

170) "횡설수설", 『동아일보』, 1960년 7월 10일 조간.

171) 천정환 외, 2005, p104 사진.

172) "새생활운동의태도와방향", 『동아일보』, 1960년 7월 13일, 석간.

해야겠다』고 앞장섰다. 거기서 「4·19(四·一九)」와 「4·26(四·二六)」의 유혈의거(流血義舉)를 용장(勇壯)스럽게도 일으켜, 「백홍관일(白虹貫日)」과도같이 숙원(宿願)을 성취(成就)했다. 그랬었건만 서너달이지나간 지금에와선, 「혁명(革命)」의 의의(意義)가 도대체 어디 있는가 하는 의심조차 생기게 됐다.<sup>173)</sup>

1960년 9월 16일에는 문교부는 학생 데모에 대한 강경책 수립을 결정하게 되었다.<sup>174)</sup> 하지만 강경책 수립 결정 이후에도 대학생 데모는 그치지 않았다. 이상과 같이 5월 이후엔 날이 갈수록 '학원의 정화' 문제보다도 대학생 데모를 어떻게 중지시키는가의 문제가 더 큰 문제로 부각됐다. 1960년 4월부터 9월말까지 서울시내만 해도 총 323건(『조선일보』는 약 500건으로 보도<sup>175)</sup>)의 데모가 발생했고 그 중 약 3분의 1은 학생 데모였다는 보고도 있다.<sup>176)</sup> 혁명 이후의 정세에 대한 불안과 회의가 확산되었고 한국 사회 전체의 데모에 대한 혐오감도 커지고 있었다. 거리로 나와 데모 중단을 호소하는 초등학생들도 나타났다.<sup>177)</sup>

그리고 3·15 부정선거 관계자와 4·19 때 경찰 발포자, 정치깡패들에 대한 이른바 '혁명재판'이 진행하고 있었는데, 민주당 정권 하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이 미약하거나 중간에 피고인이 행방불행이 되는 사태가 벌어지자 규탄 데모가 일어났다. 1960년 10월 11일 민의원 앞에서 '4월혁명유족회' 회원들을 비롯한 수천 명의 시민과 학생들이 집결해 "혁명과업을 완수할 수 없는 국회라면 즉각 해산하라", "우왕좌왕 갈피를 잡지 못하는 현정부는 물러가라"고 외치기도 했다. 데모에 참석한 4·19 부상학생들 약 50명이 국회의사당 내부까지 들어가 약 25분 동안 점령해 "너희들은 다 나가라. 우리가 정치를 하겠다"<sup>178)</sup>는 구호를 외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173) "횡설수설", 『동아일보』, 1960년 8월 15일.

174) "학원 내 데모 등에 강경책", 『동아일보』, 1960년 9월 17일.

175) 데모수의 출처는 경찰의 비공식통계라고 하고 있다. "데모과잉(過剩)에 치안(治安)은 문란(紊亂)", 『조선일보』, 1960년 9월 25일 조간.

176) "데모 총 323건", 『동아일보』, 1960년 10월 7일.

177) 천정환 외, 2005, p153 본문 및 사진.

178) 강준만, 2004, p154.

데모 열풍이 점점 진정된 1960년 연말에는 이미 '4.19'라는 낱자는 신문지면 상에서 사라진 후였다. 신문 보도의 대학생 평가는 '젊은 사자', '4.19 주체 세력'과 같은 긍정적인 이미지부터 '데모 만능주의자', '혁명정신을 이해하지 못 하는 자'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변하고 있었다. 『사상계』 지식인과 대학생 사이의 연대는 『사상계』 지식인이 원한 대로 조종이 잘 안 되는 대학생 데모 속에서 점점 상실되었다.

## 2. '통일 문제'에 대한 대학생에 관심

4·19에 물러나가고 이후 데모하면서 헤매고 있었던 대학생들은 1960년 여름방학 이후부터 새로운 움직임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1960년 9월쯤부터 기존의 북진통일론을 대신할 새로운 통일론에 관심을 보여주기 시작한 것이다. 9월 24일과 25일에 고려대학교에서 '전국대학생시국토론회'가 열렸고 그들은 국토와 민족이 분단된 원인은 미소 세력권투쟁이었고 그 투쟁에서 탈피해야 통일도 가능하다는 논리하에서 민족주의적인 중립화통일운동을 전개하자고 주장했다.<sup>179)</sup> 그 배경에는 7월의 선거에서 민주당에 패배한 혁신세력의 재편성이 있었다. 사회대중당, 한국사회당, 혁신동지총동맹, 천도교, 유교회, 민주민족청년동맹, 통일민주청년동맹, 4월혁명학생연합회 등 혁신계의 정당과 단체가 연합하여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이하, 민자통)'가 결성되었다.

1960년 10월부터는 서울대 문리대 및 법대의 학생운동가들이 '민족통일전국학생연맹(이하, 민통련)'의 구성을 시작했고 11월 1일에는 서울대학교 학생 약 300명이 민통련 결성위원회를 조직하고 건의문을 발표했다.<sup>180)</sup> 그 건의문은 장면 총리의 미국·소련 양국방문 및 통일문제 협의를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다음 날 2일에는 서울대 강당에서 '통일문제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을 받아 『동아일보』는 11월 3일 사설 제목을 “너무도 천진난만한 통일론”이라고 해서 크게 비판하고 있다.

---

179) 서중석, 1991년 가을, p142.

180) 이종오, 이종오 외, 1991, p222.



민족통일운동(民統一運動)이 무조건無條件)지지(支持)를 받기위해서 필요(必要)한조건(條件)은 그민족통일운동(民族統一運動)이 민주통일(民主統一)을 확보(確保)할수있는동시에 공산통일(共產統一)을 완전(完全)히 배격할수있는 것이 아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잊어서는안된다.<sup>181)</sup>

날이 가면 갈수록 『사상계』 지식인과 대학생들의 연대감은 상실되어가는 추세였는데 이 사건으로 결정적으로 어려움에 빠졌다. 왜냐하면 『사상계』 지식인이 대학생을 '민주주의와 반공'의 주체로 삼은 것은 1960년대 초반에 한국 사회에서 일어난 혼란을 민주주의의 방향으로 수정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방공'의 주체로 규정된 대학생이 통일문제라는 터부(taboo)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 사건이 일어나서 약 일주일 후 '대한학도의용군동지회' 회원 약 150명이 '국민반공사상재무장촉진대회'를 개최했다. 이 단체는 한국전쟁 당시 학생이라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군에 입대한 자들로 구성된 조직이었다. 그들은 "현하의 혼란한 시국을 틈 타 많은 간첩들이 침투하여 국가의 안녕을 위태롭게 하고 있어 먼저 간 전우의 넋에 보답코자 방공전선에 앞장 서겠다"고 선언했으며 "용공적 중립론을 배격하고 실지인 북한에만 총선거를 실시하여 조국을 통일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sup>182)</sup> 『사상계』 지식인은 이 대회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일주일 전에 일어난 '민족통일연맹'과 비교를 해 다시 신랄히 비판을 가했다.

입만 까져서 되지못한 이론(理論), 유치(幼稚)하고 선부른 궤변으로 세월(歲月)을 보내는 청년(靑年)들과는 유(類)가 다르다. 또특하면 혁명투사(革命鬪士)를 가장하고 쓸데없는 단체(團體)나조직해서 세상의 혼란(混亂)을 조장하는 무리들과는 아예 상대(相對)가안된다.<sup>183)</sup>

1960년 11월 16일에는 연세대학교의 총장서리와 재단 이사장의 불신임 데모 끝에 언더우드(Horace G. Underwood) 이사장의 집이 파괴된

181) "너무도천진난만(天真爛漫)한통일론(統一論)", 『동아일보』, 1960년 11월 3일 석간.

182) "반공사상고무(反共思想鼓舞)햇불데모", 『동아일보』, 1960년 11월 9일 석간.

183) "횡설수설", 『동아일보』, 1960년 11월 10일 조간.

사건이 일어났다. 계속 터지는 대학생들에 의한 데모 사건에는 항상 비판이 집중되었다. 11월 18일에 서울대에서는 '민족통일연맹'이 아닌 '민주통일연맹'이 결성되었고 이것은 학생회 산하의 연구기관이 될 것이 결정되었다.<sup>184)</sup> 그리고 12월 3일에는 서울운동장에서 '대한민국대학생총연합회' 주최로 '전국학생반공총결기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대회에는 윤보선 대통령과 장면 총리를 비롯한 정계 인사들이 보낸 메시지도 낭독되었다. 이 대회는 5월부터의 데모 열풍부터 시작해서 통일문제로 악화된 학생들의 이미지를 회복시키려고 한 시도로 보인다. 『사상계』 지식인 측도 이러한 학생들의 방향 수정을 즉시 인정해줬다. 학생 스스로도 신문 상에 파괴행위나 통일문제에 관여한 '일부' 학생들에 대해 반성을 요구하는 글이나 4·19 정신을 확인하도록 하는 글을 투고했다. 1960년 후반을 통틀어 대학생에 대한 이미지 악화는 학생 측의 행동으로 약간 회복되었다. 『사상계』 지식인 측에서도 대학생의 전부를 부정하기보다는 자기들의 틀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학생들을 비판하고 또 학생 안에서 그러한 자들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제거되도록 수정을 한 노력이 보인다.

앞에서 언급한 김성식은 당시 학생운동을 전통적인 "민족주의 노선"과 새로운 "민주주의 노선"의 두 갈래로 분류했는데, 일련의 『사상계』 지식인과 대학생 내부에서 일어난 '일부' 학생에 대한 비판은 지나치게 행동적인 후자를 수정하여 전자에 결합시키려고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지나치게 민주주의를 내세운 나머지 폭력적으로 되어 국민의 신뢰를 잃거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보여준 나머지 통일문제에 관여하려고 하는 일부 학생의 행동을 비판함으로써 반공노선으로의 방향 수정을 시도한 것이다.

대학생들이 '통일 문제'에 관심을 보여준 배경에는 1957년을 정점으로 미국원조가 감소하면서 이승만 정권 하에서 계속된 원조경제의 위기 상황이 온다는 상황 때문이었다는 지적이 있다. 미국 원조가 감소함으로써 가난한 농촌과 도시의 실업자 문제는 해소되지 못한 채 심각해질 것이고 통일로 돌파구를 찾자는 논리였다.<sup>185)186)</sup> 이 견해가 정확한지는 판단이 어

184) "학생회(學生會)산하연구기관(研究機關)으로", 『동아일보』, 1960년 11월 19일 석간.

185) 이종오, 1991, p217.

186) 대학생이 아니라 혁신 정당으로 간주된 사회대중당원이자 조국통일민족전선 위원장이었던 정순학은 1961년 1월 31일에 다음과 같이 '조국통일촉구호소문(祖國統一促求呼訴文)'을 국회의원들에게 보냈다고 한다. "앉아서 굶어 죽을 바에는 차라리 일어서서 통일

렵지만 고려할 수 있는 점은 『사상계』 지식인 측에서는 어려운 경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유진영인 일본과의 협정을 고려하고 있었던 가능성이 높다. 1960년 『사상계』 11월호에는 「한일약수(韓日握手)의 필요성(必要性)」이라는 논문이 게재되었다. 거기서는 한국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일본과의 경제 협정을 고려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 과제로서 한국 국민들의 대일반감이 지적되고 있다.

한국의 경제번영(經濟繁榮)은 일본과의 경제협력이 잘되느냐? 잘 못되느냐?에 달려 있으며 일본의 민주독립(民主獨立)은 남한(南韓)의 경제번영이 북한의 생활수준을 능가할 수 있는 데까지 올라가느냐 하는데 달려 있는 까닭이다. 그런고로 한국국민(韓國國民)은 일본과의 경제협력을 방해하는 반일감정(反日感情)을 눌러야 하겠고 일본국민(日本國民)은 한국 국민의 반일감정(反日感情)을 누를 수 있도록 경제(經濟)원조를 주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이해타산(利害打算)도 삼가 하지 않으면 안된다.<sup>187)</sup>

원수인 일본과의 국교정상화는 국민감정을 자극시킬만한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경제 회복과 '반공'이라는 두 개를 함께 이룰 수 있는 방법이었다. 북한과의 통일은 경제 회복에 유효한지는 몰라도 '반공'은 지식인 측에서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일이었다. 미국도 한국과 일본의 국교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었고 자신들의 한국에 대한 부담을 줄이려고 하고 있었다. 친미적이고 자유민주주의 진영 대 공산주의 진영이라는 도식으로 세계를 보고 있었던 한국 지식인들한테 대학생들은 생각도 못했던 경제 정책을 제안한 것이었다.

---

(統一)을 위(爲)하여 싸우다가 죽자. 우리는 모두 때를 지어 휴전선(休戰線)이고 뭐고 밀고 나가자. 남한(南韓)만 가지고 북한(北韓)보다 부강(富強)해 질 수 없으니 우선(于先) 남북서신거래(南北書信去來) 경제교역(經濟交易) 인사왕래(人士往來) 등(等) 남북교류(南北交流)를 단행(斷行)하도록 하자". 5·16 이후 정순학은 1961년 11월 14일에 혁명재판에 기소되었다. 한국혁명재판사편찬위원회 편, 『한국혁명재판사(韓國革命裁判史)』, 제3편. (한국혁명재판사편찬위원회, 1962년), p341.

187) 이동욱, "한일약수(韓日握手)의 필요성(必要性)", 『사상계』, 제88호, (1960년 11월), p133.

### 3. '실패한 혁명'과 다시 부각된 '4·19'

1961년부터 '4·19'라는 낱자가 다시 사용되기 시작했다.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앞에도 언급했듯이 대학생을 대치할 만한 다른 주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사상계』 지식인과 대학생 사이의 연대감은 점점 상실되어가고 있었지만, 『사상계』 지식인들은 대학생을 버리지는 않았다. 『사상계』 지식인들은 대학생들을 비판하면서도 칭찬할 때는 박수 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사상계』 지식인들의 태도는 통제하지 못하는 일부 대학생들을 어떻게든 자기들이 그린 이상적 모습에 가깝게 수정하려는 작업이었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점은 악화된 제2공화국 정부에 대한 평가가 있다. 1961년 전반에는 장면 정부에 대한 평가는 이미 상당히 떨어진 상태였다. 흔히 '4.19는 5.16로 좌절되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지만 '4월혁명은 실패했다'<sup>188)</sup>, "미완의 혁명이다"라는 말은 1961년 전반부터 이미 나오기 시작한 말이다.

요사이 우리나라 일부(一部) 지식층(知識層)에서 『훌륭한 지도자(指導者)』에 대한 대망과 『선의(善意)의 독재(獨裁)』에의 요구(要求)가 은은히 들리는 것 같다. 이러한 동향(動向)은 4월혁명(四月革命)의 실패(失敗)와 의회정치의 환멸에서만 오는 반발(反撥)과 절대적(絶對的) 외침만은 아니다.<sup>189)</sup>

이것은 1961년 1월에 신문에 실린 대학생 투고인데 혁명의 주체를 자부하고 또는 그렇게 간주된 대학생 측에서 "4월혁명의 실패"라는 평가가 나온 것은 그만큼 사회 전체가 4월혁명에 대한 기대감을 상실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1961년 2월 10일부터 이른바 '혁명재판'이라고 불리는 독재정권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했는데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

188) 함석헌 같은 경우에는 1961년 1월 『사상계』에 실린 글을 "4·19혁명은 실패다"라는 문구부터 시작하고 있다. 이미 '혁명' 앞에는 '4월'이 아닌 '4·19'가 오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함석헌, 「국민감정(國民感情)과 혁명완수(革命完遂)」, 『사상계』, 제90호, (1961년 1월), p30.

189) "영웅숭배(英雄崇拜)에 대한 소고(小考)", 『동아일보』, 1961년 1월 30일 석간.

도 "너무나 초라한 듯한 느낌"을 받고 있었다. 재판이 시작한 다음날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다.

윗보다도, 방청객(傍聽客) 수(數)가 그토록 이나 적었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國民)의 관심(關心)이 냉각(冷却)됐다는 것을 여실(如實)하게 말하는 것이 된다. 「4월혁명(四月革命)」이 언제런가. 벌써 해를 넘겼고, 또 그나마도 새해들어 두달이나 지난뒤-이력저력 열달째나됐으니, 곰팡이가 날대로 다 쓸었다. 풀기도 빠질대로 다 없어진 뒤 끝이다. 「혁명(革命)」은 곧 「변혁(變革)」이다. 천지(天地)가 개벽(開闢)이 되듯이 정치체제(政治體制)에 획기적 일대 변화(劃期的一大變化)를 의미(意味)한다. 그러나 아니었다.<sup>190)</sup>

혁명은 일어났지만 한국 사회에서 변함은 없었고 사람들은 점점 관심 자체를 잃었다. 혁명 정신의 기원으로 1960년 4월 당시 많이 언급된 3·1운동이 일어난 날인 3월 1일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신문에 실렸다.

교통은 극도로 혼잡하고 그속을 각종혁명단체 3·1(三·一)운동기념단체 「멸공의거단」 등등의 표지를 단차들이 「스피커」로 무엇인가 목메이게 외치면서 지나갔다 외치는 소리는 3·1(三·一)운동에 관한 것이기보다 4.19(四·一九)혁명이 미완성이라는 것 심지어는 현정권은 물러가라는 주장도 있어 듣는 이마다 무엇인지 모를 정신적인 중압감을 느끼게 하여 모두들 표정이 침통하였다<sup>191)</sup>

한국 사회의 불만은 계속해서 해소되지 않았다. 『사상계』 지식인들은 데모만 하고 다니는 사람들, 특히 대학생에 지쳤고 또 이러한 상황을 해결 못하는 정부에 대해서도 상당히 짜증이 났던 모양이다. "이제 국민은 「데모」와 「가두선전반」에 질렸다. 이 하늘 아래에서 즉시 물러가라!"라는 호소는 그러한 그들의 심정을 잘 보여준다.<sup>192)</sup> 심지어 이 시기엔 4월혁명

190) "횡설수설", 『동아일보』, 1961년 2월 11일 석간.

191) "거리는 인파(人波)로 법석", 『동아일보』, 1961년 3월 1일 석간.

192) "횡설수설", 『동아일보』, 1961년 3월 15일 석간.

이 실패한 이유와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논하는 사람들도 나왔다.

4월(四月)의 고귀한 혁명을 실패(失敗)의혁명(革命)으로 몰아넣은 원인과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반(半)은장정권(張政權)에있고 반(半)은국민에게있다....(중략)...4월혁명(四月革命)이 실패(失敗)의혁명으로 돌아간책임의 전반은 국민에게 있다.

우리는 과연 부정(不正)과부패(腐敗)의 세력을 몰아내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서 부정(不正)과 부패의 온갖독소(毒素)를 몰아내는일은 게을리하였다. 이것이 4월혁명(四月革命)이 실패(失敗)한 중대한 원인의하나다.<sup>193)</sup>

이러한 '4월혁명'에 대한 평가를 호칭의 변화와 함께 살펴보자. 혁명 1주년을 맞이한 1961년 4월 19일에는 혁명은 일어났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다는 평가가 일반적이었다. 『사상계』 지식인들이 이 시기 가지고 있던 호칭의 선택지란 1960년대 후반에 사용한 '4월혁명'과 대학생 데모에 의한 이미지 악화로 사라진 '4·19', 그리고 '4월혁명'의 등장으로 쉽게 사라진 '4·26'의 3가지였다. 그 중에서 1961년 전반에 『사상계』 지식인들이 선택한 것은 바로 '4·19'였다. '4월혁명'이 사라진 이유는 앞에서 본 것처럼 혁명은 일어나긴 했지만 '실패한 혁명'이 되었고 '미완의 혁명'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고 '혁명'이라는 말은 점점 현실과 안 맞는 부담스러운 말이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4·19혁명' 또는 '4·26혁명'도 동시에 거의 배제되었다.

그럼 '4·26'은 어떨까. 1961년 4월 19일에는 서울 시내 30개 대학과 102개 고등학교 학생들이 주최하고 서울시 후원으로 '4·19혁명 기념식'이 서울운동장에서 열렸다. 반면 1961년 4월 26일에는 어떤 단체가 격문을 발표한 것을 제외해서 아무 행사도 열리지 않았다. 신문도 "4.26에 별감흥 없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릴 정도였다.<sup>194)</sup> 4월 26일은 이승만이 하야한 날이며 처음으로 '혁명'이 탄생한 날이었다. 그런데 국민들에겐 이미

193) "4·19혁명(四·一九革命)의의의(意義)", 『동아일보』, 1961년 4월 19일 석간.

194) "4.26(四·二六)에별감흥(感興)없어", 『동아일보』, 1961년 4월 26일 석간.

4월 26일은 평가할 가치가 없는 날이 된 것이다.

사실 혁명이 '실패했다'나 '미완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혁명이 확장해서 커져가는 과정에 대한 비판이다. 1960년 4월 이후 지식인들이 '4·19'라는 호칭을 버리고 '4·26', 또는 '4월혁명'이라는 말을 쓴 이유는 혁명을 온 국민적인 움직임으로 삼아서 그 의미를 확장시키려고 한 의도 때문이었다. 그런데 혁명의 주체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시기와는 달리 이번에는 혁명의 책임자를 찾아내려고 하는 정반대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었다. 그럴 때 국민들에게 '4·26'이라는 날은 너무나 부담스럽고 자기들이 실패한 혁명에 참여한 것이 돼버리기 때문에 기피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대학생들은 '4·19'에 큰 행사를 열리고 '4·19'의 주체로서 당당하게 1주년을 맞이하려 하였다. 그 이유는 1960년 5월 이후 점점 통제가 안 되어가고 평가가 나빠진 그들이었지만 여전히 4·19를 자신들의 것으로 유지하려고 했기 때문이었다. 대학생들은 혁명의 주체로서 1960년부터 계속해서 칭찬과 비판을 받으면서 주체로서의 자부심을 키워갔다. 그리고 혁명 실패의 책임자라는 악역은 장면 정권이 대부분 맡아줬다. 그들은 혁명의 주체이면서도 책임자라는 역할에서는 어느 정도 면제를 받고 있었다.

이처럼 '4월혁명'과 '4·26'은 1961년 전반의 사회적 분위기에는 너무나 맞지 않고 부담스러운 말이었다. 그러던 중 '4·19'가 다시 사용된 것이다. 다만 '4·19'는 1961년 4월 19일 보도에서만 '4·19혁명'으로서 '혁명'과 함께 사용됐고 나머지는 그냥 '4·19'라고 불려졌다.

#### 4. 통일 운동의 현실화와 5·16 발생

그러면 대학생들은 혁명이 거의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은 시기 어떻게 행동했을까. 그들은 1961년 전반에는 비교적 조용했다. 하지만 이 시기가 대학생들한테 전혀 의미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대학생들은 4·19의 주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행동방식을 모색하고 있었다. 그들이 결국 선택한 것은 '통일 문제'였다. 그런데 대학생들이 '통일 문제'에 관심을 보여준 것에 대해 거부감을 느꼈던 자들은 『사상계』 지식인들이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의 영웅으로 만들어낸 자들이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아닌 사

회공산주의 진영에 속하는 북한과 접근하는 것은 모순적이고 북한 간첩이 활용할 수 있는 위험한 영역이었기 때문이다. 『사상계』 지식인들은 학생 측에서 통일에 관한 어떤 행동이나 발언이 나올 때마다 그것을 늘 감시하고 견제하고 있었다. 앞에서 본 1960년 11월에 일어난 ‘민통련’ 결성에 대한 철저한 비판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1961년 5월 초에는 대학생들은 남북학생회담 개최를 주장해서 다시 통일 문제가 제기되었다. 민통련은 5월이 돼야 전국적 조직 구성을 시동할 수 있었는데<sup>195)</sup> 1961년 5월 5일에 19개<sup>196)</sup> 대학이 참여한 ‘민족통일 전국학생연맹’의 결성준비대회에서 다음과 같은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 , 북한학생 및 당국의 적극적인 호응을 환영한다.
- , 남북학생회담 장소는 판문점으로 한다.
- , 회담 시일은 5월 이내로 하며 정확한 일자는 추후에 발표한다.
- , 정부는 우리의 학생회담에 임하는 모든 편의를 제공하라.
- , 민족통일전국학생연맹은 지역별로 대표를 선정하여 회담준비를 위한 만반의 태세를 갖춘다.<sup>197)</sup>

대학생은 "이북학생들은 정부가 말하는 「공산당원」이기 전에 우리 「민족」이라는 '피(血)'의 논리를 내세우기도 했다. "이념의 「논쟁」이나 어떤 「담판」을 하기 위해서 무릎을 맞대자는 게 아니라, 38장벽을 뚫고 「통일의 광장」을 확보하자는 것에 주목적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사상계』 지식인들은 이러한 학생들의 주장에 대해 "물론 「피」는 꼭 같은 「피」다. 하나, 이쪽은 「청혈(淸血)」, 저쪽은 「악혈(惡血)」인 경우, 무슨 수로 그 「피」가 영길수가 있을 것인지 아무래도 납득이 안 간다"고 하고 다음과 같이 학생들의 이론을 반박했다.

더구나 「통일광장(統一廣場)」을 마련하겠다고까지하면서, 「이데올로기」적(的) 담론(談論)은일절(一切)않겠다했다. 전혀앞뒤가 모순(矛盾)되

---

195) 이종오, 1991, p222.

196) 17개라고 하는 주장도 있다. 이재오, 2011, p184.

197) 서중석, 1991년 가을, p153.



는 말이다. 민주주의(民主主義)와공산주의(共產主義)의대립(對立)이라는 「이데올로기」의장벽(障壁)이없었던들남북(南北)이분단(分斷)됐을까답이 만무(萬無)다. 그렇다면 민주(民主)·공산(共產)의 시(是)·비(非)가 의례건 한바탕 벌어져야만 그우(優)·열(劣)과승(勝)·부(負)로써 「통일광장(統一廣場)」은고사하고 「통일소정(統一小庭)」이라도트임직한데, 그것을 마다 하면서 그냥만나면 다될것 같이생각하는것은, 착각(錯覺)도 환상(幻想)도 그보다더한게없다. 이것이수상(殊常)하다는 눈총을 받는바로 그점(點)이다.<sup>198)</sup>

『사상계』 지식인들은 1960년 4월 19일 이후 계속 해서 대학생들 4·19의 중심으로 삼아 대학생들이 민주주의혁명을 이끌어갈 자로서 행동하도록 4·19를 '민주화 요구'로 규정했다. 혹시 거기서 일탈하는 행동이 보인다면 그때마다 방향 수정을 시도하기도 했다. '통일 문제'는 학생들의 지나친 정치 관여나 빈발하는 데모보다도 훨씬 큰 위협으로 보였다.

그런데 대학생 측이 다시 '통일 문제'를 건드린 것도 이러한 『사상계』 지식인들의 태도 때문이기도 했다. 대학생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혁명'을 자신들의 것으로 유지할 것이었다. 한국 사회는 이제 1960년 4월에 일어난 일들을 '혁명'이라고 부르지도 않게 되었고 이른바 '기성세대'는 변화보다 현상유지를 우선시하고 있었다. 1950년 후반에는 계속 무시를 당했고 간히면서 조용히 살아왔던 대학생들에게 다시 학원에서 조용한 생활을 하라는 『사상계』 지식인들의 주장은 대학생들에 있어서는 너무나 이기적인 것이었다.

4·19를 한 번 경험한 젊은이들은 새로운 감수성을 발휘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최인훈의 《광장》<sup>199)</sup>이 잘 보여준다. 이 작품에서는 서울의 대학생 이명준이 남한에서 아버지가 계신 북한으로 월북하고 한국전쟁을 계기로 다시 남한으로 내려오는데 전쟁 포로가 된 후 최종적으로는 한반도를 떠나 '중립국' 행을 선택하게 된다. 이러한 작품의 출현은 4·19를 경험한 세대가 무조건적인 '반공'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다는 현실과 일치한다.<sup>200)</sup> 대학생은 『사상계』 지식인도 '기성세대'로 간주하게 되었고 『사상

198) "황설수설", 『동아일보』, 1961년 5월 11일 석간.

199) 앞에서 인용한 『회색인』의 작가 최인훈이 1960년 겨울에 발표한 대표적 장편소설.

계』 지식인들이 피하려 한 ‘통일 문제’에 주목하게 되었다. ‘통일 문제’는 『사상계』 자신들과 대학생을 구별시켜줄 유효한 방법이었다. 서중석은 “학생들은 어느 정도만 자신의 참담한 민족사를 들여다보고 사회현실을 직시하면 자연스럽게 민족문제나 통일에 관심이 옮겨질 수 있는 열정과 헌신성이 있었다”<sup>201)</sup>고 평가하고 있는데, 1960년 후반에 계몽운동이나 신생활운동에서 큰 성과를 얻을 수 없었던 대학생에게 ‘통일 문제’는 자신들을 빛나게 해주는 강력한 무기가 된 것이다.<sup>202)</sup>

그 뿐만이 아니라 1957년 소비에트의 스푸트니크호 사건이 상징하는 공산주의 진영의 도약이나 한국 전쟁 이후 북한이 한국보다 전후 복구에 상당히 성공하고 있는 것 같이 보였다는 점, 그리고 1960년 8월 14일에 북한 측이 남북연방제를 제의해왔다는 여러 외적 배경들이 있었다.<sup>203)</sup> 대학생들에게 자신들을 기성세대와 차별화시키면서 한국 경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길로 ‘통일’이 부각되었던 것이다.

1960년 5월 13일에는 ‘남북학생회담환영 및 통일촉진 궤기대회’가 열렸다. 동대문운동장에서 대회를 마친 후 시작한 시가행진에서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라는 구호를 서울 시내에서 들렸다. 『경향신문』에서는 이 대회와 시위에 대한 보도가 있었는데 『동아일보』에서는 큰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사 한편도 안 나왔다. 4·19의 주체이어야 되는 대학생과 『사상계』 지식인 사이에는 다시 괴리가 생기고 있었다. 대학생들은 나름대로 새로운 세대로서의 행동을 모색하고 있었고 지식인들이 마련해준 틀에서 벗어나가려 했다. 『사상계』 지식인들은 대학생의 행동과 방식에 비판을 가해 방향 수정을 시도했지만 이때 결국 『사상계』 지식인과 대학생 사이의 연대감은 다시는 형성되지 않는 못했다. 5.16이 일어난 것이다.

200) 천정환 외, 2005, pp251-252.

201) 서중석, 1991년 가을.

202) 유창민은 4·19 이후 지식인이 대학생에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된 것은 기성세대 지식인들이 4·19 이후 신세대로 부각된 대학생 지식인들에 대해 헤게모니 투쟁 선포를 한 결과였다는 세대 교체론에 입각한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유창민, 2011, p165.

203) 이종오, 1991, p223.

## IV. 5·16의 발생과 4·19 초기 담론의 계승-『사상계』 지식인과 대학생의 연대 부활

### 1. '5·16'에 흡수된 '4·19'

5·16을 일으킨 세력은 자신을 '5.16혁명'이라고 바로 규정하고 4·19를 그냥 '4·19' 혹은 '4.19의거'라고 불렀다. 신문 보도에서는 '5·16혁명'과 '4·19혁명'이라는 두 가지의 혁명이 당분간 함께 사용됐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4.19혁명'에 관한 보도나 논문은 사라졌고 거의 '5.16혁명'만이 주목을 받게 되었다. 1962년 4월 19일에 박정희는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5.16혁명(五·一六革命)은 4·19의거(四·一九義舉)의 연장이며, 조국을 위기에서 구출하고 멸공과 민주 수호로써 국가를 재생하기 위한 긴급한 비상조치였던 것입니다. 도의와 경제의 재건은 바로 여러분들이 사월의거(四月義舉) 때 품었던 염원이었으며, 우리는 지금 이것을 계승 실천하자는 것입니다.<sup>204)</sup>

이것은 '4·19'에서 '혁명'이라는 말을 빼서 '5·16혁명'에 흡수시키려는 시도였다. 이러한 시도는 헌법 개정을 통해서 문서화되었다. 1962년 7월 11일에 국가재건최고회의의 헌법심의위원회가 공식 발족되었고 10월 10일에 헌법 전문에 '4·19'와 '5·16'을 넣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1962년 10월 6일부터 11월 6일까지 미국의 루퍼트 에머슨(Rupert Emerson) 교수들이 초청되었고 헌법심의 자문이 이루어졌다. 에머슨 교수가 남긴 문서 중 헌법요강 영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1. Insert new paragraph on the spirit of April 19 Student Uprisal<sup>205)</sup> and May 16 Military Revolution. An extensive

204) 대통령비서실 편, 『박정희대통령 연설문집』, 제1권 최고회의편, (서울: 대통령비서실, 1973년), p223.

205) Uprise 혹은 Uprising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의 원문 그대로 표시했다.

revision shall be made.

2. It shall be added to the end of the Preamble that this Constitution has revised by means of the national referendum.<sup>206)</sup>

4월 19일 '학생 의거'와 5월 16일 '군사 혁명' 정신에 대한 새로운 문장을 삽입할 점이 명기되어있다.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국어 헌법 전문은 다음과 같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4·19의거와 5·16혁명의 이념에 입각하여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후략)<sup>207)</sup>

'학생(Student)' 그리고 '군사(Military)'라는 말은 한국어판에 안 들어갔지만 앞의 영어판과 비교해보면 각 낱자가 어떤 이들이 대표하는 날이라 인식되고 있는지 명확하게 볼 수 있다. '4·19'는 여전히 학생을 상징하는 날이었고 '5·16'은 군대를 상징하는 날이었다. 1962년 4월에 발표된 박정희 발언과 마찬가지로 두 사건은 함께 명기되었지만 '혁명'은 5·16의 전유물이었다. 서희경은 한국 헌법 전문의 4·19 기술에 관한 연구에서 "1962년 헌법에서 4·19 정신은 5·16 정신과 동일시되었다"<sup>208)</sup>고 하는데 동일시보다 오히려 강준만 교수의 표현처럼 '빼앗겼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지도 모른다.<sup>209)</sup>

5·16세력은 4·19 때 시동된 학생운동도 자기들 것으로 만들려고 했다. 그 대표적 운동이 '향토개척단운동'이었다. 서울대 학생회는 1961년 5월 23일에 5·16지지선언을 발표하였고 6월 24일에는 향토개척대가 결성되었다. 이 운동은 농촌에 학생들이 가서 학생과 농민 간의 연대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1962년 1월 26일에 향토개척단이 창단되고 7월 12

---

206) 서희경, "한국 헌법의 정신사: 헌법전문에 "4·19 민주이념 도입"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정치사상연구』, 제17집 제1호, 2011, p42.

207) 서희경, 2011, p41.

208) 서희경, 2011, p42.

209) 강준망, 2004, pp40-42.

일에 서울시내 각 대학 8,000명이 하기 봉사활동에 들어갔다. 향토개혁운동은 5·16세력과 공존하였는데 그 배경에는 4·19에서 충족되지 못한 요구가 5·16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기대에 기인한다고 지적되어 있다.<sup>210)</sup>

그리고 1962년 12월 21일에는 수유리에 '4·19학생혁명기념탑'<sup>211)</sup> 공립식에는 최고회의에서 몇 명 인사가 참석해 5·16 세력이 4·19와 대립하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sup>212)</sup>

앞 장에서 보듯이 5·16이 발생하기 전에 『사상계』 지식인들은 4·19에 대한 규정과 현실 사이에서의 모순에 빠지고 있었다. 왜냐하면 4·19는 이미 한국 사회에서 큰 지지를 잃고 있었다. 4·19의 영웅으로 만들려고 한 대학생은 1961년 5월부터 통제 불가능한 어디로 갈지 모르는 너무나 위태로운 존재가 되었다. 특히 남북학생회담 개최는 대학생을 '민주주의와 반공의 주체'로 삼으려고 한 지식인 측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었다. 그러한 대학생들의 요구를 5·16은 흡수해주고 통제해준 것이다.

『사상계』 1961년 6월호 권두언 「5·16혁명과 민족의 진로」는 다음과 같이 5·16을 4·19와 함께 평가하고 있다. 대학생에 대한 칭찬에서 글은 시작한다.

1년전(一年前) 우리나라의 젊은 학도(學徒)들은 그 꿈많은 청춘을 바쳐, 부패와 탐욕과 수탈과 부정(不正)에 도취한 이승만독재정권(李承晩獨裁政權)을 타도하고 민주주의(民主主義)를 사경(死境)에서 희생시켜었다. 그러나 정치생리(政治生理)와 정치적(政治的) 행상(行狀)과 사고방식(思考方式)에 있어서 자유당(自由黨)과 본질적으로 다를 것이 없는 민주당(民主黨)은 혁명직후의 정치적(政治的) 공백기(空白期)를 기회로 지나치게 비대(肥大)해진 나머지 스스로 오만과 독선에 사로잡혀 정권(政權)을 마치 전리품(戰利品)처럼 착각하고...(후략)<sup>213)</sup>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려 일어난 대학생들은 선한 자들이었고 오히

210) 이재오, 2011, p187.

211) 현재 도봉구 수유동 '국립4·19민주묘지'의 전신.

212) "청사(靑史)에새긴『4월(月)의투혼(鬪魂)』", 『동아일보』, 1962년 12월 22일.

213) "5·16혁명(五·一六革命)과 민족(民族)의 진로(進路)", 『사상계』, 제95호, (1961년 6월), p34.

려 사리사욕에 잡힌 민주당이 혁명을 실패의 길로 이끌어간 장본인이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또 5·16이 일어나기 전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4·19혁명(四·一九革命)이 입헌정치(立憲政治)와 자유(自由)를 쟁취하기 위한 민주주의혁명(民主主義革命)이었다면, 5·16혁명(五·一六革命)은 부패와 무능과 무질서(無秩序)와 공산주의(共產主義)의 책동을 타파하고 국가의 진로를 바로잡으려는 민족주의적(民族主義的) 군사혁명(軍事革命)이다. 따라서 5·16혁명(五·一六革命)은 우리들이 육성하고 개화(開花)시켜야 할 민주주의(民主主義)의 이념(理念)에 비추어 볼 때는 불행한 일이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으나 위급한 민족적(民族的) 현실(現實)에서 볼 때는 불가피(不可避)한 일이다.<sup>214)</sup>

"위급한 민족적 현실"이란 무엇을 가리킨 것인가. 이 문장 앞에 나온 "부패와 무능"은 4·19 이후에 성립한 제2공화국 정부인 것으로 보인다. 그럼 "무질서(無秩序)와 공산주의(共產主義)"는 어떨까. 여태까지 본 것처럼 4·19가 일어난 후 한국 사회에서는 간첩 사건이 많이 발생했고 그러한 간첩들의 활동 영역으로 데모가 의심을 받고 있었다.<sup>215)</sup> 대부분 데모에는 대학생들이 관여하고 있었다고 간주되었고 그들은 1961년 5월에 남북학생회담 개최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러한 5·16 전의 상황을 감안하면 "무질서(無秩序)와 공산주의(共產主義)"라는 말은 단순히 "부패와 무능"의 덩어리였던 민주당 정권이 통제하지 못했던 혼란스러운 한국 사회인 동시에 대학생들이 일으킨 혼란 상황을 비판하는 의미도 포함되어있지 않을까 싶다. 권두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이어진다.

불리(不利)한 지정학적(地政學的) 위치와 막다른 정치적(政治的) 한계상황(限界狀況)에서, 국제공산제국주의(國際共產帝國主義)와 대결하

214) 권두언, "5·16혁명과 민족의 진로", 『사상계』, 1961년 6월, p34.

215) 신문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만을 보아도 4·19 이후 한 달에 적어도 1건의 간첩 사건이 발각되었고 많을 때는 4건 정도가 보도되었다. 그 중에는 대학생과의 관련을 언급한 보도도 다수 포함되고 있다. "배후의 간첩의 마수" 조재천(曹在千) 내무, 「남북학생회담」에 경고, 『조선일보』, 1961년 5월 14일 조간: "간첩과 접선협회의 대학생도 관련", 『조선일보』, 1961년 3월 20일 석간 등.

면서 자유(自由)와 복지(福祉)와 문화(文化)의 방향으로 국가(國家)를 재건(再建)하여할 우리들의 민족적(民族的) 과업은 크고도 어렵다.<sup>216)</sup>

공산주의를 막아내는 것은 『사상계』 지식인들이 믿은 한국 민족의 유일한 길이었다. 거기서 언급된 민족에서는 북한이 자연스럽게 배제되었는데 그러한 태도는 통일 문제에 관심을 보여준 대학생들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었다. 지식인들은 5·16을 적극적으로 칭찬한 것은 아닐 것이다. 『사상계』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군사혁명은 일시적인 것이야만 했다. "최단시일내에 참신하고 양심적(良心的)인 정치인(政治人)들에게 정권(政權)을 이양한후 쾌히 그 본연(本然)의 임무로 돌아간다는 엄숙한 혁명공약(革命公約)을 깨끗이, 군인(軍人)답게 실천하는 길 이외의 방법은 없을 것이다"<sup>217)</sup>라는 말은 5·16을 일으킨 군사 세력이 정권을 계속 장악할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그래도 '민주주의'라는 부분에서는 적절한 세력이 아니어도 '반공'의 관점에서는 5·16 세력은 기대할 수 있는 존재였다. 5·16의 발생은 지식인들이 내포한 내부적 모순, 즉 '민주화 요구'로서의 4·19과 '반공'의 주체로서 완벽하지 못한 대학생 사이의 모순을 일단 해소시켜준 사건이었다.

무능(無能)하고 고식적(姑息的)인 집권당(執權黨)과 정부(政府)가 수행하지 못한 4·19혁명(四·一九革命)의 과업을 새로운 혁명세력(革命勢力)이 수행한다는 점(點)에서 우리는 5·16혁명(五·一六革命)의 적극적 의의(意義)를 구(求)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에서는 5·16혁명(五·一六革命)은 4·19혁명(四·一九革命)의 부정(否定)이 아니라 그의 계승(繼承), 연장(延長)이 되어야하는 것이다.<sup>218)</sup>

'혁명'의 주체는 이제 대학생이 아니라 군인이 되었다. 4·19는 5·16의 전사로 흡수되었다. 『사상계』 지식인들이 5·16에 긍정적 평가를 내린 시기에는 '5.16혁명'이라는 호칭을 사용할 수 있었고 4·19는 한국사에서

216) 권두언, 『사상계』, 1961년 6월, p35.

217) 권두언, 『사상계』, 1961년 6월, p35.

218) 권두언, 『사상계』, 1961년 6월, p34.

잠시 상실의 시기를 맞이하였다.

## 2. 한일회담 반대운동에서 재현된 '4·19'

5·16에 흡수된 4·19가 한국사에서 다시 나타날 계기가 있었다. 그것은 박정희 정권이 추진한 한일회담에 대한 반대운동이었다. 박정희는 군사정권을 되도록 빠른 시기에 이양하겠다는 초기 공약과는 달리 정권의 연장을 시도하였고 군사정권을 환영한 대학생들은 차차 대항 세력으로 변신해갔다.

1964년 3월 24일에 서울대 문리대와 법대, 고려대, 연세대, 그리고 서울시내 고등학교 학생들 약 5,000명이 한일회담 반대 데모를 일으켰다. 이 사건은 '3·24 학생 데모'라고 불리게 되었고 다음날 3월 25일에는 서울뿐만이 아니라 부산, 전주 등 지방도시에서도 반대 데모가 일어났다. 서울에서는 약 18,000명의 대학생과 2,000명의 고등학생들이 참가했다. 이날 박정희 정부는 서울시내의 37개 대학의 학생대표와 연석회담을 가졌지만 결국 이것도 결렬되어버렸다. 그로 인해 약 2만 명이 청와대 앞에 집결했는데 박정희 정권은 3월 25일에 한하여 평화적 시위를 허용한다는 지시를 내렸다. 3월 26일에는 광주, 대전 등에까지 확장되었는데 이날은 특히 고등학생들이 많이 참가했다. 데모는 계속되었지만 정부는 한일회담 추진의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담화를 발표하였다. 3월 27일에는 전국 13개 도시의 대학교 및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운동에 참여했다. 정부는 이날 일본에 있었던 김종필을 긴급 소환했고 서울시내 종합대학교 학생대표들과의 면담을 주선했다. 3월 28일에는 김종필 귀국에 맞춰서 김포공항에서 고등학생 약 500명이 데모를 했다. 1963년 3월 29일에 서울대 학생들은 '자유수호 쫓겨대회'를 열어 "이제 우리는 4월 선열의 뜻을 이어 긴박한 역사적 상황 위에 새로운 깃발을 세운다"<sup>219)</sup>고 군사정권 연장을 규탄했다.

1960년 4·19와는 달리 이번에는 먼저 대학생들이 운동에 나섰고 다음에 고등학생들이 데모에 대폭 참가하게 된 것이 특징이다. 그들이 사용한 구호는 다음과 같다.

---

219) 이재오, 2011, p209.



**<표IV-1> 1964년 3월 24일부터 3월 30일까지 한일회담 반대운동에서  
사용된 구호**

날짜	구호
3월 24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족반역적인 한일회담을 즉각 중지하고 동경체재매국정 상배는 일로 귀국하라</li> <li>- 평화선을 침범하는 일본어선은 해군력을 동원하여 격침하라</li> <li>- 사수하자 평화선</li> <li>- 한국에 상륙한 일본 독점자본가의 척후병을 즉시 축출하라</li> <li>- 일본제국주의를 말살하자</li> <li>- 박정권은 민족분노의 표현을 날조공갈로 봉쇄하지 말라<sup>220)</sup></li> </ul>
3월 2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판자본 물러가라</li> <li>- 일인침입자본의 상징</li> <li>- 대표단소환</li> <li>- 한일회담 즉시 철회하라</li> <li>- 굴욕적인 한일회담을 왜 비밀이 하는가</li> <li>- 이완용을 또 만들지 말고 매국회담을 중지하라</li> <li>- 국민여론을 무시한 한일회담을 즉시 중지하라</li> <li>- 우리는 그 의제의 부당성을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다</li> <li>- 평화선은 어민의 생명선</li> <li>- 평화선철폐로 과거 일본식민정책의 어민수탈이 다시 시작한다</li> <li>- 평화선이 흥정의 대상으로 등장할 상품의 성질이 아니다</li> <li>- 평화선은 어민의 생명보장과 자원번식을 위해 필요한 국가주권선이므로 국제법상 위반이 아니다</li> <li>- 평화선을 침범하는 일본어선을 나포하라</li> <li>- 수산자원 보호하자, 평화선을 사수하자</li> <li>- 한일 국교정상화와 평화선과를 연관시키지 말라</li> <li>- 우리는 야당의 선전물이 아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야당은 우리를 이용하지 말라</li> <li>- 미국은 한일회담에 압력을 가하지 말라</li> <li>- 감금된 학생을 석방하라<sup>221)</sup></li> </ul>
3월 26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굴욕적인 한일회담을 즉시 중지하고 매판(買辦)자본 축출하라</li> <li>- 데모가 이적이냐, 굴욕이 이적이냐</li> <li>- 대일굴욕외교반대</li> <li>- 대일굴욕외교 즉각 중지하라</li> <li>- 굴욕외교를 반대한다</li> <li>- 김종필을 소환하라</li> <li>- 이완용(김종필의 뜻?)을 즉각 소환하라</li> <li>- 매국외교의 주역 김종필을 즉시 소환하라</li> <li>- 제국주의에 대한 민족봉기를 호소한다</li> <li>- 평화선사루</li> <li>- 최루탄, 곤봉으로 우리의 자유를 막지 못한다</li> <li>- 선열들의 혼이 욕되지 않기 위해 대일굴욕회담을 적극 반대한다<sup>222)</sup></li> </ul>
3월 27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일외교자 김종필을 즉각 소환하라(청주대·청주고·청주상고, 외침)</li> <li>- 소환하자 매국노 김종필(전주농고, 외침)</li> </ul>
3월 28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굴욕외교를 반대한다(김포공항 학생 데모, 외침)</li> <li>- 평화선을 사수하자(김포공항 학생 데모, 외침)</li> <li>- 민심은 천심이다(김포공항 학생 데모, 외침)</li> <li>- 김종필을 만나게 해달라(김포공항 학생 데모, 외침)</li> <li>- 3·1절 모래(김포공항 학생 데모, 합창)</li> </ul>
3월 3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굴욕외교반대(서울 중앙고, 외침)</li> <li>- 일본의 경제침투를 막자(서울 중앙고, 외침)</li> <li>- 대일굴욕외교반대(강릉고, 플래카드)</li> <li>- 모주 먹고 이제는 정말 못 살겠다(강릉고, 플래카드)</li> </ul>

출처: 『동아일보』 및 『조선일보』 3월 24일~3월 31일 기사, 그 외는 각주

220) "한일회담 굴욕타결 반대", "한일회담 굴욕타결 반대", 『동아일보』, 1964년 3월 24일.

221) "저지없이 풀려나온 『3월의 함성』 연쇄호응", "학생 「데모」 전국에 확대", "부산 백차호 속에 시위" 『동아일보』, 1965년 3월 25일.

## 참조

1964년 3월 23일부터의 반대 데모 첫 사흘 동안에 가장 많은 구호가 나왔다. 초기에는 "평화선 사수", 그리고 "일본 자본의 축출" 같은 일본을 부정하고 한국의 영해와 이익을 지키자는 논조가 강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한일회담 즉각 중지"와 "매국외교의 주역 김종필을 즉시 소환하라"는 두 가지로 주장이 차차 집약된 영상이 보인다.<sup>223)</sup> 이때까지의 학생들의 주장은 아직 온건하고 한일회담 자체에 대한 불만이였다.

이 때 언론계를 중심으로 『사상계』 지식인들은 한일회담 반대운동을 규정하기 시작했다. 『사상계』 지식인들이 사건 규정에 사용한 말은 '4·19'였다. 당시 신문은 1964년 3월 24일에 학생 운동이 일어나자마자 바로 '4·19'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3월 25일 『동아일보』 기사는 다음과 같다.

전날서울에선, 경찰대(警察隊)가 닥치는대로 몽둥이찜질들을 하는가하면, 저편에선 돌도날고...그래서학생들의유혈(流血)이낭자했다. 이순간 문득생각나는것이 4.19그날의 광경이다. 바로 그곳에서 「데모」하던 학생들에게 야만적인 발포(發砲)를하던 자유당경찰(自由黨警察)의 그악독상(惡毒相), 그리고 그 무자비한 총탄(銃彈)에 가까운 이나라 「동량지재(棟梁之材)」들이 썩은나무토막처럼 퍽퍽쓰러지던 그참경(慘景)-그러나 마침내는 『피의민주승리(民主勝利)』로 돌아가지 않았던가.<sup>224)</sup>

인쇄 상황을 보면 '4·19'라는 로마 숫자가 주변 한글자보다 크고 굵고 자연스럽게 강조되고 있다. 경찰대는 자유당 밑에서 데모 참가자들에 발포를 한 경찰에 비견되고 '민주'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같은 날 학생 운동에 대한 다른 보도 기사에는 이번 사태가 4·19를 상기시킨다는 내용이 또 나온다.

222) "이것이 민족적 민주주의더냐", "번지는 『규탄의 함성』 "간접침략을 분쇄하자", 『동아일보』, 1964년 3월 26일.

223) 당시 신문 보도도 구호의 성격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학생 「데모」 연사흘째", 『동아일보』, 1964년 3월 26일.

224) "횡설수설", 『동아일보』, 1964년 3월 25일.

이날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은 「데모」 학생들의 구호속에 『우리는 야당의 선전물이 아니다』 『미국은 한일회담에 압력을 가하지 말라』는 구호였는데 청와대(靑瓦臺)로 향하는 효자(孝子)동 큰길은 하오 2시쯤부터 「데모」 학생들로 꽉 들어차 4.19당시를 방불케했고 완전무장한 수도(首都)경비사헌병들이 최루탄을 터뜨리며 청와대(靑瓦臺)에 접근하려는 학생들과 맞고 있는데 연대(延大)·경희(慶熙)·동국대(東國大)는 3시간 만에 모두 해산했다.<sup>225)</sup>

1964년 3월 26일의 『조선일보』는 “4·19당시 「데모」에 나섰던 대학교수, 부상학생, 그리고 일부정치인 및 일반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學生(학생) 「데모」를 이렇게 본다 市民(시민)의 소리”라는 특집을 기재했다.<sup>226)</sup>

물론 3·24가 1960년 4월 이후 나타난 최대 규모의 학생 데모였다는 점에서 이러한 보도 방식은 자연스러울 수도 있다. 하지만 1964년 3월 24일부터 ‘서울대 문리대 한일회담반대투쟁위’가 운동의 일시중지를 성명한 30일에 이르기까지 일주일 동안 대학생 그리고 고등학생들의 선언문이나 결의문, 사용된 구호에서는 ‘4·19’라는 단어가 딱히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데모 참여자들이 ‘4·19’라는 말을 안 썼는데도 데모를 밖에서 보고 있었던 『사상계』 지식인들은 ‘3·24’와 ‘4·19’를 중복시켜서 설명하려고 한 것이다.

1964년 3월 30일에 성균관대 학생 한 명이 대구에서 “4.19학생은 운다”라고 혈서로 된 플래카드를 들고 한일회담 즉각 중지를 15분간 외치는 일이 있었다.<sup>227)</sup> 단 한 명의 학생이 일으킴 지방에서의 시위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아일보』에서는 서울에서 일어난 1,500명 규모의 데모와 강릉에서 일어난 600명 규모의 데모와 함께 묶고 기사 제목도 “4.19 학생은 운다”는 혈서 플래카드의 문구를 붙였다. 『사상계』 지식인은 한일회담 반

225) “저지(沮止)없이 풀려나온 『3월(月)의 함성(喊聲) 연쇄반응(連鎖反應)』, 1964년 3월 25일.

226) “學生(학생) 「데모」를 이렇게 본다 市民(시민)의 소리”, 『조선일보』, 1964년 3월 26일.

227) “4.19학생(學生)은 운다 혈서(血書)플래카드들고단독(單獨)데모”, 『동아일보』, 1964년 3월 30일.

대 학생운동과 4·19와의 연결성을 의식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1964년 4월에는 『사상계』 상에서도 중요한 글이 발표되었다. 4월 1일에 발간된 4월호는 통권 132호이자 창간 11년 기념호였다. 권두언 「아아! 4·19의 榮光(영광)은 어디로?」에서는 4·19를 “4·19혁명(四·一九革命)”<sup>228)</sup>, 5·16을 “5·16군사정변(五·一六軍事政變)”<sup>229)</sup> 또는 “5·16(五·一六)의 구·데타”<sup>230)</sup>라고 부르고 두 사건의 연속성을 부정했다.

어떠한 의미에서도 5·16(五·一六)의 구·데타는 4·19민주혁명(四·一九民主革命)과는 인연이 없으며, 정변초기(政變初期)의 당사자들의 주관적 의도(主觀的意圖) 여하(如何)를 불문하고, 결과적으로는 5·16(五·一六)은 4·19(四·一九)의 영광(榮光)을 부정 내지 말소해버렸던 것이다.<sup>231)</sup>

그리고 같은 4월호에서 지명관<sup>232)</sup>은 「5·16(五·一六)은 4·19정신(四·一九精神)의 계승(繼承)아니다」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5·16 세력이 4·19를 흡수하려 한 이유는 “4·19(四·一九)가 하나의 역사의 방향이고 민중이 갈구하는 세계사적(世界史的)인 방향이기 때문이”<sup>233)</sup>였고 결론에서 “5·16(五·一六)이 하나의 정신사적인 후퇴이며 세계사적 방향에 대한 상극(相剋)이었다는 슬픈 판단(判斷)”<sup>234)</sup>을 내리고 있다.

그때까지 『사상계』 지식인들이 5·16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는 ‘반공’이라는 부분에서였다. 4·19가 일어난 후 한국 사회는 혼란 속에 빠져 있었고 질서 잡기가 어려운 시기였다. 정치적·경제적으로 취약한 한국 사회에서는 4·19 때 폭발한 불만이 다시금 언제 표출되고 그것이 공산주의 세력에 이용당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었다. 그래서 『사상계』 지식인들

228) 권두언 「아아! 4·19의 영광(榮光)은 어디로?」, 『사상계』, 132호, (1964년 4월), p26.

229) 권두언, 『사상계』, 1964년 4월, p26.

230) 권두언, 『사상계』, 1964년 4월, p27.

231) 권두언, 『사상계』, 1964년 4월, p27.

232) 1924년 10월 11일~현재. 북한 평안북도 정주 출신. 투고 당시에는 서울대 문리대 강사. 1964부터 67년까지 사상계 주간도 맡았고 수필가로서도 활약, 현재 일본 교토국제일본문화연구센터 연구원.

233) 지명관, 「5·16(五·一六)은 4·19정신(四·一九精神)의 계승(繼承)아니다」, 『사상계』, 132호, (1964년 4월), p36.

234) 지명관, 1964년 4월, p37.

은 반복해서 공산주의를 부정하고 4·19가 '민주화 요구'였다는 규정을 내림으로써 질서를 유지해 공산주의를 막아내려고 한 것이었다. 실제 1960년 연말부터 일어난 '통일 문제'는 그러한 우려가 현실화된 사건이었고 그 중심에 있었던 자들이 원래 4·19 이후의 질서 유지의 주체로 만들려고 애쓴 대학생이었다는 점에서 아주 위태로운 상태였다. 그리고 5·16은 그러한 흐름을 막을 수 있는 계기였다. 『사상계』 지식인들에 있어서 한국이 앞으로 가야 될 길은 다른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의 동일한 근대적 발전의 길 이었고 '반공'이었다.

앞 장에서 본 것처럼 1960년에 이미 『사상계』 지식인들은 한일회담을 한국의 경제 번영과 '반공'이라는 두 가지 면에서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었다. 1960년 『사상계』 11월호 「한일약수(韓日握手)의 필요성(必要性)」에서도 『사상계』 지식인들은 한일회담이 국민감정을 흔들릴 것이라는 예측을 이미 하고 있었지만 1963년 3월 24일 반대 데모까지를 예측하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사상계』 지식인들이 한국 사람들의 분노가 폭발하기 전에 한일회담 반대운동 규정에 4·19를 이용한 것은 확실할 것이다. 즉 감정적인 분노의 폭발이 아니라 군사정권에 대한 '민주화 요구'라는 틀을 제공하면서 운동의 방향성을 수정하려고 한 것이다.

그런데 이때 단순히 1960년에 실제 일어난 4·19를 이용한 것이 아니었다. 『사상계』 지식인은 자기들이 원하는 4·19 상을 재구성했다. 1961년에는 실제 4·19는 이미 '실패한 혁명'이 되었고 지식인들이 원했던 틀에 쉽게 놓지 못하는 혼란스러운 현상이었다. 『사상계』 지식인들이 이용한 것은 그러한 실제 4·19가 아니라 4·19의 '이상형' 즉 '대학생에 의한 민주화 요구'라는 초기 담론이었다. 4·19 이후 조직력을 키운 대학생들은 4·19 때와 달리 『사상계』 지식인보다 먼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었다. 『사상계』 지식인들은 이것에다가 4·19를 부여시킨 것이다.

1964년 4월에는 신문 보도에서 4·19 특집이 나오기 시작했다. 내용의 대부분이 4·19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5·16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한탄하는 논조였다. 예컨대 1964년 4월 2일 『동아일보』 연재 기사 "조국(祖國)"에서는 다음과 같은 글을 볼 수가 있다.

일장기(日章旗)에이여 잠시 성조기(星條旗)가 올랐던 깃대에 태극기(太

極旗)가 펄럭이면서부터 진정거리에는 영광(榮光)이 깃들었다. 적화(赤禍)를 물리치고 싱싱한 4월(月)의 거리에 장미빛 젊은피를 쏟아 독재(獨裁)를 쫓았거늘 이제 감히 그누가 이민족(民族)의 통로(通路)를 욕(辱)되게할것인가?<sup>235)</sup>

"이제" "민족의 통로를 욕되게" 하고 있는 "독재(獨裁)"가 의미하는 것은 분명히 박정희와 공화당, 그리고 한일회담이었다. 1964년 4월 17일에는 서울대 학생 약 200명이 학원사찰 즉각 중지를 호소해 기획원 앞에서 경찰과 충돌한 일이 있었다. 다음 날 4월 18일에는 4·19에 관한 독자 투고가 실렸다. "4.19 네들"이라는 이 특집은 4·19의 '계승'에 주목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문리대 학생이 투고한 "멍든 상아탑(象牙塔)의 자유(自由)"에서는 다음과 같은 글이 나온다.

당신이여

그리하여 우리는 행동(行動)할 때와 사고(思考)할 때를 가릴 줄 아는 사자(獅子)의 윤리(倫理)로써 당신들이 값비싸게 물려준 그유산(遺産)을 이어받아 못다이론 과업(課業)을 성취하고야말 것입니다. 세계(世界)의 어느 젊은이보다 자랑스럽던 당신들의 그모습을 언제나, 언제나 간직하면서-.<sup>236)</sup>

경희대 법대 학생은 "침체(沈滯)의 길로 달음질"이라는 글에서 4·19 지지 세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이제대학가(大學街)에는 4.19 당시의 행동대원들을 거의 찾아 볼수 없다. 거의가 사회(社會)에 진출하고 군(軍)에 입대하고, 방향상실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룸펜생활로 소일하는 학우들도 있으리라. 그들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위정자는 지금은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는 이들의 무표정(無表情)에서 무엇을 발견하고 있는 것인가.

이제 4(四)년이 지난 오늘,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235) "조국(祖國)(8) 「영광된 미래」 향한 거래의 맥박은 고동 친다", 『동아일보』, 1964년 4월 2일.

236) "4·19 네들", 『동아일보』, 1964년 4월 18일.

「애국」「민족주의」「조국의근대화(近代化)」 등의 어휘를민중에게 돌려달라는것이다.

그리고선민의식(選民意識)을더 이상 갖지 말고 또하나의 우상을만들지말라는것이다. 우리는절망하지도않는다. 4월세력이먼훗날 이사회(社會)를 담당할 때가 반드시 오리라라고생각하기때문이다.<sup>237)</sup>

이 글은 4·19가 5·16에 흡수된 후 조용히 생활할 수밖에 없었던 4·19세대의 1960년대 초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혁명을 일으켰지만 5·16세력에 의해 말살된 그들은 공부를 하지 않고 데모를 하느라 취업에 실패함으로써 도시 롬펜이 된 경우가 많았다.<sup>238)</sup> 동시에 4·19세대가 추후 비판을 받을 부분인 '선민의식', 이른바 4·19세대로서의 지나친 자존심도 이미 지적되어있다. 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1964년 4월에는 한일회담 반대운동에 참여한 학생들은 4·19세대가 아니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한일회담 반대운동에 나선 학생들은 1964년 3월에는 '4·19'라는 사건에 관여하지 않고 있었다. 4·19 그리고 4·19세대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이 '4·19'라는 날짜가 존재하지 않은 공백의 시기를 간과하고 있는데 사실 이 시기는 '4·19'라는 사건이 만들어진 사건이었다는 것을 증명할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다.

1964년 4월 19일을 거쳐서 드디어 학생들도 4·19를 통해 한일회담 반대운동을 보게 되었다. 4월 20일 서울대 문리대 교정에 위치한 4·19학생혁명기념탑 앞에서 서울대 학생 약 200명이 모여 '4·19 4주년 기념식'을 행했다. 기념식이 끝난 후 시가에 나온 학생들은 데모를 시작했고 이때부터 학생들이 '4·19'를 그들의 구호에 포함시키기 시작하였다.

1964년 4월 20일에 건국대 학생들이 발표한 성명에는 "정부 당국은 5.16혁명이 4.19혁명의 연속이라고하는데 우리는 여기에대해 더이상 4.19정신을 이용, 모독당할수없다"<sup>239)</sup>는 문구가 들어갔다. 4월 19일 주변에 일어난 학생 데모에 대해 정부는 태도를 강경화해 데모 주모자 학생을 퇴학 처치

237) "4·19 네들", 『동아일보』, 1964년 4월 18일.

238) 천정환 외, 2005, p366-367: "「사월(四月)의사자(獅子)」들 명춘(明春)엔 어디로", 『조선일보』, 1960년 11월 27일.

239) "5.16이4.19 연속(連續)이란부당(不當) 건대(建大)서성명서(聲明書)", 『동아일보』, 1964년 4월 20일.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므로 3·24 학생데모와는 달리 운동 기간이 오래 가지는 않았다. 하지만 학생들은 자기들을 4·19를 토대로 5·16을 부정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5·16에 흡수된 4·19를 분리시키려는 첫 번째 시도였다.

<표IV-2> 1964년 4월 20일, 21일 한일회담 반대운동에서 사용된 구호

날짜	구호
4월 20일	-5월혁명의 자람은 4월혁명의 모독이다(청주공업고등학교 외침) -5월혁명 자람 말고 경제문제 해결하라(청주공업고등학교 외침) <sup>240)</sup>
4월 21일	-구속된 애국학생 즉시 석방하라(성균관대 플래카드) -5.16은 4.19의 연장일 수 없다(성균관대 플래카드) -부정부패 고개를 들면 4.19 다시 난다(성균관대) <sup>241)</sup>

출처: 『동아일보』 1964년 4월 20일, 21일 기사, 그 외는 각주 참조.

그리고 『사상계』 지식인들은 3·24와 4·19를 연결시켜 박정희 군사정권을 4·19 당시 이승만정부와 같이 '부정·부패'의 근본인 식으로 매일 보도했다. 이것은 '4·19의 재현' 작업이었다. 1964년 4월 21일에는 동국대에서 『사상계』 사장인 장준하와 중요 동인인 함석헌의 강연회가 있었고 강연회가 끝난 후 학생들은 데모에 참가했다. 사실 이 강연회는 한 달 전인 1964년 3월 24일에 연세대에서도 열린 것이었고 그 때도 강연이 끝난 후 학생들은 한일회담 반대 데모에 나갔다. 신문 보도만이 아니라 『사상계』도 여전히 대학생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대학생들의 행동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대학생에 의한 민주화 요구'라는 4·19는 아직 완전히 재구성된 것이 아니었다. 1964년 6월 2일에 다시 대규모 학생데모가 일어나면서 학생들은 박정희 정권이 '부정·부패'의 근본이며 민족정통성이 결여된 정권이라고 공격했는데 '4·19'라는 날짜는 그들의 구호에 다시 나타나지는 않았다.

240) "'516은 419 모독' 청주서 학생 데모", 『동아일보』, 1964년 4월 20일.

241) "성대생 천여명이 『데모』 동대생도 준비", "『데모』 지대를 가다", 『동아일보』, 1964년 4월 21일.

한일회담 반대운동의 흐름을 정리해보자면 먼저 5·16 쿠데타를 일으킨 군사정권이 권력 전도를 거부해 집권 연장을 시도한 데에서 시작한다. 한일회담이라는 과거의 식민지 지배자 일본과의 국교정상화를 두고 국민은 다시 분노했다. 1964년 4월 19일을 거치면서 5·16부터 4·19를 분리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것을 부채질한 자들은 『사상계』 지식인이었다. 그들은 4·19를 재구성해 4·19를 재현하려고 한 것이다.

『사상계』 지식인들이 4·19를 재현하려고 한 이유는 한일회담 반대운동의 중심적 논쟁을 한일회담 자체에 대한 비판, 즉 한일협정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감정을 민주주의 문제로 전환하며 박정희 정권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한일회담은 '반공'과 경제발전이라는 점에서 이익이 되는 일이었지만 국민감정을 격분시킬 우려가 상당히 높았고 1960년부터 이미 그것을 걱정하는 소리가 있었다. 한일회담 반대운동의 중심 문제가 박정희 정권의 정통성 결여에 집중되고 '민주화'를 위협하는 '독재 정권'이라는 도식이 성립한다면 박정희 정권이 배제됨으로써 '민주화'가 진행될 수 있었다. 거기서 유용했던 것이 바로 4·19였던 것이다. 즉 『사상계』 지식인들은 5·16이 흡수하려고 한 4·19를 이용하여 한국 사회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의도한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사상계』 지식인과 대학생 관계에도 회복의 징조가 보이기 시작했다.

이런 점에서 1964년의 한일회담 반대운동은 앞으로의 4·19 담론의 방향을 결정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일회담 반대운동은 결국 실패로 끝났고 일본과의 협정은 맺어졌다. 경제발전에 필요한 경제원조는 일본에서 받게 되었고 반공도 결과적으로 강화되었다. 대신 4·19의 '민주화 요구'라는 점이 박정희 군사정권 하에서 오히려 강화됨으로써 그것이 앞으로의 4·19의 대명사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 3. 3선개헌 반대운동에서 계승된 '4·19'

1960년 후반에는 박정희 정권은 검열, 유통 경로 탄압을 통해 지식인들의 활발한 활동을 억제하고 있었다. 1950년대부터 계속 지식들의 공론영역을 제공해온 『사상계』에 대해서 1969년 4월에는 다음과 같은 평가가 내려져 있었다.

한때 7만부(七萬部)를 돌파했던 『사상계(思想界)』는 발행인(發行人)의 교체로 전후하여 경영난에 봉착, 납본용(納本用)만을 찍어내면서 근근히 명맥(命脈)을 유지하는 형편. 민권(民權)투쟁에 앞장섰던 『사상계(思想界)』의 쇠퇴는 정치적(政治的)절규만으로 독자(讀者)를 계몽하던 시대(時代)가 끝나고 보다 구체적이며 분석적(分析的)인 내용을 원하는 독자(讀者)들의 요구(要求)를 반영한 것으로 종합지(綜合誌)의 앞날에 많은 교훈(教訓)을 남겼다고 할 수 있다.<sup>242)</sup>

결국 『사상계』는 1970년 9월 29일에 강제 폐간이 되었다. 그리고 신문에 대한 검열도 심해져 한국 사회에서의 자유로운 공론은 상실되었다. 그래도 1960년에 만들어지고 5·16 이후에 재구성된 4·19 담론은 아직 남아있었다.

이 장에서는 재생산된 4·19 담론이 어떻게 계승·강화되어갔는지를 추적하려고 한다. 한일회담 반대운동 후 다시 일어난 큰 반정부 운동은 1968년부터 1969년에 걸쳐 일어난 3선개헌 반대운동이었다. 공화당은 1969년에 박정희의 대통령 취임 3선을 가능케 할 목적으로 제6차 개헌을 추진했었다. 이 개헌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일요일인 1969년 9월 14일 새벽 2시에 국회 제3별관에 몰래 모여 국회의장의 사회로 찬성 122, 반대 0 표로 개헌안을 통과시켜버렸다. 일련의 불법 행위에 대해 대학생들은 개헌 반대 데모를 전개했다.

1969년 6월 23일에 경희대생 약 50명이 ‘3선 개헌 반대 시국선언문’을 낭독해서 결의문을 채택하였고, 6월 27일에는 고려대생 약 500명이 개헌 반대 데모를 하고 반대 운동은 전국적으로 파급되어갔다<sup>243)</sup>. 대학교 중심의 3선개헌 반대운동은 1년 이상 계속되었고 학생들에 의한 성토대회와 데모, 휴강, 개학과 데모의 재발 등 정신없이 사건들이 연달아 터졌다. 반대운동과 그것을 막아내려 한 정부 간의 대립이 반복되었다.

다수의 선언문들이 발표되었는데 그 중에서 유명한 것은 1969년 7월 17일에 발표된 “3선개헌반대범국민투쟁위원회선언문(三選改憲反對汎國

242) “탈바꿈하는 잡지계(雜誌界)”, 『동아일보』, 1969년 4월 11일.

243) 강준만, 『한국 현대사 산책 1960년대편』, 제2권, (서울: 인물과 사상사, 2004), p261.

民鬪爭委員會宣言文)”이다. 다른 선언문과 달리 이것은 1969년 8월에 발간된 『사상계』 제196호에서 2페이지에 걸쳐 본문 그대로 소개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내용은 반공에 대한 강한 의사표지부터 시작한다.

대한민국(大韓民國)이 자유민주체제(自由民主體制)를 확립신장(確立伸張)시켜야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역사(歷史)뿐 아니라 자유진영(自由陣營) 전체(全體)가 요구(要求)하는 지상명령(至上命令)이다...(중략)...우리가 외치는 반공(反共)은 반공(反共)을 위한 반공(反共)이 아니라 자유민주체제(自由民主體制)의 확립(確立)과 신장(伸張)을 위한 승공(勝共)인 것이며, 우리가 염원(念願)하는 통일(統一) 역시 자유민주체제하(自由民主體制下)에서 통일(統一)인 것은 우리 국민(國民)의 고귀(高貴)한 불문율(不文律)이다.<sup>244)</sup>

“3선개헌반대범국민투쟁위원회”가 반공을 강조한 이유는 1968년 1월 21일에 발생한 북한 공비 청와대 침투 사건, 이른바 ‘1·21사태’와, 이틀 후 23일에 발생한 푸에블로호 납치사건이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전자는 무장한 북한 공비 31명이 청와대를 기습하려 500미터 가까이 접근했다가 밤 10시경에 탐지되어 민간인을 포함한 30명의 사상자와 50명 가까이 부상자까지 낸 교전 끝으로 김신조 1명만이 체포된 사건이었다. 후자는 미군 해군장교와 민간인을 포함한 83명이 탄 미해군 소속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가 공해상에서 무장한 4척의 북한 초계정과 출동한 미그기 2대의 위협 아래 강제 납치된 사건이었다. 이 두 사건은 당시 한국 사회의 안보 의식에 큰 영향을 끼친 사건이었고 이것이 박정희의 3석개헌 추진에 이용되기도 했다. 그러므로 3선개헌 반대의 입장에서조차 안보 및 반공에 대한 확고한 의사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고 추측된다. 그리고 방공 의지표시는 4·19와도 연결되었다.

6·25(六·二五) 공산침략(共產侵略)에 대결(對決)하여 세계자유진영(世界自由陣營) 16개국(一六個國)의 젊은이들과 함께 우리 군민(軍民)이 피흘린 것도 이 자유민주(自由民主)의 제단(祭壇)이었으며 4월혁명(四

244) "3선개헌반대범국민투쟁위원회선언문(三選改憲反對汎國民鬪爭委員會宣言文)", 『사상계』, 196호, (1969년 8월), p132.

月革命)의 정신(精神)도 이 자유민주(自由民主)에의 헌신(獻身)이었다. 그러므로 이땅의 자유민주체제(自由民主體制)의 방향(方向)을 경시(輕視), 왜곡(歪曲) 또는 역행(逆行)하는 정권(政權)이나 운동(運動)은 결(決)코 용납(容納)될 수 없는 민족사(民族史)의 이단(異端)이다.<sup>245)</sup>

앞에서도 계속 본 것처럼 ‘반공’은 4·19가 일어난 1960년 당시부터 지식인들이 지키려 한 핵심 요소였다. 4·19에서 가장 위험한 요소는 ‘공산주의’였고 한시기 5·16을 인정한 것도 5·16세력이 공산주의를 막아낼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4·19 초기 담론을 만들어낸 『사상계』 지식인들에게는 위와 같은 ‘반공’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 표현은 호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었다. 그리고 선언문에서는 한일회담 반대운동 때와는 달리 4·19는 완전히 5·16에서 분리되어 있었고 이미 대립 세력으로 부각되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4·19와 5·16 양쪽이 자신을 ‘반공’ 세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 무엇을 둘러싸고 이견 대립할 수 있다는 것일까? 그것은 ‘민주주의’였다.

1969년 9월 3일에 서울대 투쟁위원회가 발표한 “우리의 투쟁은 멈출 수 없다”<sup>246)</sup>도 3선개헌 반대 학생운동의 선도적이고 대표적인 선언문으로 간주되어있는데 4·19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4월 혁명의 피는 어디로 갔는가? 4월의 정신은 언제 어디서 사라지고 말았는가? 우리는 5.16 찬탈이 후진국가에서 흔히 발생하는 반민주적 군부 쿠데타라는 것을 직감하면서도 4.19 혁명을 계승하기 위하여 등장하였다는 그들의 강변에 기대를 걸어 보기도 하였던 것이다.<sup>247)</sup>

5·16세력은 3선개헌이 ‘반공’을 위한 것이고 더구나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세력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면, 그 반대세력들은 3선개헌은 독재정권의 장기화를 초래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사를 파괴할 수 있는 위험한 선택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에 필요한

245) "3선개헌반대범국민투쟁위원회선언문", 사상계, 1969년 8월, p132.

246) 류근일, 『권위주의체제하의 민주화운동 연구: 1960~70년대 제도외적 반대세력의 형성과정』, (나남출판, 1997), p171.

247) 류근일, 1997, p171.

사상적 배경이 바로 4·19였다.

마지막에 정리하자면 3선개헌 반대운동을 통해서 4·19는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으로 인용되었던 동시에 '반공'이라는 이때까지 4·19에서 가장 약했던 부분도 보완하게 되었다. 4·19가 갖추게 된 '반공' 요소는 강경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었을수도 있으나, 이걸로 4·19 당시 통일 문제에서 나타난 친북적 태도는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추후 4·19 담론과 4·19를 토대로 한 운동들의 성격 결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4·19 담론에 관해서 기존연구들은 '민족주의'에 관한 논의가 약하다는 점은 단순히 5·16세력들의 통치하에서 '민족'이라는 요소를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4월혁명 당시 냉전 이데올로기의 안티테제로 등장한 민족주의, 민족통일의 논리나, 한일국교정상화반대운동에서 외세에 대한 아부와 굴종에 대한 안티테제로 등장한 민족주의는 분단극복의 계기로서 4월혁명을 바라보고 근대 민족운동사의 큰 사건으로 설정하였다. 4월혁명에 대한 이러한 시각은 파쇼적 유신체제하에서 민주화투쟁의 의의가 강조됨에 따라 다소 퇴색하는 감도 있었다<sup>248)</sup>

이러한 주장은 5·16과 4·19를 대립적 입장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5·16에 맞서기 위해 재구성된 4·19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 원래 초기에 내포하고 있었던 '통일' 혹은 '친북'적인 성격을 감추게 되었고 적극적이지 않더라도 소극적 '반공'을 택하게 되었다. 그들은 안티테제를 내부에 포함시켜버린 나머지 5·16의 반대 세력으로서 불완전한 상태에 빠졌다. 4·19는 3선개헌 반대운동을 통해서 1960년 『사상계』 지식인들이 원하는 완전한 모습대로 계승되었지만 오히려 한국 국내 정치 차원에서 반권력 또는 반정부적인 입장에 있는 자들의 사상적 기반을 일정한 틀 속에 놓아버려 현재까지 해결되지 못한 통일 문제를 결과적으로 초래하게 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

248) 박태순, 김동춘, 1991, pp103~104.

## V. 결론

'4·19'라는 날짜는 1960년부터 1961년 사이에 '4·19', '4·26', '4월(혁명)'의 세 가지에서 선택된 것이었다. 경제적 불안감, 공산주의, 민주주의, 부정·부패의 만연 등 당시 상황은 잡다하고 혼란스러웠고 통일적이지 못했다. 1960년 3월부터의 데모 열풍 속에서 한국사람 안에 싸인 분노는 어디서 폭발하고 어디로 갈지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웠고, 『사상계』 지식인들은 사람들에게 공산주의 개입의 위기를 인식시켰다. 『사상계』 지식인들은 공산주의를 지속적으로 규탄하면서 한국 사회의 혼란이 공산주의혁명의 방향으로 가지 못하도록 '민주화 요구'라는 틀을 미리 마련했다. 그리고 뒤늦게 등장한 대학생들을 운동의 주체로 삼아 '대학생 위주의 민주화 요구'라는 명제를 만들어냈다. 『사상계』 지식인들이 고등학생보다 늦게 등장한 대학생들을 선택한 이유는 대학생들이 가지는 조직 구성력에 주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즉 4·19 이후 예상될 질서의 혼란을 사로잡을 수 있는 조직력을 대학생들은 갖추고 있었고, 실제로 1960년 4월부터 생활계몽대 같은 조직을 구성해 질서 유지에 협력적인 집단으로 부각되었다. 그리고 대학생은 고등학생이나 무명의 시민들보다도 신분이 확실한 믿음직한 존재였다. 1960년 4월부터의 초기 단계에는 대학생 측에서도 『사상계』 지식인들이 마련해준 틀에 따라 적극적으로 움직였고 자기들을 '4·19의 영웅'이라고 주장하게 되었다. '4·19'란 날짜는 『사상계』 지식인과 대학생 사이의 연대감 속에서 형성된 상징적인 날이었다.

하지만 제2공화국이 성립되고 난 후 데모는 계속되었고 1960년 연말부터 결정적으로 대학생들은 『사상계』 지식인들의 예상을 벗어나기 시작했다. 그것이 '통일 문제'에 대한 논의였다. 대학생들이 통일 문제에 관심을 보이자 『사상계』 지식인 측에서는 이것을 강하게 비판했고 '대학생 위주의 민주화 요구'가 아닌 '국민 위주의 민주화 요구'로 규정을 바꾸어 '4·19'가 아닌 '4월혁명'이라는 호칭을 선호하게 되었다.

그런데 장면 정권에 대한 한국 사회의 불신이 높아지자 '한국 국민이 일으킨 혁명'이라는 명제는 현실과 맞지 않는 허한 말이 되고, 혼란한

사회 속에서 1960년 4월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상실되어있었다. 결국 공산주의의 교두보인 '민주화'라는 핵심 요소를 유지하기 위해 『사상계』 지식인들은 다시 '대학생 위주의 민주화 운동'인 '4·19'를 주된 호칭으로 선택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미 통일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던 대학생들과 『사상계』 지식인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가 생기고 있었다. 대학생들이 보여준 친북적 태도는 『사상계』 지식인들의 핵심 요소인 '반공' 또는 '자유민주주의'와는 상반된 것이었다. 그 때 마침 1961년 5월 16일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고 『사상계』 지식인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4·19와 실제 4·19의 괴리 문제는 일단 5·16에 흡수된 형태로 잠시 망각되었다.

그런데 5·16을 주도한 세력이 정권 이양을 연장해 한일회담을 추진하자 한국 국민들의 불만이 다시 쌓이고 폭발할 위기가 찾아왔다. 박정희를 비롯한 5·16 세력에 대한 분노는 식민지배자였던 일본과의 굴욕적인 협정이라는 민족의 정통성, 즉 대한민국의 정통성 문제에도 맞닿아 있었다. 그 때 『사상계』 지식인들은 4·19 때와 달리 이미 움직이고 있었던 대학생들을 4·19 때처럼 운동의 주체로 만들었고 4·19와 한일회담 반대운동을 중복시키고 재현하려고 했다. 이것을 받아들여 대학생들은 5·16에 흡수된 4·19를 분리하려는 시도를 시작했다. 하지만 결국 한일회담 반대운동은 어떤 성과도 얻어내지 못한 채 한일협정은 체결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을 계기로 4·19 담론은 앞으로의 방향을 '민주주의'로 집중화시켰다.

5·16세력은 한반도를 둘러싼 냉전 구조 속에서 '반공'을 주장해 3선 개헌을 통한 체제 강화에 나섰는데, 5·16에 대한 반대세력은 자신들을 '독재에 대한 민주주의'인 4·19의 계승자로 삼아 4·19와 '반공'을 연결시켰다. 『사상계』 지식인들이 원한 바와 같이 '방공'이자 '자유민주주의'라는 4·19상이 나타난 것이다. 4·19부터 약 10년의 세월을 걸쳐 '4·19'는 1960년대 지식인들이 마련한 초기 담론과 거의 같은 형태로 재생산되었다. 그리고 5·16은 4·19를 흡수하고 비판하고 정복하려 한 나머지 4·19를 유일하고 강력한 반대 세력으로 만들어버렸다.

'4·19'는 『사상계』 지식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한국사의 전설이다. 1960년에는 이승만 정권에 대한 분노가 무작정 폭발해 한국에 공산주의 위기가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민주화 요구'였다. 그리고 5·16 이후에는 박정희 군사 정권에 대한 분노가 폭발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위



기가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재생산된 '민주화 요구'였다. 즉 1960년에 일어난 실제 4·19와 『사상계』 지식인들이 만들어낸 4·19 초기 담론은 다른 것이었고, 실제 4·19와 5·16 이후 재생산된 4·19도 역시 다른 것이었다. 그런데 초기 4·19는 사회 현실과의 괴리 때문에 망각된 결과로 끝났지만, 5·16 이후 4·19는 대항 세력의 토대가 되었고 망각된 4·19 초기 담론에 가까운 형태로 재생산되었다.

『사상계』 지식인들은 1960년대 중반까지 대학생들을 '민주화 운동'의 핵으로 세워 한국 사람들로 하여금 열심히 싸운 대학생들의 희생을 '영웅'으로 인식시켰다. 5·16은 4·19의 영웅들을 없애려고 한 바람에 결국 이 영웅이 더욱 영웅스럽게 만들어내는 데 일조했다.

물론 대학생들이 한국의 민주화에 기여한 바는 컸고 본 연구는 그것을 부정할 의도는 없다. 하지만 4·19 및 4·19의 영웅은 만들어진 것이고 국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용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오늘 날 아무런 의문이 없이 4·19가 한국 현대사에서 고정적인 전설이 되고 무조건 대학생들의 희생에 칭찬을 아끼지 않는 한국사회의 인식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점을 제기하고 본 연구를 마치도록 한다.

## 참고문헌

### ■ 1차 자료

#### 1. 자료집

고려대학교 4·18의거 실록 편찬위원회 편, 고려대학교 4·18의거 실록.  
(고려대학교출판부, 2012).

대통령비서실 편, 『박정희대통령 연설문집』, 제1권 최고회의편, (서울: 대통령비서실, 1973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4월혁명사료총집발간위원회 편, 『4월혁명 사료총집』, 제1~8책, (서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0).

한국혁명재판사편찬위원회 편, 『한국혁명재판사(韓國革命裁判史)』, 제3편,  
(한국혁명재판사편찬위원회, 1962년)

혁민사편집실 편, 『(4월혁명 자료집) 4. 19의 民衆史(민중사)』 (학민사, 1984).

2·28 민주외거 40주년특별기념사업회 편, 『2·28 민주외거의 역사성과 세계성』 (대구: 2·28 민주외거 40주년특별기념사업회, 2000).

3·15의거기념사업회 편, 『(1960) 우리는 이렇게 싸웠다 : 3.15의거 증언록』 (창원 : 3·15의거기념사업회, 2010).

#### 2. 『사상계』 논문

고병익, "「혁명」에서 「운동」으로", 『사상계』, 제83호, (1960년 6월).

고정훈, "4·19 비화(秘話)", 『사상계』, 제158호, (1966년 4월).

김성식, "한국적민족주의(韓國的民族主義)", 『사상계』, 제62호, (1948년 9월).

---, "최근학생운동의 성격과 방향", 『사상계』, 제90호, (1961년 1월).

민석홍, "현대사(現代史)와 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 4월혁명(四月革命)의 이해(理解)를 위하여", 『사상계』, 제83호, (1960년 6월),

백낙준, "학생(學生)에게 기(寄)함", 『사상계』, 제23호, (1955년 6월).

부완혁 "혁명의 현단계와 금후", 『사상계』, 제83호, (1960년 6월).

신상초, "학생(學生)과 사회(社會)", 『사상계』, 제23호, (1955년 6월).

---, "이승만폭정의 종언: 4.26은 혁명의 종말이 아니라 시발점이다", 『사상계』, 제83호, (1960년 6월).

안병욱, "대학생활(大學生活)의 반성(反省)", 『사상계』, 제23호, (1955년 6월),

이동욱, "후진국(後進國)에 있어서 관료부패(官僚腐敗)의 원인(原因)-관련 자본형성(官權資本形成)을 주제(主題)로", 『사상계』, 제76호, (1959년 11월), p151.

---, "한일약수(韓日握手)의 필요성(必要性)", 『사상계』, 제88호, (1960년 11월).

조순승, "국토통일(國土統一)의 가능성(可能性)", 『사상계』, 제83호, (1960년 6월).

조좌호, "한국민족(韓國民族)의 자유투쟁사(自由鬪爭史)", 『사상계』, 제68호, (1959년 3월).

지명광, "5·16(五·一六)은 4·19정신(四·一九精神)의 계승(繼承)아니다", 『사상계』, 132호, (1964년 4월),

최문환, "사월혁명(四月革命)의 사회사적성격(社會史的 성격)", 『사상계』, 제84호, (1960년 7월).

한교석, "학원(學園)·학문(學問)의 자유(自由)", 『사상계』, 제23호, (1955년 6월),

함석헌, "국민감정(國民感情)과 혁명완수(革命完遂)", 『사상계』, 제90호, (1961년 1월),

### 3. 『사상계』 권두언

장준하, "우리의 저력(底力)을 더욱 튼튼하게 기르자-사·일구(四·一九) 여섯 돌을 맞으며", 『사상계』, 제158호, (1966년 4월).

"아아! 4·19의 榮光(영광)은 어디로?", 『사상계』, 제132호, (1964년 4월).

"인간(人間)과 인격(人格)", 『사상계』, 제1호, (1955년 4월).

"향촌(鄉村)의 재건(再建)을 위(爲)하여-1960년(年)을 맞으며", 『사상계』,

제78호, (1960년 1월).

"5·16혁명(五·一六革命)과 민족(民族)의 진로(進路)", 『사상계』, 제95호, (1961년 6월).

#### 4. 『사상계』 기사

"3선개헌반대범국민투쟁위원회선언문(三選改憲反對汎國民鬪爭委員會宣言文)", 『사상계』, 196호, (1969년 8월)

#### 5. 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경향신문』

#### 6. 인터넷 자료

국립4·19민주묘지, <http://419.mpva.go.kr/>.

서울역사박물관, [http://www.museum.seoul.kr/www/NR\\_index.do](http://www.museum.seoul.kr/www/NR_index.do).

4·19혁명기념도서관, <http://library.419revolution.org/>.

### ■ 2차자료

#### 1. 학술 논문

서은주, "제도로서의 "독자"; 1950년대 대학과 "교양" 독자", 『현대문학의 연구』, 제40권, (한국문학연구학회, 2010).

서중석, "4월혁명운동기의 반미·통일운동과 민족해방론", 『역사비평』, (1991년 가을),

서희경, "한국 헌법의 정신사: 헌법전문에 "4·19 민주이념 도입"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정치사상연구』, 제17집 제1호, (2011).

유창민, "1960년대 잡지에 나타난 대학생 표상-사상계의 대학생 담론을 중심으로-", 『겨레어문학』, 제47권, (겨레어문학회, 2011).

이광린, “한국(韓國)에 있어서의 민주주의(民主主義) 수용(受容)”, 『동아연구』, 제12권,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1987).

이용성, “『사상계』의 지식인과 잡지이념에 대한 연구”, 『출판잡지연구』, 제5권 제1호, (출판문화학회, 1977).

임대식, “1960년대 초반 지식인들의 현실인식”, 『역사비평』, 제65호, (2003년 겨울).

장준하, “죽음에서 본 4·19”, 『기독교사상』, 제167호, (대한기독교서회, 1972).

## 2. 단행본

강만길 외 지음. 『4월혁명론』. (한길사, 1983).

강준만, 『한국 현대사 산책 1960년대편』, 제1, 2권, (서울: 인물과 사상사, 2004).

고성국 외 지음, 『1950년대 한국사회와 4·19혁명』, (서울: 태암, 1991).

권보드래, 천정환 편, 『1960년을 묻다: 박정희 시대의 문화정치와 지성』, (서울: 천년의상상, 2012).

권보드래 외 지음, 『아프레겔 사상계를 읽다: 1950년대 문화의 자유와 통제』, (동국대학교출판부, 2009).

김건우, 『사상계와 1950년 문학』, (소명출판, 2003).

노연기 외, 『1960년대 한국의 근대화과 지식인』, (선인, 2004).

류근일, 『권위주의체제하의 민주화운동 연구: 1960~70년대 제도외적 반대 세력의 형성과정』, (나남출판, 1997).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편, 『한국민주화운동사1-제1공화국부터 제3공화국까지』, (파주: 돌베개, 2008).

박경수, 『재야의 빛 장준하』, (해돋이, 1995).

박세길, 『다시쓰는 한국현대사 2: 휴전에서 10·26까지』, (돌베개, 1989).

박태순, 김동춘 공저, 『1960년대의 사회운동』, (까치, 1991).

사상계연구팀 편, 『냉전과 혁명의 시대 그리고 『사상계』』, (서울: 소명, 2012).

사월혁명연구소 편, 『한국사회변혁운동과 4월혁명』, (서울: 한길사, 1990).

- 손호철, 『현대 한국정치: 이론과 역사 1945-2003』, (서울: 사회평론, 1975).
- 이용희 저, 노재봉 편, 『한국민족주의』, (서울: 서문당, 1977).
- 이재오, 『한국학생운동사 1945~1979년』, (파라복스, 2011).
- 이종오 외 지음, 『1950년대 한국사회와 4·19혁명』, (서울: 태암, 1991).
- 이형, 『조병옥과 이기붕: 제1공화국 정치사의 재조명』, (삼일서적, 2002).
- 이흥구, 『인간화와 정치』, (서울: 나남, 1996).
- 장준하선생추모문집간행위원회 편, 『민족혼·민주혼·자유혼: 장준하의 생애와 사상』, (서울: 나남, 1995).
- 조남현, 『한국현대소설의 해부』, (문예출판사, 1993).
- 지병문, 김용철, 천성권 공저, 『(현대)한국정치의 새로운 인식』, (서울: 박영사, 2001).
- 천정환, 김건우, 이정숙 공저, 『혁명과 웃음』, (서울: 엘피, 2005).
- 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한국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기』, (서울: 후마니타스, 2002).
- 한국역사연구회 4월민중항쟁연구반 지음, 『4.19와 남북관계』, (민연, 2000).
- 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형재사의 재인식』, 제10권, (서울:오름, 1998).

### 3. 소설책

- 최인훈, 『최인훈 전집1: 광장/구운몽』, (서울: 문학과지성사, 2008).
- , 『최인훈 전집2: 회색인』, (서울: 문학과지성사, 1991).

## Abstract

# A reinterpretation of the Korean April 19<sup>th</sup> Discourse:

Revolution for Democratization  
influenced by the “*Sasang-gye*” intellectuals

Ayana Shimokawa

Department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ttempts to reinterpret the Korean April 19<sup>th</sup> discourse for democratization. Most of the previous studies describe such discourse as 'the movement for democratization, led by college students, to overturn the dictatorial government of President Syngman Rhee in April 19<sup>th</sup> 1960 at Seoul.' Despite the diverse research designs of the such studies, the majority of them reach to this same conclusion.

However, the documents written by participants and spectators of the April 19<sup>th</sup> movement prove that between the members, there were not only college students but also many citizens from the poor class such as shoeshines and lumpen proletariats. Moreover, the countryside demonstrations that began in February of that year, were led by highschool students. And it was only two months later, when college students appeared in the scene. Despite these facts, the common belief is

that the movement itself was led exclusively by college students. This interpretation is explained by the fact that the newspaper and the academic journals of the period reported it like that, meaning that such interpretation was formed in an early stage of the movement.

Based on these facts, this study focuses on the consideration that college students led the April 19<sup>th</sup> movement and on the role of the intellectuals groups as generators of social explanations, using a process tracing method and paying special attention 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groups. Thus, although the spheres of action of the college students and intellectuals group were different, the study considers them as the key actors in the formation process of the April 19<sup>th</sup> discourse.

An analysis of the newspapers and academic articles demonstrate that the intellectual group labeled the April 19<sup>th</sup> movement as a movement for democratization. Further analysis shows that one of the key issues that differentiated both groups was on the issue of the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1960s South Korean intellectuals were mainly led by young scholars defected from the North to the South during the confusing period of the Korean War. They shared a strong anti-Communism ideology and wanted a liberal democracy to be established in South Korea. They believed that education was an important tool to accomplish the modernization of the country, that was, democratiz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to become a full member of the Free World during the Cold War era. They attempted to explain the 1960s situation as 'the movement for democratization' even before the April 19. This study focused on the once-powerful and popular academic journal "*Sasang-gye*" which was an academic communication space for South Korean



intellectuals in the meantime. Daily journals as "*The Chosun Ilbo*" and "*The Dong-a Ilbo*" are also relevant historical documents to rethink the April 19<sup>th</sup> discourse. This 1960s South Korean intellectual group is defined as "*Sasang-gye*" intellectuals.

This study traced the period from February 1960 to May 16<sup>th</sup> corp in 1961, to show the formation process of the early April 19<sup>th</sup> discourse. After that, it traced the anti-government movement of 1964 and 1969 in the period of Park Chung-Hee regime to show the process of early adopted discourses.

In short, the study argues that the specific date of April 19<sup>th</sup> was chosen to establish the democracy in South Korea by the "*Sasang-gye*" intellectuals with the aim of stabilized the domestic confused situation. Although during the first period, college students seemed to agree with the April 19<sup>th</sup> discourse, they soon became to pay attention to the reunification issue of the Korean Peninsula and began to participate in diverse demonstrations related to the issue after the April 19<sup>th</sup> movement. This brought about confli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and the "*Sasang-gye*" intellectuals, which became the basis for the anti-government movement after the May 16<sup>th</sup> corp.

The April 19<sup>th</sup> discourse was generated to end with the domestic political confusion, considered as dangerous since it could have opened the possibility for Communist intervention and threatened the ideal for democracy of the "*Sasang-gye*" intellectuals. The findings of this study attempts to re-focus the common interpretations regarding the April 19<sup>th</sup> movement as a pacific, one-way democratization movement and to re-think the role of the college students considered as historical heroes.

Keyword: April 19<sup>th</sup> movement, May 16<sup>th</sup>, Democracy,

Anti-Communism, Sasang-gye, Student movement, Reunification  
issue, Cold War

Student Number: 2011-22813